

# 전라북도 저소득 빈곤가구 복지수요분석 및 빈곤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진 | 이종섭 · 송용호

Jeonbuk Institute



# 전라북도 저소득 빈곤가구 복지수요분석 및 빈곤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저소득 빈곤가구 복지수요분석 및 빈곤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 이종섭 ; 공동연구: 송용호. — 전주 : 전북연구원, 2015  
p. ; cm. — (Jthink ; 2015-PR-09)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138-0 93330 : 비매품

지역 사회 복지[地域社會福祉]  
빈곤 문제[貧困問題]  
전라북도[全羅北道]

338.4-KDC6  
362.5-DDC23

CIP2016009208

## 연구진

---

연구책임 이 중 섭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송 용 호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관리 코드 : 15JU1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제언

### I. 연구개요

####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미 빈곤선 이하로 진입한 빈곤가구의 빈곤 탈출이 용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높은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미 빈곤층에 진입한 빈곤가구를 다양한 자활경로를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복지급여 대상을 선별하여 제공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으로의 빈곤 기준선의 변화는 복지대상 및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수혜대상자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관점에서는 지역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빈곤선의 변화에 따른 빈곤정책 대상의 규모를 미리 추정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급여체계 변화에 대응한 자활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을 통해 탈빈곤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빈곤선 변화에 따른 세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의 수혜자를 사전에 추정해 봄으로써 향후 소요될 재정투자를 미리 예측하여 단계별로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빈곤선 변화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라북도 빈곤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빈곤인구

의 규모추정과 수요분석을 토대로 빈곤정책의 방향과 세부 전략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연구방법 및 절차

- 전라북도 빈곤가구구의 복지수요분석을 위한 자료원은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와 전북 복지실태조사 1차(2014) 자료를 활용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조사문항이 복지욕구보다는 노동관련된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소득이외 문항에서도 별도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빈곤을 추정과 동시에 빈곤가구의 복지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전북연구원이 실시한 복지욕구조사를 분석하였음

〈표-1〉 빈곤가구 수요분석 자료원

조사영역	단위	전북 가구수	조사문항 구성	결과값 산출
한국노동패널 (15차)	가구	22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원천별 소득액</li> <li>• 소득원천별 소득유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원천별 가구소득</li> <li>• 중위소득 기준 소득액 및 가구수</li> <li>• 소득분위별 소득액 및 가구수</li> </ul>
전북복지실태조사 (1차)	가구	1,58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별 총소득액</li> <li>• 가구별 복지욕구</li> <li>• 복지수혜대상별 총 소득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형태별 빈곤가구 유형</li> <li>• 가구형태별 빈곤가구 수 및 총소득액</li> </ul>

- 아울러 본 연구는 빈곤가구의 복지욕구조사와 함께 빈곤선 변화에 따른 빈곤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급여형태별 수급자 규모를 추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자료들은 전북복지욕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분석하고 급여수준별 복지사업이나 복지사업별 복지재정 등에 대한 분석은 2015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초로 분석하였음



- 연구절차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빈곤정책의 동향을 탐색하고 타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빈곤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여 중앙의 빈곤정책 변화에 대응한 지역의 세부 정책 대안 제시
- 중앙의 소득 및 복지관련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빈곤선 변화에 따른 각 수급형태별 빈곤인구수와 복지사각지대를 추정하고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 구간별 복지수요를 분석하여 16개 시도와 전라북도의 빈곤실태 및 빈곤수요 파악

〈표-2〉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자료원

연구방법	분석 자료원
급여형태별 수급자 규모추정 복지사각지대 규모 추정	한국노동패널 15차 원자료 분석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2014) 원자료 분석 전라북도 자활참여자 분석
급여수준별 복지사업 분석 복지사업별 대상자 추정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서 분석 전라북도 사업명세서 분석
급여수준별 복지재정 분석 복지사업별 복지재정 분석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서 분석(타시도 비교분석) 전라북도 사업명세서 분석

- 그리고 전라북도 복지사업(약 600여개) 중 소득기준 복지사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복지사업의 소득형태별 대상 분류와 재정 현황을 검토하여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업 및 재정의 변화를 분석
- 빈곤정책의 동향과 빈곤선 변화에 따른 빈곤인구 추계 그리고 빈곤인구의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빈곤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탈빈곤 확대를 위한 빈곤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문헌연구와 빈곤육구분석 그리고 사례연구로 도출된 빈곤정책의 주요 방향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인 빈곤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 II. 이론적 배경

### □ 중앙정부 빈곤정책의 변화

- 지금까지 빈곤정책은 주로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편의상 정의되어왔지만 빈곤의 원인과 범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면서 빈곤정책은 주로 욕구별로 생계, 교육, 주거, 의료로 범주화하고 관련 정책의 영역으로는 자활, 직업 훈련, 소득공제, 사회보험지원, 취업알선,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세분화 됨
- 빈곤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빈곤 관련 선행연구는 빈곤정책의 한 영역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구하거나 근로빈곤계층 대상의 자활정책을 대상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탈빈곤정책으로 개념화된 연구에서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조세정책등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빈곤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여구로는 부족한 실정
- 빈곤정책의 큰 방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이태진 외(201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빈곤정책의 범주를 생계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교육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범주화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함께 대안을 제시
- 물론, 이태진 외(2012)의 연구는 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전술한 다섯가지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자립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논의함으로써 빈곤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자활정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도 빈곤정책의 범위를 생계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범주화하되 빈곤대책의 핵심인 자활정책을 중요한 비중으로 논의하고자 함
- 다만, 빈곤계층의 복지수요조사는 빈곤가구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빈곤가구의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빈곤가구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고, 전라북도의 경우 빈곤율이 높다는 결과적 자료는 많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논리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빈곤가구의 생활실태를 맞춤형 급여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으로 범주화하여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및 실태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에 따른 빈곤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시행 15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인구를 선별하고 해당 계층에 대해서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사실상 보충급여의 성격으로 발전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총 7개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자활지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에게 지원
- 빈곤인구의 증가에 따라 최근 기초생활보장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2007년 6.6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13년 8.7조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8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근로유인제도는 크게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현금급여 정책과 자활특례와 이행급여특례 등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활정책은 자활일자리 정책과 자립지원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자활근로, 자활근로, 희망리본, 취업패키지 등의 근로유인정책이 제공되고, 취업 및 창업 수급자의 경우는 희망키움 통장이나 생업자금 융자 및 지원 제도 등으로 보호함
-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가 81.5%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능력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18.5%를 차지하고 있음

## □ 중앙정부 빈곤정책 변화와 동향

- 빈곤정책이 기초생활보장가구에 집중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사실상 잠재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의 잠재빈곤층의 소득을 초과하는 역전이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된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선이었던 최저생계비가 2015년 하반기부터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되었고, 빈곤선 기준의 변경에 따라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크게 변화하여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복지기준선 변경에 따라 변경된 급여는 제도 시행시기인 2015년 7월부터 대폭 변화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 ‘으로 전환
-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생계급여는 관련법류에 따라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로 단계적 인상 추진하되 시행초기인 2015년에는 중위소득 28%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중위소득 30%까지는 보장하도록 자원배분원칙 설정
- 15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422만으로 심의의결하고 중위소득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22.2만원으로 중위소득 28%는 118.2만원, 중위 40%는 168.9만원, 중위 50%는 211.1만원 등으로 결정
- 보건복지부는 2016년 급여별로 변경된 가구당 선정기준액을 발표하였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29%로 2015년보다도 1%p증가한 4인 가구 기준 127.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15년도 중위소득 40%와 43%로 큰 변화가 없지만 금액은 의료급여 기준액이 4인 기준 175.6만원, 주거급여의 경우 188.8만원 그리고 교육급여 219.5만원으로 결정

- 빈곤선 변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특례규정도 새롭게 정비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이행급여 특례는 기존 최저생계비 하에서의 수급자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됨
- 자활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면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28%~50%로 차별화되었고, 자활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이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인해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전환에 따른 자활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활사업의 주된 지역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가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지역자활센터를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센터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탈빈곤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자활정책의 이 같은 변화는 지역자활센터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변경에 맞춰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기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도 지역자활센터가 18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자활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효용성에 대응하여 새로운 대안 모색 시급

## □ 빈곤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영향

-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구간으로 빈곤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인 빈곤인구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전환 후 급여에 따른 각 급여형태별 수급자 변동 폭을 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4개 급여의 수급자는 2014년 152만 명에서 2015년

- 개편 완료 시 176만 명으로 약 15.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완전한 전환 이후 현재의 제도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개별급여 체계 이후 빈곤인구를 산술적으로 추정해 보면,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의 10.3만명에서 22.4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폭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급여의 경우는 현재보다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자활참여자의 감소이며, 자활정책은 탈빈곤정책의 핵심이지만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취창업 관련 사업은 모두 고용노동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전달체계는 참여인력의 감소로 인해 상당한 기능 전환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재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며 첫째, 지역자활센터를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기관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것, 둘째, 지역자활센터를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인프라를 개방하여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셋째,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및 기능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임
  - 이 같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도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된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지역은 기능전환의 시범도시가 될 수 있고, 자활참여자가 100명이 넘지 않은 무주, 진안, 장수 등 군지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Ⅲ.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전체 인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라북도는 2004년 5.9%에서 2014년 4.6%로 1.3%p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여전히 전라북도가 법정 빈곤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07년도까지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었지만 2008년부터 전남을 추월하여 15개 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환되었으며,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4년 기준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인 2.6%보다도 약 2.0%p 더 높은 수준
-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분포 중 12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의 빈곤율과 44세-48세 청장년의 빈곤율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상회하는 연령대는 10세~19세 아동청소년, 50세 이상 청장년 및 노인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향후 추이를 회귀식을 통해 추정해 보면,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4.47%에서 2018년 4.42%정도로 추정되며, 전라북도의 빈곤율을 정책적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빈곤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46,391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이들 지역 중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2004년보다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2004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0,925명이었

지만 2014년에는 21,666명으로 약 3.54%가 증가함

- 한편, 전라북도의 자활참여자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총 1,587명이고 이 중 자활사업단에는 1,380명, 자활기업은 20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별로는 전주지역이 337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다음으로 익산 248명, 군산 1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활참여자가 가장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권역을 제외하면 농촌지역은 자활참여자가 100명 내외인 곳이 대부분임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의 지역은 자활참여자가 60명이 채 되지 않아 자활참여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
- 특히 자활사업 관련하여 취창업지원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함.

## IV. 전라북도 빈곤가구 복지수요 분석

### □ 일반 빈곤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 전라북도의 중위소득 이하 빈곤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중위소득 50%미만의 경우 남자는 13.8%였지만 여자는 23.8%로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가구주의 빈곤율이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동부가 21.8%, 읍부가 13.2% 그리고 면부가 23.9% 수준임
-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빈부격차의 문제(49.4%), 복지시설 부족문제(46.1%), 의료시설 부족문제(41.2%), 차별 문제(38.3%), 주거환경 열악(37.5%) 등의 순이었고 특히, 복지시설의 부족과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주거환경의 열악성에 대해서는 심각성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음



- 빈곤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보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계층은 14.6%였고, 의료비지원 20.4%, 물품지원 14.4%, 주거복지 9.3% 등의 순이었으며, 이용율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심시정서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의 사업

## □ 여성 빈곤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 전라북도 여성의 학력은 고졸이 5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졸 34.1%, 중졸 9.4% 등의 순이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서는 고졸이 37.8%로 가장 높았고, 대졸은 35.4%, 중졸 15.7%, 초졸 9.3% 등의 순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우 대졸의 학력도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가구가 35.4%에 이르고 있는 부분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지역내 여성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체적으로는 문화 및 여가활동 서비스가 37.7%로 가장 많았으나, 빈곤가구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서비스의 필요성이 50.4%에서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았음
-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여성의 경우 31.0%로 매우 높았지만 빈곤여성의 경우 중위소득 28%이하 가구 12.9%로 가장 높고 그 외에는 9.4% 정도 수준이었고, 직장을 그만 둔 시기에서는 빈곤여성의 경우 만3세에서 취학전이 가장 높았지만 일반 여성의 경우 임신시와 출산 및 출산휴가 후 그만 둔 경우가 각각 34.3%,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취학전아동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 보육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빈곤가구의 약 87% 이상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45.2%만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보육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해서는 빈곤가구의 상당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남

- 유치원의 경우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반 보육아동양육 가구의 경우 63.3%정도만 충분치 않다고 응답해 유치원의 설치에 대해서도 빈곤 영유아 가정은 설치율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반적으로 영유아 전용 도서관의 확대가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의 경우에는 영유아와 부모의 공동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34.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43%까지의 빈곤영유아 가구는 영유아 전용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고, 일반 영유아 가정의 경우 영유아와 부모의 공동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는 중위소득 50%의 경우 선생님의 자질이 58.3%로 가장 많았고, 그 이하의 소득기준 가구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96.7% ~ 100%로 가장 많이 나타남

## □ 초등학생 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 빈곤 초등학생의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공부방,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상담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순으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용경험에 있어서는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높은 10% 이내의 낮은 이용율을 보였고, 인지율에 있어서도 빈곤 초등학생 가구의 경우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 이내였음
-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체적으로는 방과 후 학습지도가 29.9%로 가장 많았으나 빈곤가구별로는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적게는 77.6%에서 많게는 89.2%까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초등학생자녀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는 문화여가활동지원이 전체적으로 36.4%로 가장 많았고, 2순위 또한 문화여가활동지원이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초등학생과 일반 아동 모두 문화활동 지원이 가장 높았지만 빈곤 초등학생의 문화활동 여가지원에 대한 수요가 일반 아동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의 경우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예술교육,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 초등학생의 경우 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예술교육, 체육교실, 학업관련 상담서비스, 자녀진로지도서비스,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이 다른 복지서비스의 유형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중고등학생 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 중고등학생관련 복지시설의 인지도는 중위소득 28% 빈곤가구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도서관 등에 대한 인지도가 53.8%~75.0%까지로 높게 나타났고,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수요 또한 80%~90%로 높았음
- 중고등학생자녀 양육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중위소득 28% 가구에서는 문화 및 취미활동서비스가 38.5%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에서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향상 서비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참고로 일반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상담이 32.6%로 가장 높고 문화취미 활동 23.5% 등의 순임
- 중고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중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의 경우 중위소득 28% 가구에서 66.7%로 이용경험이 가장 많았고, 필요성 또한 72.7%로 다른 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한편, 외국어교육 서비스의 경우 빈곤가구의 이용경험이 16.7%로 중위소득 28% 가구에서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인 40.5%에 비해서는 이용경험이 낮은 반면,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은 83.3%에서 많게는 94.4%로 전체적인 평균 77.8%보다 높게 나타남

## □ 노인 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 빈곤노인의 가구형태로는 전체적으로 독거가구의 형태가 26.0%로 가장 많았고 빈곤가구별로도 46.4%에서 52.8%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 형태 별로는 일반수급가구 형태가 빈곤가구별과 전체적인 수준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독거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각각 46.4%, 30.1% 등으로 매우 높은 빈곤수준을 보였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90%이상을 상회하며 매우 높았고, 향후 이용의향 또한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수요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무료급식 등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이용수요가 이용하고 싶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교육서비스의 이용수요에 있어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가 이용하고 싶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으로는 빈곤노인이 일반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의 경우 빈곤노인과 일반노인 간에는 큰 편차가 없었으며 원하는 일자리 분야의 경우 빈곤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단순노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다만 원하는 급여수준에서는 일반 노인의 경우 월평균 132.1만원을 원하고 있는 반면, 중위소득 50%의 노인의 경우 180.2만원을 원하고 있어 일반 노인보다는 빈곤노인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원하고 있었음
-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빈곤노인과 일반노인 간의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빈곤노인의 경우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방문간호, 가사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반노인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고,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여가문화활동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빈곤노인이 일반노인보다는 그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 장애인 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인지도가 60%대로 다른 시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향후 이용수요 또한 50%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녀양육 및 교육서비스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관련 서비스의 인지여부에 있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61.4%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등의 인지도는 50%미만으로 다소 낮았음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40%를 상회하며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 또한 5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빈곤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으로는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안마 등 기초보건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등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다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기구 렌탈이나 취업 및 직업 상담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는 다른 복지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율은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35%~42.9%까지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으로는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가 중위소득가구 43% 이하 가구에서 8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운동처방서비스,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이 77.8%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V. 전라북도 빈곤정책 분석

### □ 빈곤기준별 빈곤정책 분석

- 빈곤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정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정책의 유형은 크게, 건강 및 의료 지원분야, 교육분야, 기초안전망 분야, 돌봄분야, 자활 및 고용지원분야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3〉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구분	사업내용
건강 및 의료지원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관리,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교육/문화	문화통합이용권
기초안전망	교육급여, 생계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긴급)사회복지시설 이용권, (긴급)생계지원, (긴급)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장제비지원, (긴급)주거지원, (긴급)해산비지원, 양곡할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의료그병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돌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소득보장/조세감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리누리),
자활 및 고용지원	내일행복지원단, 일일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근로장려금,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 모니터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소상공인지원(옹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취약계층전담취업지원사업,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통장
정보통신/방송지원	사랑의 그린PC보급

---

주거/에너지/교통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주거약자개량자금지원, 준주택지원(옹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 등 기존임대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공급,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국민임대아파트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복지(고효율조명기기), 연탄현물(쿠폰)보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주택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보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증, 풍수해보험료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

- 전라북도에서는 빈곤정책이 대부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빈곤정책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중위소득 28%는 최저생계비 74%수준이고, 중위소득 40%는 최저생계비 100%수준이고 중위소득 43%와 중위소득 50%는 각각 최저생계비 108%와 120%수준
- 이 같은 기준으로 관련 사업을 분류해 보면, 중위소득 43% 미만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기초수급자 양육할인,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총 9개 사업에 2,8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복지사업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41개 사업이고 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16개 사업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총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기준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제공기준의 절차 마련이 필요

## □ 전라북도 자원별 빈곤정책 분석

-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사업과 자활지원사업 등은 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다만,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관연계사업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빈곤관련 정책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소득지원사업은 주로 국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약 2,583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자활지원사업은 국고사업과 자체사업으로 506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총 빈곤예산은 약 3,448억원이다.
- 전라북도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중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총 99개 사업에 약 3,44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복지재정 규모인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상 별로는 가장 큰 규모에 해당

## Ⅵ. 전라북도 빈곤정책 개선방향

### □ 생애주기별 빈곤정책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빈곤가구가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낮은 소득을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고, 가구원의 상당수는 낮은 학력과 주기적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정책은 빈곤계층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빈곤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생애주기의 빈곤의 위험에 따른 관련 정책의 생애주기별 대응으로 5세미만의 영유아시기 그리고 노동시장의 진입과 실업이 반복되는 30대와 40대의



청장년층 은퇴가 이루어져 소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청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지원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임

-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해야 하고 유형화의 기준은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50대의 부모세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50대 장년층의 탈수급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은 빈곤선 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될 복지사각지대를 추정하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빈곤선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상당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이행급여제도의 신설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제도 이전 생계급여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제도 변화 이후 수급자로 탈락한 계층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
-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앞서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행정 단위의 집중 발굴 같은 현재의 노력과는 다른 체계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빈곤선 변화에 따라 각각의 복지급여의 탈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복지사각지대는 지원에 앞서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군구에 이어 동 단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라북도의 경우 동 단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동단위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 성별·연령별·지역별 빈곤주기에 따른 빈곤정책 차별화

- 생애주기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정책의 생애주기별 대응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시기 그리고 노동시장의 진입과 실업이 반복되는 30대와 40대의 청장년층 은퇴가 이루어져 소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청장년층이 위험한 시기로 분류되며,
-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남성과는 달리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여성빈곤가구에 대한 재취업 등의 탈빈곤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
- 여성의 탈빈곤정책으로는 다른 일자리 연계보다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흡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전라북도는 높은 빈곤율로 인해 돌봄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돌봄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일자리 연계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망사업을 선정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 취득과정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0세 이하 아동의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정읍, 남원, 김제, 그리고 장수와 임실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다른 정책보다도 아동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복지수요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급식비와 학업지원이 요구됨
-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빈곤은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지만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의 지역이 이들 계층의 빈곤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이들 지역은 가구총소득이 도시권역보다 다소 낮아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지원이나, 방과후 돌봄 인프라가 취약해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충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장년층의 빈곤율은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은 무엇보다도 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 그 방안으로 복지수요는 높지만 복지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한 협동조합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지역임
-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은 14개 시군의 특정지역의 현상이 아닌 모든 지역이 포괄적으로 해당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화보다는 보편적인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노인적합형 일자리개발이 필요

## □ 자활전달체계 개편 및 자활기금 활성화

- 자활전달체계의 핵심인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자활센터가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된 지역은 축소 혹은 광역화를 통한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전라북도 자활참여자는 현재 수준의 최소 1/3~1/2.5 감소가 예상되어 자활전달체계 개편은 시급한 과제임
- 전라북도의 지역자활센터는 기본원칙으로 시군 단위에 2개소 이상 설치된 지역의 경우 통합을 통한 규모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도 경과형 일자리 program과 취업연계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육성 프로그램으로 구조화해야 하며 지역자활센터도 지역여건별로 세 가지 유형 내에서 차별화해야 함
-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는 통합을 통한 특성화를 추진하고 군산과 익산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둘째, 지역자활사업을 고용복지통합센터로 일원화하여 고용과 복지과 윈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보건복지통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고용복지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진안, 무주, 장수 등의 군지역은 권역형으로 설치하되 거점기관 외 연계기관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셋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자활기금의 대여 및 상환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전라북도는 최근 자활기금의 대여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대역이자도 연 2%에서 1%로 인하하였으나 자활기금 활용의 가장 큰 어려움인 연체이자는 현재 15%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10%로 하향조정해야 함

## □ 창업위주 탈빈곤정책 지양 및 사회서비스 연계형 일자리 확대

- 전라북도의 탈빈곤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창업위주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형이 확대되어야 함
- 창업위주의 정책은 일반 시장과의 교란으로 인해 시장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일반 계층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전라북도의 탈빈곤정책은 창업위주의 정책을 억제하고 높은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취업연계형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탈빈곤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그 실적 평가를 기초로 관련 예산을 조정해야 함
- 창업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의 일부를 빈곤계층의 직업훈련 예산으로 전환하여 복지수요에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훈련예산으로 활용하여 빈곤계층의 취업을 통한 탈빈곤으로 유인해야 함

## □ 긴급복지지원조례의 제정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 빈곤가구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관련법의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빈곤가구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임
-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위기상황 이외의 경우 반드시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역상황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
- 만약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의 긴급복지지원은 국가가 정한 법률의 범주내에서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도민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는 긴급복지지원조례의 제정을 통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위임한 위기상황의 범주를 전라북도의 빈곤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의 긴급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함

## Ⅷ. 결론 및 요약

- 전라북도의 법정빈곤율은 4%를 상회하고 있고,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20%에 근접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시책이 대부분 빈곤선을 기준으로 급여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복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빈곤정책의 대부분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대부분이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빈곤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빈곤선의 변화에 따른 중위소득 구간별로 빈곤계층은 어떤 복지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라북도 빈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빈곤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임
- 본 연구는 이 같은 빈곤정책의 동향에 발맞춰 전라북도 빈곤인구의 현황 및 빈곤계층의 양상을 16개 시도와 비교분석하고, 전라북도의 빈곤이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 지를 분석함
-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준과는 달리 중위소득의 4가지 구간별로 빈곤계층의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각 층위별로 빈곤계층이 가지고 있는 복지욕구를 비교분석함 생애주기별로 빈곤계층의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크게 다섯 가지의 빈곤정책 방향을 제시함

- 첫째, 빈곤정책을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게 유형화하고 각 생애주기별 빈곤 계층의 욕구에 대응한 빈곤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둘째,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
- 셋째, 성별·연령별·지역별 빈곤주기에 따른 빈곤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특히 높은 아동빈곤율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세대의 탈빈곤 확대를 위해 청장년층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직업훈련의 분야로는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함
- 넷째, 자활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자활전달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며, 자활참여자의 감소와 고용복지통합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정책 동향에 대응하여 1개 시군에 2개 이상 설치된 지역자활센터는 광역화와 통합화를 추진하고 군단위 지역자활센터는 권역형 고용복지통합센터의 설치를 통해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섯째, 창업위주의 탈빈곤정책을 지양하고 취업중심의 탈빈곤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라북도의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은 창업위주의 탈빈곤으로 인해 심각한 시장교란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시장교란은 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의 빈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빈곤가구의 고용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중심의 탈빈곤정책이 필요
- 여섯째,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한 위기가정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의 빈곤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상황의 제시를 통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빈곤정책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기준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 무국내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신규사업개발시 관련부서가 사업의 논의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빈곤정책의 목적, 대상, 재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목 차

I. 서론 .....	1
II. 연구방법 및 한계 .....	3
1. 선행연구 검토 .....	5
2. 연구방법 및 절차 .....	10
III. 이론적 배경 .....	13
1. 중앙정부 빈곤정책의 변화 .....	15
2.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및 실태 .....	17
3. 중앙정부 빈곤정책 변화와 동향 .....	23
4. 빈곤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영향 .....	31
IV.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37
1.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39
V. 전라북도 빈곤가구 복지욕구 현황 .....	65
1. 전라북도 빈곤인구 추정 .....	67
VI. 전라북도 빈곤가구 복지수요 분석 .....	75
1. 전라북도 빈곤가구 추정 및 재정현황 .....	77
2. 전라북도 빈곤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1
VII. 전라북도 빈곤정책 분석 .....	143
1. 빈곤기준별 빈곤정책 분석 .....	145
2. 전라북도 재원별 빈곤정책 분석 .....	153

<b>VIII. 전라북도 빈곤정책 개선 방향</b> .....	<b>157</b>
1. 생애주기별 빈곤정책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159
2.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161
3. 성별·연령별·지역별 빈곤주기에 따른 빈곤정책 차별화 .....	164
4. 자활전달체계 개편 및 자활기금 활성화 .....	167
5. 창업위주 탈빈곤정책 지양 및 사회서비스 연계형 일자리 확대 .....	170
6. 긴급복지지원조례의 제정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	172
<b>IX. 결론 및 요약</b> .....	<b>175</b>
<b>참고문헌</b> .....	<b>181</b>



## 표 목 차

〈표Ⅱ-1〉 빈곤관련 선행연구 .....	5
〈표Ⅱ-2〉 빈곤선 원자료 분석 자료원 측정변수 및 전복 적용가능성 .....	7
〈표Ⅱ-3〉 빈곤가구 수요분석 자료원 .....	8
〈표Ⅱ-4〉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자료원 .....	9
〈표Ⅲ-1〉 2015년 욕구별 급여 선정의 새로운 기준선 .....	17
〈표Ⅲ-2〉 2007~20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산 추이 .....	19
〈표Ⅲ-3〉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중기재정계획 .....	20
〈표Ⅲ-4〉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 .....	21
〈표Ⅲ-5〉 탈빈곤 개념 .....	22
〈표Ⅲ-6〉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 내용 .....	23
〈표Ⅲ-7〉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24
〈표Ⅲ-8〉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	24
〈표Ⅲ-9〉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 .....	25
〈표Ⅲ-10〉 일반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	25
〈표Ⅲ-11〉 취약계층 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	26
〈표Ⅲ-12〉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26
〈표Ⅲ-13〉 특례제도 변경사항 .....	27
〈표Ⅲ-14〉 자활정책 예산추이 .....	30
〈표Ⅲ-15〉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추이 .....	31
〈표Ⅲ-16〉 소득기준에 의한 복지사업 현황 .....	33
〈표Ⅳ-1〉 주요국가 및 기관의 상대적 빈곤선 .....	39
〈표Ⅳ-2〉 주요국가 및 기관의 상대적 빈곤선 .....	40
〈표Ⅳ-3〉 중위임금평균소득빈곤율 현황 .....	41
〈표Ⅳ-4〉 상대적 빈곤율 추이(단위 : %) .....	41
〈표Ⅳ-5〉 1990년~2012년 10분위 소득 대비 1~3분위 소득비율 .....	42
〈표Ⅳ-6〉 우리나라 가구빈곤 수준 현황(2006~2012년) .....	43
〈표Ⅳ-7〉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44
〈표Ⅳ-8〉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45
〈표Ⅳ-9〉 차상위 우선돌봄 현황 .....	45

〈표Ⅳ-10〉 전라북도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47
〈표Ⅳ-11〉 전라북도 지역별·세대별 빈곤인구 현황 .....	48
〈표Ⅳ-12〉 전라북도 지역별·세대별 빈곤인구 현황 .....	50
〈표Ⅳ-13〉 가구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51
〈표Ⅳ-14〉 전라북도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52
〈표Ⅳ-15〉 가구원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53
〈표Ⅳ-16〉 주거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54
〈표Ⅳ-17〉 주거상태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54
〈표Ⅳ-18〉 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 .....	55
〈표Ⅳ-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 .....	56
〈표Ⅳ-2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 .....	56
〈표Ⅳ-21〉 보장기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 .....	57
〈표Ⅳ-22〉 소득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단위 : %) .....	58
〈표Ⅳ-23〉 재산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단위 : %) .....	59
〈표Ⅳ-24〉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향후 추정 .....	60
〈표Ⅳ-25〉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추이 및 증감률 .....	60
〈표Ⅳ-26〉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5.6.30.현재) .....	61
〈표Ⅳ-27〉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추이 및 증감률 .....	62
〈표Ⅳ-28〉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 현황 (2014년12월말, 단위 :명) .....	62
〈표Ⅳ-29〉 지역자활센터 현황 .....	63
〈표Ⅳ-30〉 자활기업현황 .....	64
〈표Ⅴ-1〉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	67
〈표Ⅴ-2〉 소득원천별 연평균 소득 현황(단위 : 만원) .....	68
〈표Ⅴ-3〉 소득원천별 연평균 소득 현황(단위 : 만원) .....	69
〈표Ⅴ-4〉 전라북도 소득분위별·소득원천별 연평균 소득 .....	70
〈표Ⅴ-5〉 전국 소득분위별 연평균 소득 .....	71
〈표Ⅴ-6〉 전국 소득분위별 구성비 .....	71
〈표Ⅴ-7〉 전국 소득분위별 구성비 .....	72
〈표Ⅵ-1〉 중위소득 기준별 빈곤인구 비율 .....	77
〈표Ⅵ-2〉 전라북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 빈곤인구 비율 .....	78
〈표Ⅵ-3〉 전라북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 빈곤인구 비율 .....	78
〈표Ⅵ-4〉 전라북도 가구원수별 · 소득형태별 평균소득 .....	79

〈표Ⅵ-5〉 전라북도 기초수급형태별 빈곤가구 유형 .....	79
〈표Ⅵ-6〉 전라북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 빈곤인구 비율 .....	80
〈표Ⅵ-7〉 중위소득 기준별 연평균소득 .....	80
〈표Ⅵ-8〉 전라북도 인구학적 특성별 빈곤인구 비율 .....	81
〈표Ⅵ-9〉 전라북도 가구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	81
〈표Ⅵ-10〉 전라북도 가구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	82
〈표Ⅵ-11〉 한 달 평균 지출액 .....	83
〈표Ⅵ-1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	84
〈표Ⅵ-13〉 현재 생활여건에 대한 평가 .....	85
〈표Ⅵ-1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	87
〈표Ⅵ-15〉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 .....	88
〈표Ⅵ-16〉 지역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88
〈표Ⅵ-17〉 소득분위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	89
〈표Ⅵ-18〉 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	89
〈표Ⅵ-19〉 수급자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	90
〈표Ⅵ-20〉 사회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이용만족도 .....	91
〈표Ⅵ-21〉 전라북도 여성 빈곤가구의 교육수준 .....	92
〈표Ⅵ-22〉 전라북도 여성가구 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	92
〈표Ⅵ-23〉 여성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	93
〈표Ⅵ-24〉 여성관련 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 .....	94
〈표Ⅵ-25〉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95
〈표Ⅵ-26〉 자녀양육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 .....	95
〈표Ⅵ-27〉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 .....	96
〈표Ⅵ-28〉 근로 여부 및 근로희망 .....	96
〈표Ⅵ-29〉 근로희망 업종 .....	97
〈표Ⅵ-30〉 희망급여 및 희망고용형태 .....	97
〈표Ⅵ-31〉 새직장 선택시 중요도 .....	98
〈표Ⅵ-32〉 보육시설 설치 여부와 안심정도 .....	99
〈표Ⅵ-33〉 미취학 아동대상 복지시설이용시 불편한 점 .....	100
〈표Ⅵ-34〉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0
〈표Ⅵ-35〉 보육시설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	100
〈표Ⅵ-36〉 초등학교생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	101
〈표Ⅵ-37〉 취학아동대상 복지시설이용시 불편한 점 .....	102
〈표Ⅵ-38〉 취학아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02

〈표Ⅵ-39〉 아동대상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의향 .....	103
〈표Ⅵ-40〉 초등학생자녀가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	104
〈표Ⅵ-41〉 초등학생자녀 방과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	104
〈표Ⅵ-42〉 초등학생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	105
〈표Ⅵ-43〉 초등학생자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1순위 .....	105
〈표Ⅵ-44〉 초등학생자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2순위 .....	106
〈표Ⅵ-45〉 초등학생자녀의 하루평균 보내는 시간 및 용돈 .....	106
〈표Ⅵ-46〉 초등학생자녀 가구 형태 .....	106
〈표Ⅵ-47〉 초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정도 .....	107
〈표Ⅵ-48〉 초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정도 .....	108
〈표Ⅵ-49〉 사회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것 .....	108
〈표Ⅵ-50〉 중고등학생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	109
〈표Ⅵ-51〉 중고등학생대상 복지시설이용시 불편한 점 .....	110
〈표Ⅵ-52〉 중고등학생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10
〈표Ⅵ-53〉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내는 시간 - 1순위 .....	111
〈표Ⅵ-54〉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내는 시간 - 2순위 .....	111
〈표Ⅵ-55〉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호자 유무 .....	112
〈표Ⅵ-56〉 중고등학생자녀의 하루평균 보내는 시간 및 용돈 .....	112
〈표Ⅵ-57〉 중고등학생자녀 가구 형태 .....	112
〈표Ⅵ-58〉 중고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정도 .....	113
〈표Ⅵ-59〉 전라북도 노인 빈곤가구의 교육수준 .....	115
〈표Ⅵ-60〉 전라북도 노인가구 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	115
〈표Ⅵ-61〉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본 일상생활 .....	116
〈표Ⅵ-62〉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타 일상생활 .....	117
〈표Ⅵ-63〉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 - 1 .....	118
〈표Ⅵ-64〉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 - 2 .....	118
〈표Ⅵ-65〉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 - 3 .....	119
〈표Ⅵ-66〉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	120
〈표Ⅵ-67〉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	121
〈표Ⅵ-68〉 일자리 없는 경우 희망일자리 .....	122
〈표Ⅵ-69〉 일자리 있는 경우 월평균 급여 .....	122
〈표Ⅵ-7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받지 않는 이유 .....	123
〈표Ⅵ-7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및 부담비용 .....	123
〈표Ⅵ-7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	123

〈표Ⅵ-73〉 노인복지향상위해 필요한 서비스 .....	124
〈표Ⅵ-74〉 노인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	125
〈표Ⅵ-75〉 노인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	126
〈표Ⅵ-76〉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	127
〈표Ⅵ-77〉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	128
〈표Ⅵ-78〉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표계속) .....	129
〈표Ⅵ-79〉 장애인 빈곤가구의 교육수준 .....	130
〈표Ⅵ-80〉 장애인가구 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	130
〈표Ⅵ-81〉 장애로 인한 어려움 .....	131
〈표Ⅵ-82〉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발생 비용 .....	131
〈표Ⅵ-83〉 일상생활 도움 및 그에 따른 월 평균 지출 비용 .....	131
〈표Ⅵ-84〉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	132
〈표Ⅵ-85〉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	133
〈표Ⅵ-86〉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	134
〈표Ⅵ-87〉 장애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	135
〈표Ⅵ-88〉 장애인복지 향상위해 필요한 서비스 .....	135
〈표Ⅵ-89〉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본 일상생활 .....	136
〈표Ⅵ-90〉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타 일상생활 .....	137
〈표Ⅵ-91〉 일자리 없는 경우 희망일자리 .....	138
〈표Ⅵ-92〉 일자리 있는 경우 월평균 급여 .....	138
〈표Ⅵ-93〉 장애인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및 필요성 .....	139
〈표Ⅵ-94〉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	140
〈표Ⅵ-95〉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표계속) .....	141
〈표Ⅶ-1〉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	145
〈표Ⅶ-2〉 복지여성보건국 국고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	146
〈표Ⅶ-3〉 복지여성보건국 기금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	147
〈표Ⅶ-4〉 복지여성보건국 지특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	148
〈표Ⅶ-5〉 복지여성보건국 도비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	148
〈표Ⅶ-6〉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사업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	149
〈표Ⅶ-7〉 복지여성보건국 분과별 사업분석 .....	150
〈표Ⅶ-8〉 복지여성보건국 분과별 사업분석 .....	151
〈표Ⅶ-9〉 복지여성보건국 분과별 사업분석 .....	152
〈표Ⅶ-10〉 전라북도 빈곤정책 세부 내용 .....	153

〈표Ⅶ-11〉 빈곤정책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154
〈표Ⅶ-12〉 전체복지사업예산 (단위: 천원) .....	154
〈표Ⅶ-13〉 지역별 빈곤예산 분석(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기준) .....	155
〈표Ⅷ-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빈곤정책의 유형 .....	159
〈표Ⅷ-2〉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빈곤정책의 유형화 .....	160
〈표Ⅷ-3〉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교(2013년 4인 기준) .....	161
〈표Ⅷ-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빈곤인구 및 복지사각지대 추정인구 비율 .....	162
〈표Ⅷ-5〉 저소득대상 사업 현황 .....	163
〈표Ⅷ-6〉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주요 사업별 자격요건 .....	165
〈표Ⅷ-7〉 전라북도 지역자활센터 조정방안 .....	168
〈표Ⅷ-8〉 자활기금 조례 전국 17 시도비교 .....	169
〈표Ⅷ-9〉 종사자의 지위별 취업자 현황(단위 : 천명, %) .....	170
〈표Ⅷ-10〉 긴급복지지원조례 제정시 위기상황 추가(안) .....	173

## 그림 목 차

〈그림Ⅱ-1〉 빈곤연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8
〈그림Ⅲ-1〉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 구성	18
〈그림Ⅲ-2〉 자활사업현황	21
〈그림Ⅲ-3〉 지역자활센터 기능전환	28
〈그림Ⅲ-4〉 지역자활센터 기능전환 모형	29
〈그림Ⅲ-5〉 전라북도 개별급여체계 도입 시 빈곤인구추정	32
〈그림Ⅳ-1〉 1분위2분위 소득감소추이	43
〈그림Ⅳ-2〉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46
〈그림Ⅳ-3〉 전라북도 연령대별 빈곤율 추이	46
〈그림Ⅳ-4〉 지역별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47
〈그림Ⅳ-5〉 연령대별 빈곤인구 비교	48
〈그림Ⅳ-6〉 지역별 전체 인구대비 빈곤율 5%이상 연령대 현황	49
〈그림Ⅳ-7〉 보장기간별 현황	57
〈그림Ⅴ-1〉 조사원별 빈곤가구 비율 추정	69
〈그림Ⅴ-2〉 전라북도 소득분위별 연평균 소득 비교	70
〈그림Ⅴ-3〉 지역별 소득구성비 비교	73
〈그림Ⅵ-1〉 일간가구 중 중위소득이하 빈곤인구 비율	82
〈그림Ⅷ-1〉 도시-농촌 연령별 빈곤인구 추이	160
〈그림Ⅷ-2〉 성별연령별 위험주기의 차이	164
〈그림Ⅷ-3〉 지역별 빈곤위험연령 및 관련 빈곤정책 방향	166
〈그림Ⅷ-4〉 맞춤형 급여변동시 자활정책 변경 추정	167
〈그림Ⅷ-5〉 종사자지위별 현황 비교	170
〈그림Ⅷ-6〉 긴급복지지원가구 추정	172





# 제 1 장

## 서 론



# I. 서 론

전라북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013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8% 수준이다. 전국의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6%인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절대빈곤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미 빈곤선 이하로 진입한 빈곤가구의 빈곤탈출이 용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높은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미 빈곤층에 진입한 빈곤가구를 다양한 자활경로를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층으로의 진입예방은 전라북도 전체의 거시적인 고용정책의 틀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이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미 빈곤에 노출된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 정책은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재정비를 통해서 일정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가 빈곤정책의 중요한 기준선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소득기준선도 각 급여별로 차별화하여 자활계층의 적극적 자활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도 향후 지역에서 탈빈곤정책이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정부는 2015년 7월을 기점으로 기존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여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적극적 자활의지의 부재와 지나친 공적지원에의 의지를 일정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의 시각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은 지역의 복지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할 중요한 제도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빈곤정책의 큰 변화인 빈곤선의 변화는 빈곤인구의 규모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빈곤선을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복지급여 대상을 선별하여 제공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으로의 빈곤 기준선의 변화는 복지대상 및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의 내용

과 대상 그리고 수혜대상자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관점에서는 지역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는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빈곤선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급여체계의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그 제도적·재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전라북도만의 빈곤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곤선의 변화에 따른 빈곤정책 대상의 규모를 미리 추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급여체계 변화에 대응한 자활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을 통해 탈빈곤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 빈곤선 변화에 따른 세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의 수혜자를 사전에 추정해 봄으로써 향후 소요될 재정투자를 미리 예측하여 단계별로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빈곤선 변화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라북도 빈곤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빈곤인구의 규모추정과 수요 분석을 토대로 빈곤정책의 방향과 세부 전략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장

# 연구방법 및 한계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방법 및 절차



## Ⅱ. 연구방법 및 한계

### 1. 선행연구 검토

빈곤계층 대상 욕구조사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을 빈곤인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빈곤율을 추정하고 비빈곤인구와 빈곤인구의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빈곤인구로 연구대상을 제한할 경우 지역 빈곤율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고 하는 단점이 있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빈곤연구를 할 경우, 지역빈곤율은 추정할 수 있지만 빈곤층의 생활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 빈곤율을 추정을 위해서는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정 인구집단의 경우는 해당 인구집단을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1〉 빈곤관련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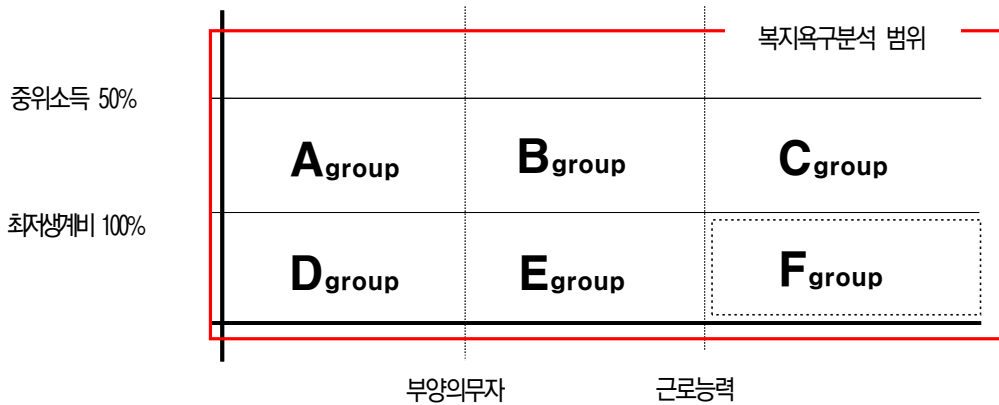
	조사자료	활용
서울시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정책 연구(2007)	빈곤여성관련 전문가(직접조사)	정책대안생산
	통계청 가계조사(2006) 법정소득분위 130% 이하 빈곤여성	통계
여성근로빈곤층과 노동시장정책(2006)	노동패널조사	여성빈곤실태 및 정책대안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2004)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2002-2003)	근로빈곤층 현황 및 근로빈곤정책 대안제시
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연구(2009)	서울 저소득 밀집지역 표본조사(814명)	빈곤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빈곤청소년 대책 제시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2010)	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활용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추이 분석, 소득양극화 실태분석, 중산층의 복지인식 조사

가령, 서울시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연구는 빈곤여성관련 전문가 조사와 함께 통계청의 전체 가구 대상 조사에서 일정 소득분위 이하 빈곤여성만을 추출하여 생활실

태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여성근로빈곤층과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도 직접 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여성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만약 빈곤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빈곤층(e)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고 빈곤율을 추정할 수 없다. 하지만 빈곤연구 대상을 전체 인구로 포괄할 경우 비수급빈곤층인(a, b, c, d, e)까지 분석이 가능하고 가구형태별, 지역별 빈곤인구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II-1〉 빈곤연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전술한 것처럼, 빈곤실태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이나 통계청의 가계조사 등 종단연구 자료 활용하였다. 패널조사의 경우 빈곤실태(빈곤율, 빈곤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물론 패널조사도 관련 자료가 빈곤을 포괄한 다양한 생활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어 빈곤가구의 다양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계층 인구규모를 추정은 한국노동패널 data의 원자료와 2014년도에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다.



〈표 II-2〉 빈곤선 원자료 분석 자료원 측정변수 및 전복 적용가능성

구분	표본수		조사목적	측정변수	전복실태분석 적합성
	전국	전북			
한국노동패널 (1차~15차) 한국노동연구원	5,000 가구	20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미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동태적으로 파악</li> <li>횡단면 자료만으로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수립 기초자료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영역별)</li> <li>소비형태</li> <li>고용형태</li> <li>부채 및 자산</li> <li>일자리 욕구</li> <li>경제활동 관련 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분석자료는 통계청 가계조사와 함께 가장 높은 신뢰도가 장점</li> <li>소득이외 복지수요진단 분석에는 한계</li> </ul>
여성가족패널 (1차~4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500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가치/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정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횡단면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으로 추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생애주기별 가치관 태도</li> <li>여성가구의 소득, 소비 지출 등</li> <li>여성가구의 복지욕구</li> <li>여성가구의 가족부양 형태 및 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가구단위조사로 일정한 대표성을 갖 추고 있지만 표본이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 대표성에 한계</li> </ul>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072 가구	약 40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역동적 분석의 유의성을 동시에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분석 및 복지수요분석에는 장점이 있지만 전북의 지역코딩이 호남권으로 범주화되어 있어 전북만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이 불가능</li> </ul>
전북복지실태조사 (2014) 전북발전연구원		1,60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 도민의 복지욕구 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중장기 복지정책 개발</li> <li>제3기 전라북도 중기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및 대상별 복지수요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주거상황</li> <li>구소득/자산/부채</li> <li>도민 생활여건</li> <li>도민지역사회 만족도</li> <li>주요 대상별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정책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분석 및 복지수요분석에는 장점이 있는 표본추출이 전라북도로 한정되어 타 시도와 지역비교 불가능</li> </ul>

## 2. 연구방법 및 절차

전라북도 빈곤가구의 복지수요분석을 위한 자료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와 전북 복지실태조사 1차(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전북가구의 표본수는 220가구이고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의 표본가구수는 1,580가구이다. 한국노동패널의 장점은 소득에 대한 분석이 매우 과학적으로 조사되어 있어 전라북도를 포함한 16개 시도의 빈곤가구의 현황이나 빈곤율을 추정하는데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조사문항이 복지욕구보다는 노동 관련된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소득이외 문항에서도 별도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빈곤율 추정과 동시에 빈곤가구의 복지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전북연구원이 실시한 복지욕구조사를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의 복지욕구조사는 생애주기별로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가구에 이르는 전체 계층의 빈곤실태와 빈곤가구의 복지욕구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중심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한국노동패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있는 원자료이다.

〈표 II-3〉 빈곤가구 수요분석 자료원

조사영역	단위	전북 가구수	조사문항 구성	결과값 산출
한국노동 패널 (15차)	가구	22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원천별 소득액</li> <li>• 소득원천별 소득유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원천별 가구소득</li> <li>• 중위소득 기준 소득액 및 가구수</li> <li>• 소득분위별 소득액 및 가구수</li> </ul>
전북복지 실태조사 (1차)	가구	1,580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별 총소득액</li> <li>• 가구별 복지욕구</li> <li>• 복지수혜대상별 총 소득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형태별 빈곤가구 유형</li> <li>• 가구형태별 빈곤가구 수 및 총소득액</li> </ul>

아울러 본 연구는 빈곤가구의 복지욕구조사와 함께 빈곤선 변화에 따른 빈곤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서와 각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가령 급여형태별 수급자 규모를 추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자료들은 전술한 전북복지욕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분석하고 급여수준별 복지사업이나 복지사업별 복지재정 등에 대한 분석은 2015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표 II-4〉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자료원

연구방법	분석 자료원
급여형태별 수급자 규모추정 복지사각지대 규모 추정	한국노동패널 15차 원자료 분석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2014) 원자료 분석 전라북도 자활참여조사 분석
급여수준별 복지사업 분석 복지사업별 대상자 추정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서 분석 전라북도 사업명세서 분석
급여수준별 복지재정 분석 복지사업별 복지재정 분석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서 분석(타 시도 비교분석) 전라북도 사업명세서 분석

다음으로 연구절차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빈곤정책의 동향을 탐색하고 타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빈곤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여 중앙의 빈곤정책 변화에 대응한 지역의 세부 정책 대안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의 소득 및 복지 관련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빈곤선 변화에 따른 각 수급형태별 빈곤인구수와 복지사각지대를 추정하고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 구간별 복지수요를 분석하여 16개 시도와 전라북도의 빈곤실태 및 빈곤수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라북도 복지사업(약 600여개) 중 소득기준 복지사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복지사업의 소득형태별 대상 분류와 재정현황을 검토하여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업 및 재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빈곤정책의 동향과 빈곤선 변화에 따른 빈곤인구 추계 그리고 빈곤인구의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빈곤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탈빈곤 확대를 위한 빈곤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문헌연구와 빈곤욕구분석 그리고 사례연구로 도출된 빈곤정책의 주요 방향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인 빈곤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 3 장

### 이론적 배경

1. 중앙정부 빈곤정책의 변화
2.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및 실태
3. 중앙정부 빈곤정책 변화와 동향
4. 빈곤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영향



### Ⅲ. 이론적 배경

#### 1. 중앙정부 빈곤정책의 변화

##### 1) 빈곤정책의 개념 및 범주

빈곤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빈곤으로 정의되는 수준에 대한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 혹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욕구의 결핍 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정의는 시간에 따라 상당부분 변화해왔다. 가령 과거에 빈곤이 기본적 욕구 결핍을 초래하는 물질적 재화의 박탈로 이해했다면 최근에 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빈곤에 대한 이 같은 정의의 변화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전술한 전자의 빈곤개념은 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나 무능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마지노선을 생존의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후자의 빈곤은 그 원인을 개인보다는 국가의 경제실패로 보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유지까지를 지원하는 정책까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 빈곤정책도 빈곤계층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어디서부터 제공해야 하는지가 항상 쟁점이 된다. 과거 빈곤정책은 생활보호법의 하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통칭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변경되어 빈곤계층에게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이해되었다. 이 같은 빈곤정책의 변화도 빈곤의 개념에 대한 관점과 정책기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sup>1)</sup>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저소득층의 복지정책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빈곤정책에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빈곤계층의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빈곤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지금까지 빈곤정책은 주로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편의상 정의되어왔다. 하지만 빈곤의 원인과 범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면서 빈곤정책은 주로 욕구별로 생계, 교육, 주거, 의료로 범주화하고 관련 정책의 영역으로는 자활, 직업훈련, 소득공제, 사회보험지원, 취업알선,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세분화된다.

빈곤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빈곤 관련 선행연구는 빈곤정책의 한 영역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구하거나 근로빈곤계층 대상의 자활정책을 대상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탈빈곤정책으로 개념화된 연구(박능후, 2003)에서도 주로 정책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조세정책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빈곤정책의 경우 빈곤정책의 범주가 주로 특정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빈곤아동, 빈곤노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책의 영역도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고용정책 등으로 특정 영역중심으로 연구되어 빈곤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정책의 큰 방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이태진 외(201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태진 외(2012)의 연구에서는 빈곤정책의 범주를 생계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교육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범주화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태진 외(2012)의 연구는 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전술한 다섯가지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자립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논의함으로써 빈곤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자활정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빈곤정책의 범위를 생계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범주화하되 빈곤대책의 핵심인 자활정책을 중요한 비중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빈곤계층의 복지수요조사는 빈곤가구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빈곤가구의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빈곤가구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빈곤율이 높다는 결과적 자료는 많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논리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빈곤가구의 생활실태를 맞춤형 급여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으로 범주화하여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고 난 이후 빈곤정책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에 새롭게 선정된 기준선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급여형태별로 중위소득의 선정구간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 변화에 기초할 경우 빈곤의 개념은 기존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하게 되고 빈곤계층도 최소 중위소득 50%에서 최대 28%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차별화된다.

〈표Ⅲ-1〉 2015년 욕구별 급여 선정의 새로운 기준선

급여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	제8조②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2014. 12. 30. 신설)
주거급여	제11조② 부칙 제7조③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라 법률로 정함.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2014. 12. 30. 신설)
교육급여	제12조 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2014. 12. 30. 신설)
의료급여	제12조 3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2014. 12. 30. 신설)
해산급여	제13조 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제7조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장제급여	제14조의 2 (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2014. 12. 30. 신설)
자활급여	제16조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료 : 류정희(201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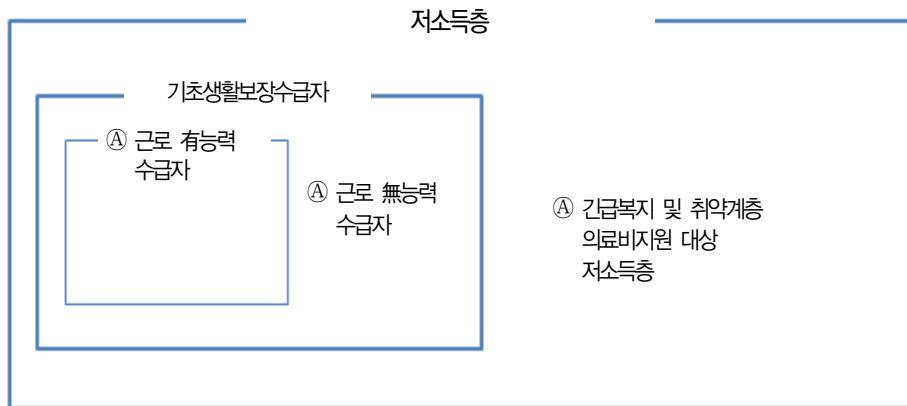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호해야 할 빈곤층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이른바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이태진 외, 201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이 최저생활보장과 보충급여에

더하여 자립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급여만으로는 자립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개별급여를 통한 급여형태별 대상자의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에 따른 빈곤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시행 15년을 맞이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인구를 선별하고 해당 계층에 대해서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사실상 보충급여의 성격으로 발전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총 7개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자활지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에게 지원한다.

〈그림 Ⅲ-1〉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 구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3)

빈곤인구의 증가에 따라 최근 기초생활보장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2007년 6.6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13년 8.7조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8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표Ⅲ-2〉 2007~20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103	연평균증가율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A)	23,086	22,564	24,460	24,492	24,460	23,618	26,091	2.1
	주거급여(B)	2,455	5,869	6,500	6,106	5,807	5,660	5,692	15.0
	교육급여(C)	802	852	1,105	1,204	1,299	1,356	1,295	8.3
	해산장제급여(D)	131	132	135	154	154	152	220	9.0
	양곡할인	-	65	163	1,108	997	924	-	94.2
	기타	29	27	693	60	54	62	39	5.1
	소계	26,502	29,508	33,056	33,124	32,769	31,772	33,337	3.9
의료급여	의료급여관리	5	7	7	7	6	6	5	0.0
	의료급여경상보조(E)	36,051	37,901	35,099	34,995	36,718	39,812	43,934	3.4
	소계	36,056	37,908	35,106	35,002	36,724	39,818	43,939	3.4
자활지원	자활사업(F)	2,873	2,882	3,359	3,984	4,203	4,430	4,723	8.6
	자활장려금(G)	223	223	206	210	211	374	389	9.7
	有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지원(H)	-	-	-	249	296	374	435	20.4
	양곡할인	-	-	-	-	-	-	1,014	-
	기타	24	43	49	53	53	155	324	54.3
	소계	3,120	3,148	3,615	4,495	4,763	5,333	6,885	14.1
긴급복지	긴급복지	341	378	515	579	589	589	971	19.1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지원	-	689	1,479	1,139	1,335	1,335	2,107	25.1
	기타	138	131	162	166	291	291	450	21.8
	소계	138	820	1,641	130	1,627	1,627	2,557	62.7
기초생활보장급여 (A+B+C+D+E+F+G+H)		65,621	70,423	70,864	571,394	73,148	73,148	82,779	3.9
합계		66,157	71,762	73,933	74,505	76,472	76,472	87,689	4.8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근로유인제도는 크게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현금급여 정책과 자활특례와 이행급여특례 등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활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는 일반 수급자로 편입되고 근로 능력자는 조건부 수급자와 조건부과 유예 및 제외자로 구분된다. 자활정책은 주로 자활일자리 정책과 자립지원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자활근로, 자활근로, 희망리본, 취업패키지 등의 근로유인정책이 제공되고, 취업 및 창업 수급자의 경우는 희

망키움 통장이나 생업자금 용자 및 지원 제도 등으로 보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가 81.5%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능력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18.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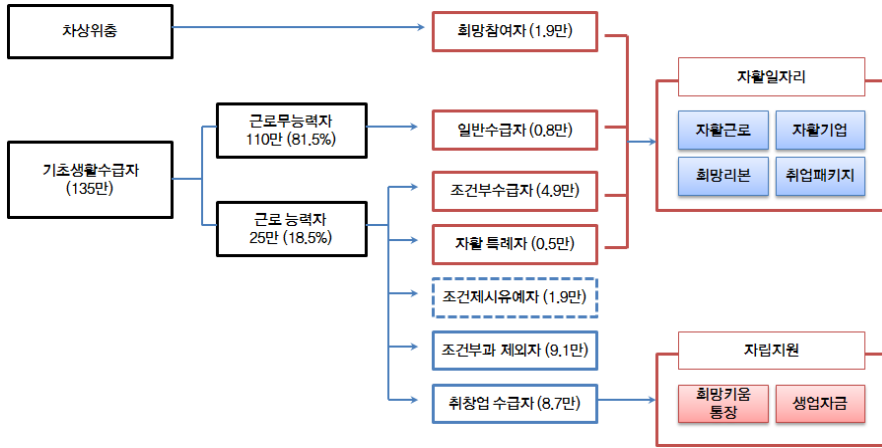
〈표 Ⅲ-3〉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A)	23,618	27,292	28,110	28,954	29,822	6.0
	주거급여(B)	5,194	5,911	6,186	6,403	6,627	6.3
	교육급여(C)	1,356	1,418	1,463	1,507	1,553	3.4
	해산장제급여(D)	152	309	309	309	309	19.4
	양곡할인	924	-	-	-	-	-
	기타	34	19	20	37	21	△11.3
	소계	31,278	35,016	36,088	37,211	38,332	5.2
의료급여	의료급여관리	6	6	6	6	6	0.0
	의료급여 경상보조(E)	39,812	42,289	47,201	49,469	51,845	6.8
	소계	39,818	42,295	47,207	49,475	51,851	6.8
자활지원	자활사업(F)	4,430	4,716	5,073	5,326	5,593	6.0
	자활장려금(G)	374	230	237	244	251	△9.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H)	374	644	663	682	702	17.0
	양곡할인	-	924	924	924	924	0.0
	기타	155	203	228	206	215	8.5
	소계	5,333	6,717	7,125	7,383	7,685	9.6
긴급복지	긴급복지	589	530	530	530	530	△2.6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1,546	2,112	2,337	2,586	2,864	16.7
	기타	882	907	924	928	912	0.8
	소계	2,428	3,019	3,261	3,514	3,776	11.7
의무지출사업 합계		70,132	77,286	83,269	86,642	90,156	6.5
기초생활보장급여 (A+B+C+D+E+F+G+H)		75,310	82,875	89,242	92,894	96,702	6.5
합계		79,446	87,577	94,211	98,111	102,174	6.5

자료 :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Ⅲ-2〉 자활사업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대부분이 근로빈곤계층의 자활유인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제도의 한계로 인해 자활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활유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이들 제도의 경우 대부분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발적인 탈빈곤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대부분 빈곤선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수급자의 상당수가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고, 이 같은 복지사업의 수혜자 탈락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자발적 탈빈곤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Ⅲ-4〉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

구분	현금		서비스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자활특례제도	이행급여특례제도
지원내용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 환급	3년 간 취업 수급자의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급 (3년 이내 탈수급조건)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최저생계비 초과 시에도 3년 간 수급자격 인정 (생계주거급여 제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탈수급 증가한 경우, 의료교육급여 2년 적용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	△	○	○
일반 취업자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4)

빈곤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탈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탈빈곤은 빈곤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계층이 빈곤선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소득생활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탈빈곤을 수급탈피, 취업상태의 변화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되어왔다.

〈표Ⅲ-5〉 탈빈곤 개념

연구자	탈수급 정의
김미곤 외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빈곤적 수급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내적 탈빈곤으로 인한 탈피: 가족 내 소득활동으로 인한 탈피</li> <li>- 가족외적 탈빈곤으로 인한 탈피: 부양가족 소득이전으로 인한 탈피</li> </ul> </li> <li>제도적 수급탈피(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제도로의 이전: 기초연금 등 보편적 급여의 확대에 의한 탈피</li> <li>- 제도 변화로 인한 탈락: 수급기간 제한, 수급자격 제한, 급여 축소 등 제도강화로 인한 탈락</li> <li>- 관리(부정수급)로 인한 탈락: 모니터링으로 인한 수급자격박탈</li> </ul> </li> <li>자연적 수급탈피: 사망, 이민 등</li> </ul>
노대명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빈곤을 전제로 하는 탈수급: 가구소득 및 재산의 변화 등</li> <li>행정적 조치에 따른 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기타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거주지 변동 등</li> </ul>
노대명 외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수급 I : 취업상태변화(취업진입)나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경우</li> <li>탈수급 II :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기준 적용에 따른 경우</li> <li>수급자격 상실 또는 수급탈락: 행정적으로 새로운 소득·재산이 발견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li> </ul>
이원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빈곤적 수급탈출: 수급을 탈출한 사람 중 해당 연도에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상</li> <li>탈제도적 수급탈출: 가처분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li> </ul>
강신욱 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수급가구: 자료의 최종시점을 기준으로 수급받는 가구 중 자료의 기간 동안 수급자에서 탈피한 경험이 없는 가구</li> <li>반복수급가구: 자료의 기간 동안 수급 탈피 사실이 있는 가구</li> <li>수급탈피가구: 자료의 기간 동안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로서, 2006년 1월 현재 수급에서 탈피한 가구</li> </ul>
류만희 외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수급: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급할 수 없는 상태.</li> <li>빈곤: 급여의 중지로 인한 탈수급은 절대적 정책빈곤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할 뿐 더 이상의 공공부조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실질적인 탈빈곤상태를 의미하지 않음.</li> </ul>

자료 : 김은하 외(2013)의 정리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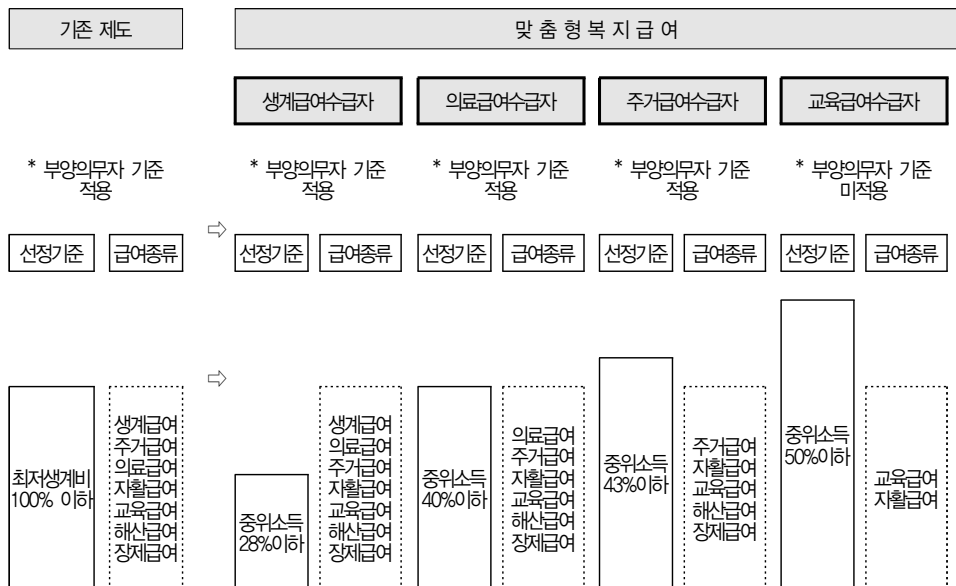
### 3. 중앙정부 빈곤정책 변화와 동향

#### 1) 빈곤기준선의 변화와 맞춤형 개별급여 변경

특히, 빈곤정책이 기초생활보장가구에 집중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사실상 잠재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의 잠재빈곤층의 소득을 초과하는 역전이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된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선이었던 최저생계비가 2015년 하반기부터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되었고, 빈곤선 기준의 변경에 따라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크게 변화하여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기준선 변경에 따라 변경된 급여는 제도 시행시기인 2015년 7월부터 대폭 변화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 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전환하게 된다.

〈표 III-6〉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 내용



자료 : 전라북도(2015) 내부자료

다만, 다른 급여와는 달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충급여의 성격을 유지하고 나머지 급여는 별도의 보장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관련법류에 따라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로 단계적 인상 추진하되 시행초기인 2015년에는 중위소득 28%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중위소득 30%까지는 보장하도록 재원배분원칙을 설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으로 심의의결하고 중위소득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다.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22.2만원으로 중위소득 28%는 118.2만원, 중위 40%는 168.9만원, 중위50%는 211.1만원 등으로 결정되었다.

〈표Ⅲ-7〉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중위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중위 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중위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 (중위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주1.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표Ⅲ-8〉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타지원액[㉕]	117,993	200,908	259,904	318,901	377,898	436,894	495,890
현금급여 지급기준 [㉖=㉔-㉕]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주거급여액[㉗]	110,003	187,303	242,304	297,306	352,308	407,309	462,311
생계급여액 [㉘=㉖-㉗]	389,285	662,837	857,480	1,052,122	1,246,764	1,441,407	1,636,050

자료 : 보건복지부(2015)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년 급여별로 변경된 가구당 선정기준액을 발표하였다. 20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을 보면,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29%로 2015년보다도 1%p증가한 4인 가구 기준 127.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은 2015년도 중위소득 40%와 43%로 큰 변화가 없지만 금액은 의료급여 기준액이 4인 기준 175.6만원, 주거급여의 경우 188.8만원 그리고 교육급여 219.5만원으로 결정되었다.

〈표Ⅲ-9〉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2015년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20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43%)	20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0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50%)	2015년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0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 (중위29%)	2015년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20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자료 : 보건복지부(2017)

〈표Ⅲ-10〉 일반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부양능력 없음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부양능력 미약	▶ B×100% ≤ 부양능력판정소득액×30% or 15% < 취약계층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능력 있음	▶ [(A×40%) + (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1인가구	2,187,272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6,409,805	7,190,974
2인가구	2,626,415	3,724,274	4,505,442	5,286,611	6,067,780	6,848,948	7,630,117
3인가구	2,938,883	4,036,742	4,817,910	5,599,079	6,380,248	7,161,416	7,942,585
4인가구	3,251,350	4,349,209	5,130,377	5,911,546	6,692,715	7,473,883	8,255,052
5인가구	3,563,818	4,661,677	5,442,845	6,224,014	7,005,183	7,786,351	8,567,520
6인가구	3,876,285	4,974,144	5,755,312	6,536,481	7,317,650	8,098,818	8,879,987
7인가구	4,188,753	5,286,612	6,067,780	6,848,949	7,630,118	8,411,286	9,192,455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표Ⅲ-11〉 취약계층 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부양능력 없음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부양능력 미약	▶ B×100% ≤ 부양능력판정소득액×30% or 15% < 취약계층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능력 있음	▶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아래 〈조건 1〉과 〈조건 2〉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적용						
1인가구	2,312,259	3,285,131	4,066,299	4,847,468	5,628,637	6,409,805	7,190,974
2인가구	3,124,674	3,937,090	4,515,154	5,286,611	6,067,780	6,848,948	7,630,117
3인가구	3,702,739	4,515,154	5,093,219	5,671,284	6,380,248	7,161,416	7,942,585
4인가구	4,280,804	5,093,219	5,671,284	6,249,349	6,827,414	7,473,883	8,255,052
5인가구	4,858,869	5,671,285	6,249,349	6,827,414	7,405,479	7,983,543	8,567,520
6인가구	5,436,933	6,249,349	6,827,413	7,405,478	7,983,543	8,561,608	9,139,673
7인가구	6,014,998	6,827,414	7,405,478	7,983,543	8,561,608	9,139,673	9,717,738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아울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도 일반수급자와 취약계층을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표Ⅲ-12〉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기준임대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급지 (서울)	19	22	26	30
2급지 (경기/인천)	17	19	23	27
3급지 (광역시/세종)	14	15	18	21
4급지 (그 외)	13	14	17	19

빈곤선 변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특례규정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행급여 특례는 기존 최저생계비 하에서의 수급자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5)

〈표 III-13〉 특례제도 변경사항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의료급여 유예특례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특례	
존치 여부	기존제도 유지	제도 즉시 폐지	• 기존 3년 특례 적 용시 까지 유지 • 신규진입불가	• 기존 2년 특례 적 용자 종료시 까지 적용 • 신규진입불가	• 기존 특례적용자 16 년 6월 까지 적용 • 신규진입불가	• 기존 특례적용자 17년 6월까지 2년 간 특례인정 • 신규진입불가

## 2) 근로유인체계 강화를 위한 자활정책 개선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는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과 같은 현금지급 사업과 자활특례제도, 이행급여특례제도와 같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자활특례제도와 이행급여 특례제도는 탈수급으로서의 연락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활장려금은 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을 했거나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동안 취업수급자의 본인 저축액(매월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재원을 1:1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3년 이내에 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게 되어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적립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특히, 자활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의 개편에 따라 자활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이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통합급여로 제공되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제공되었지만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28%~50%로 차별화되었고, 자활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인해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활정책의 변화는 크게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전환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는 조건부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근로능력 미약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자활사업의 주된 지역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가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위기로 인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센터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자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탈빈곤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활기업 전문가의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일반 시장진입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에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준 경우로 포함시켰고, 자활센터의 지역맞춤형 운영을 위해 시범 추진하고 있는 유형 및 다변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해당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성과평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전환 방식은 성과계약제 도입, 협동조합 전환 그리고 기능개편 연계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Ⅲ-3〉 지역자활센터 기능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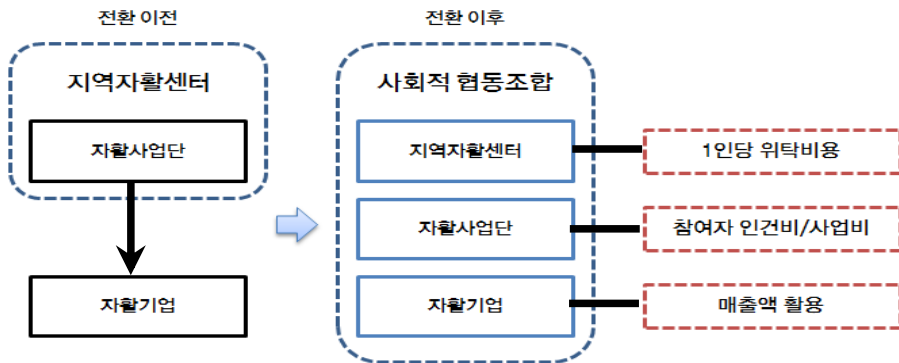
성과계약제 도입	협동조합 전환	기능개편 연계
<p>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변화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에 반영</li> <li>· 3~5년 단위 종합평가</li> <li>· 계약갱신 결정에 활용</li> </ul>	<p>자생적 운영 및 다양한 자체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생적 운영</li> <li>· 자활사업단 지원 및 자활기업과 연계를 유도하여 자생적인 자활센터의 새로운 모형 개발</li> </ul>	<p>전환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및 참여자 여건을 고려한 구분 운영으로 지역내 개편 우선</li> <li>· 시군구 복수설치 지역 및 인접한 지자체 대상</li> </ul>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인원의 감소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역 자활의 핵심적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유형과 기능을 지역의 자활 수요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사업은 근로빈곤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단계적으로 밀착형 사례관리기관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현행 보조금의 지원방식을 성과계약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유형전환은 기존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의 자활경로를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까지 포함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Ⅲ-4〉 지역자활센터 기능전환 모형



자활정책의 이 같은 변화는 지역자활센터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변경에 맞춰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기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지역자활센터가 18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자활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효용성에 대응하여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예산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2015년도 자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8.4%나 감소한 4,48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자활사업은 주요전달체계계인 지역자활센터의 다기능화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자활참여자 감소에 따른 빈곤정책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예산에서는 성과중심자활사업(희망리본)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고,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도 약 25억원정도 삭감되었다.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는 조건부 수급자는 감소하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약간 자활참여자는 증가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표 III-14〉 자활정책 예산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	주요명세
계	549,428	448,075	△101,353	△18.4	운영비, 인건비 등 단가 3% 인상
자활사업	412,444	316,154	△96,290	△23.3	
- 자활근로	382,798	314,803	△67,995	△17.7	15년 50천원 수준 지원 예정
- 자활사례관리	1,020	1,051	31	3.0	60개소
- 희망리본	27,686	-	-	-	고용노동부로 이관
- 자활통계 선진화	300	300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편
-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640	-	-	-	고용센터 중심형으로 추진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2,865	50,276	△2,589	△4.9	중앙 : 사업비(SW개발비) 212백만원(신규) 지역 : 청소년자활프로그램 28→27개소 연수원 : 2222백만원
자활사업관리	190	177	△13	△6.8	
생업자금 이차보전	1,160	768	△392	△33.8	손실보전금 : 7% 반영 이차보전료 : 0.2% 반영
자활장려금	25,000	15,000	△10,000	△40.0	EITC와 자활장려금 연계 조정
희망키움통장	48,295	55,556	7,261	15.0	희망키움통장Ⅰ : 신규 3천가구 희망키움통장Ⅱ : 신규 20천가구
근로능력 심사 평가	9,474	10,144	670	7.1	인건비 : 10.4%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자활사업안내

이 같은 자활정책의 변화로 인해 주요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와 중앙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도 총 18개소가 설치된 지역자활센터가 근로빈곤계층 탈빈곤 지원이라고 하는 정책목표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요구된다.

## 4. 빈곤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영향

### 1)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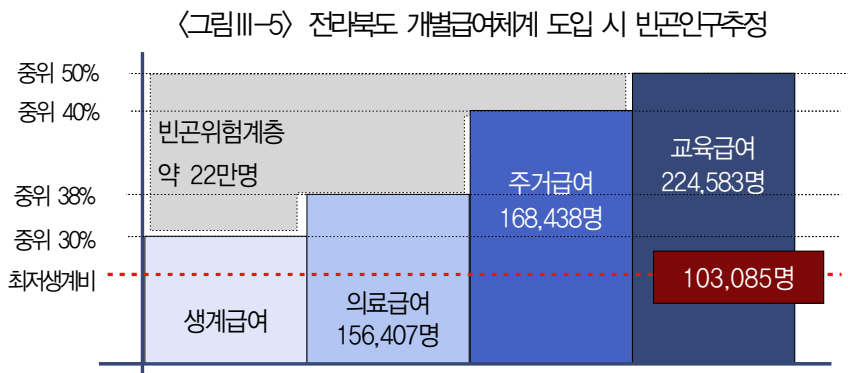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구간으로 빈곤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인 빈곤인구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설정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 산술통계치로 현재보다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형태별로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소득구간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급여의 대상자 수는 현재의 급여대상자와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상대적 빈곤선 방식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빈곤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보다는 기준소득액이 낮아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5〉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추이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2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3.9
2013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3.4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5.5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4.2
2015년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전환 후 급여에 따른 각 급여형태별 수급자 변동 폭을 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4개 급여의 수급자는 2014년 152만명에서 2015년 개편 완료 시 176만명으로 약 15.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완전한 전환 이후 현재의 제도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별급여 체계 이후 빈곤인구를 산술적으로 추정해 보면,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의 10.3만명에서 22.4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폭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급여의 경우는 현재보다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주: 한국노동패널 11차 원자료 분석 가구균등소득 적용후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시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14년 개편 전후 비교시 약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측하고 있다.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시 빈곤선 변화(절대빈곤선에서 상대빈곤선)따라 지원대상이 전년대비 최소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증가에 대한 재정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시 빈곤인구는 현재 10만명에서 22만명으로 증가하고 재정투자도 그에 상응하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출증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복지사업 기준선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변화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빈곤선에 의해 제공되던 것이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표Ⅲ-16〉 소득기준에 의한 복지사업 현황

선정기준	소득기준선	사 업 현 황
소득 인정액	80만원	장애인연금
	12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최저생계비 100%	기초생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해산급여), 의료급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최저생계비 120%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가수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저생계비 130%	장애인자녀 교육비, 한부모가족교육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동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등
	최저생계비 15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부모모교생 교육비, 청소년특별지원(생활, 의료) 등
	최저생계비 180%	청소년특별지원(학업, 자립, 상담 등) 등
	최저생계비 250%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도시가구 70%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도시가구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등
소득	연소득 1,700만원	근로장려금
	연소득 2,000만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자금
	연소득 2,4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연소득 3,000만원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등
	최저생계비 100%	기급생계비 지원(재산 별도 산정)
	최저생계비 150%	긴급지원(교육, 해산비, 장제비, 주거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한부모복지자금 대여 등
	최저생계비 200%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등
	최저생계비 300%	소아암 환자 지원(재산 별도 산정)
도시가구 100%	기존주택 전세임대,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등	
보수 월액	최저생계비 120%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	저소득층 무료급식비 지원 등
	최저생계비 150%	취업성공패키지 등
	최저생계비 20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임신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등
	최저생계비 300%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전국가구 50%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도시가구 70%	국가 유공자 대부 등
	전국가구 10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
전국가구 15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건강 보험료	소득분위 5분위	국가암 조기 검진,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소득분위 7분위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기타	소득계층등급 6등급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등
	소득계층등급 10등급	생활조정 수당 등

현재 국고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사업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사업은 2014년 기준으로 184개 사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국가의 복지사업 중 62%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중 소득 기준 사업인 184개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144개사업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소득기준 복지사업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복지사업은 아래와 같다.

### 3) 자활인구의 감소와 자활전달체계의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자활참여자의 감소이다. 자활정책은 탈빈곤정책의 핵심이지만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취창업 관련 사업은 모두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때문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전달체계는 참여인력의 감소로 인해 상당한 기능 전환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활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를 1개 시군에 1개 소씩만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일부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관리뿐만 아니라 근로빈곤계층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설정한 것도 자활참여인력 감소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연관되어 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재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는 지역자활센터를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기관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과 중앙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둘째는 지역자활센터를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인프라를 개방하여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즉, 지역자활센터의 통합적 사례관리 하에 참여자들이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인턴 형태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방한다는 점이다. 자활사업의 주된 전달체계로 자활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문화를 개방한 점은 향후 복지수요수 높은 전라북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는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및 기능의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전환은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개편 및 자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가 모색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기능전환의 방향으로는 크게 세가지 형태가 논의되고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지역자활센터를 밀착형 사례관리기기관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보조금 지원방식을 성과계약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자활사업단 지원 및 자활기업과의 연계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복수설치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결국 이 같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도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된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지역은 기능전환의 시범도시가 될 수 있고, 자활참여자가 100명이 넘지 않은 무주, 진안, 장수 등 군지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4장

#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1.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IV.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1.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전라북도의 빈곤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곤 및 빈곤선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빈곤은 주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자원의 결핍상태로 정의한다. 빈곤의 개념적 정의가 중요한 것은 빈곤의 개념적 범위가 어디까지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빈곤의 개념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결핍으로 정의한다면 빈곤정책은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충족만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빈곤을 최소한의 생존이 아닌 적정수준의 생활유지로 확대할 경우 빈곤정책의 범위는 단순한 물질적 결핍 이상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책의 개발을 요구한다.

이 같은 빈곤의 다차원성으로 인해 빈곤은 주로 세 가지의 형태 즉,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범주화하여 그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한다. 여기서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할 만큼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상황으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은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에서 평균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정의한다.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국민의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빈곤의 내용도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빈곤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빈곤을 의미한다.

〈표Ⅳ-1〉 주요국가 및 기관의 상대적 빈곤선

용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정책적 빈곤
정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일정한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 대비 상대적인 저소득층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여부를 결정	정부의 빈곤정책에 의해 결정
빈곤선 기준	예산기준	저소득 기준	주관적 기준	공식적 기준

자료 : 이채정(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상이하다. 절대적 빈곤을 주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필품의 필요량을 산출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빈곤선을 설정하지만 상대적 빈곤선은 국민의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 혹은 평균소득의 일정 수준을 측정하여 빈곤선을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의 개념을 과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을 전환하여 확장하였다. 즉, 올해 7월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를 빈곤상태로 파악하는 절대적 빈곤을 활용했다면,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된 7월 이후부터는 빈곤선의 중요한 기준선이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되었다.

〈표Ⅳ-2〉 주요국가 및 기관의 상대적 빈곤선

구분	상대적 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EU	중위소득의 60%
영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본	평균소비지출의 68%
V. Fuchs(1967)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1974)	빈곤층은 평균가구소득의 80%, 극빈층은 평균가구소득의 50% 이하
Lee Rainwater(1974)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김미곤 외(2010); 우석진 (2011) 재인용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이처럼 빈곤은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학자들마다 그리고 국가들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빈곤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대별되고 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을 정책지원의 기준으로 파악하여 빈곤의 범위를 절대적 빈곤보다는 보다 넓게 파악하고 있다.

전술한 빈곤개념을 기초로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그리고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평균시장소득의 중위값은 2,107천원이고,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값은 2,199천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2014년도 기준 시장소득은 2,546천원, 가처분 소득 기준 2,569천원이었다. 이 같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2008년과 비교시 평균 35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표Ⅳ-3〉 중위임금·평균소득 빈곤율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득 구분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중위 임금	1,756	1,743	1,854	1,875	1,932	1,952	2,079	2,096	1,983	2,033	2,117	2,169	2,107	2,188
평균	2,116	2,043	2,185	2,152	2,323	2,304	2,448	24,26	2,318	2,318	2,444	2,455	2,546	2,568
빈곤율	18.42	13.58	18.56	12.92	17.2	11.49	17.18	11.58	20.5	14.21	21.04	14.42	22.49	16.0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복지패널 원자료 분석

한편,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4년 시장소득 기준 22.49%, 가처분 소득 기준 16.08%였다. 2008년과 비교시 상대적 빈곤율은 약 3.0%내외로 증가하였다. 통계청(2014)의 자료에서도 중위소득 50%미만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기준 18.0%(시장소득기준), 15%(가처분소득 기준)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08년 18.42%에서 2014년 22.49%로 4.1%p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2008년 13.58%에서 2014년 16.08%로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2008년 이후 중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위소득 기준으로 측정된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경우 2013년 기준 18.0%로 추정되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15.0%가 상대적 빈곤율 이하의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표Ⅳ-4〉 상대적 빈곤율 추이(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인이상비농가 (시장소득)	13	14	15	15	16	15	15	15	15	14	14
전체가구 (시장소득)				17	17	18	18	18	18	18	18
2인이상비농가 (가처분소득)	11	12	13	13	13	13	13	13	12	12	12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14	15	15	15	15	15	15	15

자료 : 통계청 (2014)

〈표Ⅳ-5〉 1990년-2012년 10분위 소득 대비 1~3분위 소득비율(단위 :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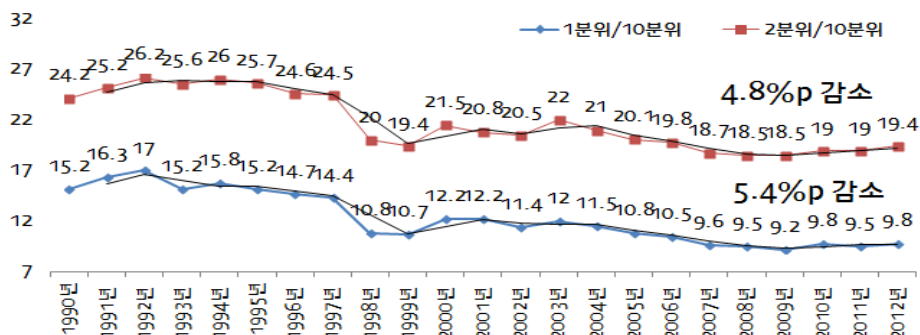
	1분위	2분위	3분위	10분위	1분위 /10분위	2분위 /10분위	3분위 /10분위
1990년	316,239	503,601	608,431	2,085,117	15.2%	24.2%	29.2%
1991년	404,939	625,620	755,164	2,485,982	16.3%	25.2%	30.4%
1992년	479,342	738,091	883,089	2,822,116	17.0%	26.2%	31.3%
1993년	462,517	779,695	951,176	3,047,099	15.2%	25.6%	31.2%
1994년	545,369	898,828	1,086,421	3,456,528	15.8%	26.0%	31.4%
1995년	594,588	1,002,639	1,233,044	3,901,975	15.2%	25.7%	31.6%
1996년	654,816	1,092,413	1,346,593	4,442,717	14.7%	24.6%	30.3%
1997년	673,001	1,147,062	1,437,862	4,674,807	14.4%	24.5%	30.8%
1998년	498,480	921,454	1,165,140	4,607,434	10.8%	20.0%	25.3%
1999년	509,971	924,663	1,192,721	4,755,951	10.7%	19.4%	25.1%
2000년	614,988	1,083,796	1,366,801	5,040,060	12.2%	21.5%	27.1%
2001년	680,374	1,162,103	1,462,282	5,583,095	12.2%	20.8%	26.2%
2002년	681,044	1,221,342	1,566,243	5,955,660	11.4%	20.5%	26.3%
2003년	710,124	1,301,033	1,677,990	5,923,162	12.0%	22.0%	28.3%
2004년	737,739	1,344,352	1,727,875	6,394,975	11.5%	21.0%	27.0%
2005년	726,228	1,349,849	1,756,190	6,731,895	10.8%	20.1%	26.1%
2006년	741,989	1,399,754	1,823,358	7,058,191	10.5%	19.8%	25.8%
2007년	732,551	1,426,843	1,898,564	7,629,576	9.6%	18.7%	24.9%
2008년	774,414	1,510,515	2,000,011	8,159,532	9.5%	18.5%	24.5%
2009년	737,357	1,482,612	1,997,254	8,025,311	9.2%	18.5%	24.9%
2010년	816,758	1,586,918	2,158,579	8,362,964	9.8%	19.0%	25.8%
2011년	844,311	1,687,499	2,299,012	8,877,313	9.5%	19.0%	25.9%
2012년	915,578	1,814,128	2,474,200	9,356,485	9.8%	19.4%	26.4%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각년도

한편, 199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을 보면, 1990년 1분위의 평균소득은 316,239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인 10분위 소득의 15.2%수준이었다. 1990년 2분위 소득은 503,601원으로 소득10분의 대비 24.2%였다. 하지만 2012년 1분위 월평균소득은 915,578원으로 10분위 소득의 9.8%였고, 2분위 소득은 1,814,128원으로 10분위 소득의 19.4%였다.

결국 1990년대 이후 평균소득은 총액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소득불평등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평균소득은 10분위 평균소득의 15.2%수준이었지만 2012년도는 9.8%로 5.4%p감소하였고, 2분위 소득도 같은 기간 24.2%에서 19.45%로 4.8%p 감소했다. 가장 높은 10분위소득과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그림Ⅳ-1〉 1분위·2분위 소득감소추이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빈곤수준은 시장 소득기준 2006년 14.2%에서 2012년 16.7%로 증가했고,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1.6%에서 13.2%로 증가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상대적 빈곤율도 시장소득 기준 2005년 19.9%에서 2012년 22.2%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6.8%에서 18.9%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소득분위별 혹은 중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소득분위별로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평균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상황도 전국의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Ⅳ-6〉 우리나라 가구빈곤 수준 현황(2006-2012년)

연도	절대적 가구 빈곤율		상대적 가구 빈곤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중위40%	중위50%	중위60%	중위40%	중위50%	중위60%
2006	14.2	11.6	15.0	19.9	25.0	12.0	16.8	22.6
2007	14.8	11.9	15.7	20.3	26.1	12.5	17.6	23.4
2008	15.7	12.6	16.4	21.2	26.4	13.0	18.2	23.7
2009	17.9	14.1	17.5	22.0	27.1	13.8	19.0	24.7
2010	17.6	13.7	18.4	22.7	27.5	14.2	18.7	24.5
2011	17.6	13.9	18.0	22.5	27.1	14.3	18.7	24.3
2012	16.7	13.2	17.8	22.2	26.9	14.1	18.9	23.9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빈곤통계연보

## 2)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추이

전체 인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라북도는 2004년 5.9%에서 2014년 4.6%로 1.3%p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여전히 전라북도가 법정 빈곤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07년도까지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었지만 2008년부터 전남을 추월하여 15개 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환되었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4년 기준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인 2.6%보다도 약 2.0%p 더 높은 수준이다.

〈표Ⅳ-7〉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년	2.9	1.7	3.2	3.2	2.3	3.8	2.8	1.6	1.8	3.9	3.7	4.1	5.9	6.7	4.6	3.2	3.7
2005년	3.0	1.8	3.4	3.3	2.4	3.9	2.8	1.7	1.8	4.1	3.5	4.0	6.2	6.9	4.6	3.3	3.8
2006년	3.2	2.0	3.8	3.7	3.7	4.2	3.1	1.8	1.9	4.4	3.9	4.1	6.6	6.9	4.9	3.5	4.1
2007년	3.2	2.1	4.0	3.9	2.7	4.2	3.1	1.8	1.9	4.4	3.9	4.0	6.7	6.7	4.8	3.5	4.2
2008년	3.1	2	3.9	4.0	2.6	4.3	3.2	1.7	1.8	4.3	3.8	3.7	6.2	6.0	4.7	3.3	4.1
2009년	3.2	2.1	4.1	4.3	2.7	4.6	3.3	1.7	1.9	4.4	3.8	3.7	6.1	5.8	4.7	3.3	4.3
2010년	3.1	2.1	4.1	4.3	2.7	4.5	3.2	1.7	1.8	4.3	3.7	3.5	5.9	5.5	4.6	3.2	4.3
2011년	2.9	2	4	4.2	2.6	4.3	3.1	1.5	1.7	4.1	3.4	3.2	5.5	5.0	4.2	3	4.1
2012년	2.7	2	3.8	4	2.5	4.2	3	1.4	1.6	3.8	3.2	2.9	5.1	4.6	3.9	2.8	3.8
2013년	2.6	2	3.7	3.9	2.5	4.1	2.9	1.3	1.5	3.6	2.9	2.7	4.8	4.2	3.7	2.7	3.6
2014년	2.6	3.6	3.8	2.5	4.0	2.8	1.3	2.1	1.5	3.6	2.8	2.6	4.6	4.0	3.5	2.6	3.3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각연도 자료 재구성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4년 현재 50,515가구, 87,008명으로 2010년 대비 기초생활수급가구는 4,555가구가 감소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8,094명이 감소하였다. 2001년 기준 연평균 기준 수급자 가구는 072%가 감소했고, 수급자는 2.30%가 감소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감소와는 달리 시설수급자는 2001년 4,587명에서 2014년 5,543명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59%정도 수준이다.

〈표Ⅳ-8〉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전체 수급 가구	55,070	54,760	56,406	58,241	61,428	62,239	62,952	61,896	61,564	60,353	56,971	53,778	51,637	50,515	-0.72%
전체 수급자	115,102	110,169	111,021	113,169	118,533	119,016	118,917	115,093	113,782	110,894	103,085	95,656	90,280	87,008	-2.30%
시설 수급자	4,587	4,503	4,614	4,968	5,329	5,285	5,570	5,463	5,456	5,702	5,526	5,750	5,560	5,543	1.59%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각 연도(2001년~2014년)

한편,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인 최저생계비 120%의 인구를 보면, 전라북도는 2013년 말 기준 7,940명 정도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Ⅳ-9〉 차상위 우선돌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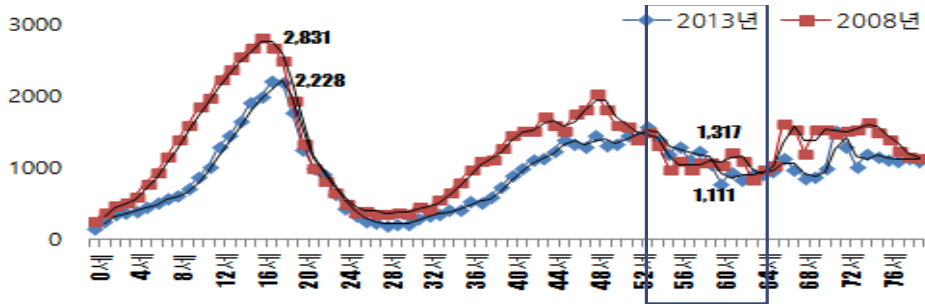
구분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9월	2013년 10월	2013년 11월	2013년 12월	기초 수급자 대비비율
서울	11,679	12,549	13,490	14,884	15,682	16,464	17,898	19,390	20,882	21,664	22,380	22,793	
부산	5,679	5,962	6,357	6,679	6,853	7,002	7,192	7,362	7,658	7,900	8,051	8,143	
대구	3,560	3,636	3,774	3,854	3,892	3,935	3,977	4,022	4,155	4,243	4,299	4,326	
인천	4,805	5,115	5,360	5,695	5,921	6,025	6,164	6,237	6,385	6,526	6,646	6,727	
광주	3,461	3,576	3,748	3,894	3,969	4,053	4,122	4,200	4,315	4,398	4,427	4,433	
대전	2,359	2,483	2,632	2,694	2,778	2,801	2,863	2,909	2,941	2,981	3,049	3,088	
울산	1,042	1,121	1,182	1,233	1,268	1,288	1,317	1,381	1,427	1,465	1,492	1,518	
세종	171	183	189	193	194	191	196	194	196	205	213	215	
경기	10,179	10,780	11,326	11,956	12,276	12,510	12,794	13,093	13,570	13,959	14,466	14,703	
강원	5,191	5,351	5,495	5,602	5,673	5,767	5,871	5,974	6,089	6,214	6,249	6,314	
충북	4,159	4,356	4,558	4,690	4,763	4,830	4,898	4,977	5,133	5,178	5,237	5,290	
충남	6,974	7,170	7,380	7,552	7,642	7,714	7,839	8,054	8,199	8,310	8,424	8,457	
전북	6,664	6,729	6,980	7,160	7,326	7,401	7,471	7,513	7,591	7,806	7,860	7,940	
전남	11,052	11,269	11,441	11,603	11,674	11,756	11,834	11,925	11,968	12,138	12,305	12,294	
경북	9,497	9,760	10,027	10,219	10,407	10,527	10,701	10,868	11,119	11,286	11,644	11,757	
경남	9,047	9,347	9,654	9,810	9,916	10,005	10,133	10,160	10,348	10,502	10,531	10,605	
제주	1,045	1,077	1,143	1,167	1,200	1,207	1,223	1,251	1,272	1,285	1,290	1,293	
합계	96,564	100,464	104,736	108,885	111,434	113,476	116,493	119,510	123,248	126,060	128,563	129,896	

자료 : 보건복지부(201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전라북도의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라북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은 4.8%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높은 것은 전라북도의 절대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곤가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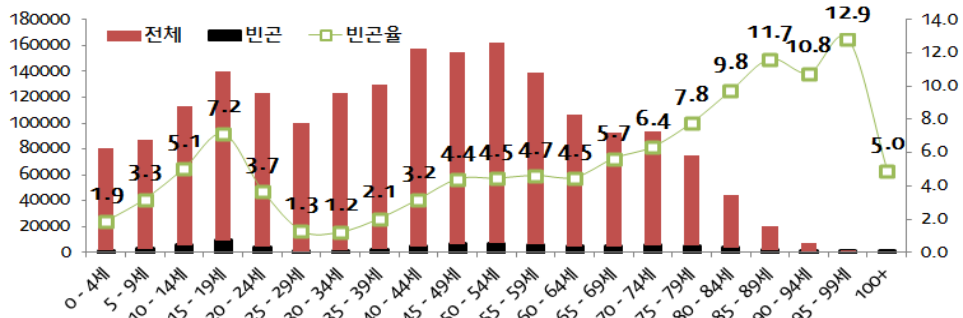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빈곤율은 2004년 5.9%에서 2013년 4.8%로 1.1%p 감소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절대인구수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15세의 청소년과 48세의 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Ⅳ-2〉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분포 중 12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의 빈곤율과 44세-48세 청장년의 빈곤율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Ⅳ-3〉 전라북도 연령대별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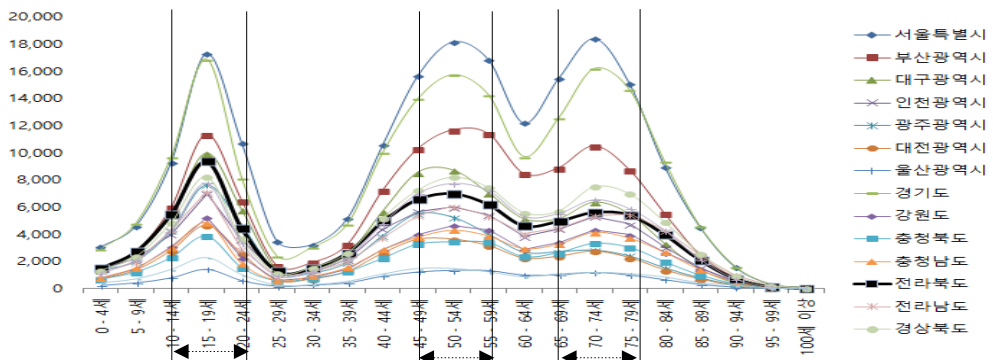
〈표Ⅳ-10〉 전라북도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구분	0세 4세	5세 9세	10세 14세	15세 19세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35세 39세	40세 44세	45세 49세	50세 54세	55세 59세	60세 64세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80세 84세	85세 89세	90세 94세	95세 100세	100세 이상
빈곤 (명)	1517	2738	5483	9374	4434	1301	1516	2638	4946	6588	7000	6199	4631	4979	5631	5439	3981	2122	738	181	29
전체 (백명)	795	841	1073	1308	1188	989	1216	1273	1530	1483	1558	1329	1020	875	882	693	407	182	68	141	3
빈곤율 (%)	1.9	3.3	5.1	7.2	3.7	1.3	1.2	2.1	3.2	4.4	4.5	4.7	4.5	5.7	6.4	7.8	9.8	11.7	10.8	12.9	5.0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연령대별로 세분화시켜 보면, 전라북도의 평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상회하는 연령대는 10세~19세 아동청소년, 50세 이상 청장년 및 노인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이 같은 구성은 전국적으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대부분 50대의 장년층이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장년층보다는 15세의 아동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빈곤위험구간이 15세의 아동기와 50세의 장년기 그리고 70세의 노년기 등 총 세 연령대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아동기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세의 장년기 그리고 70세의 노년기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노년기와 장년기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Ⅳ-4〉 지역별·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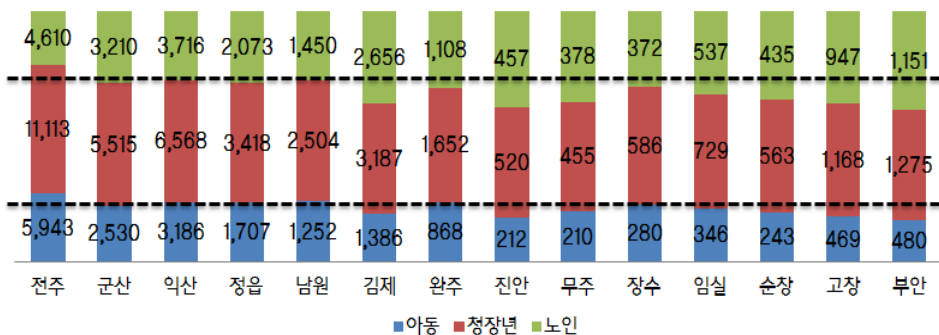
〈표Ⅳ-11〉 전라북도 지역별·세대별 빈곤인구 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빈곤인구 대비	아동	5,943	2,530	3,186	1,707	1,252	1,386	868	212	210	280	346	243	469	480	19,112
	청장년	11,113	5,515	6,568	3,418	2,504	3,187	1,652	520	455	586	729	563	1,168	1,275	39,253
	노인	4,610	3,210	3,716	2,073	1,450	2,656	1,108	457	378	372	537	435	947	1,151	23,100
	전체	21,666	11,255	13,470	7,198	5,206	7,229	3,628	1,189	1,043	1,238	1,612	1,241	2,584	2,906	81,465
빈곤율 대비	아동	27.4	22.5	23.7	23.7	24.0	19.2	23.9	17.8	20.1	22.6	21.5	19.6	18.2	16.5	23.5
	청장년	51.3	49.0	48.8	47.5	48.1	44.1	45.5	43.7	43.6	47.3	45.2	45.4	45.2	43.9	48.2
	노인	21.3	28.5	27.6	28.8	27.9	36.7	30.5	38.4	36.2	30.0	33.3	35.1	36.6	39.6	28.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인구 대비	아동	3.86	4.18	4.92	7.73	7.58	9.61	4.71	5.47	5.23	7.66	8.21	5.08	4.88	5.37	4.90
	청장년	2.62	3.10	3.38	5.04	5.10	6.17	3.03	3.56	3.22	4.51	4.45	3.43	3.53	3.91	3.39
	노인	6.13	8.12	8.21	7.59	7.25	11.05	6.36	5.72	5.22	5.55	5.74	4.75	5.45	7.21	7.16
	전체	3.32	4.05	4.43	6.14	6.08	8.02	4.01	4.49	4.11	5.31	5.38	4.09	4.30	5.05	4.35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각연도 자료 재구성

지역별로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진안, 부안 등 농촌지역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전체 빈곤인구의 3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전주, 군산 등 도시권은 청장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인구 대비 4.90%, 청장년 3.39%, 노인은 7.16% 수준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로만 파악할 경우 노인은 10명 중 0.7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법정빈곤층으로 분류된다.

〈그림Ⅳ-5〉 연령대별 빈곤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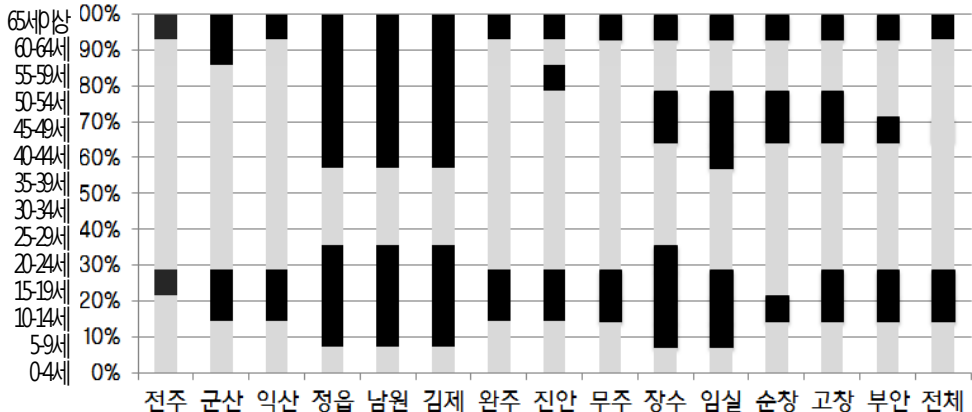
한편, 전라북도의 세대별 인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15세에서 19세의 아동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7.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7.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5세에서 65세 미만까지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평균 5%를 상회하고 있어 전라북도는 장년층 아동청소년 그리고 노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의 연령대별 빈곤인구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대비 해당 연령대의 빈곤비율이 5%이상을 초과하는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는 15세에서 19세 구간과 65세 이상 구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산지역은 10세에서 19세 시간과 60세 이상의 구간에서 전체 인구대비 빈곤율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대비 빈곤율이 5%를 초과하는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정읍, 남원, 김제 등의 지역으로 이들지역은 5세에서 24세 그리고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체 인구 대비 빈곤율이 5%를 상회하는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특히 아동청소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층에서 특히 빈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완주를 비롯한 농촌지역은 대체로 15세에서 19세의 아동기와 65세 이상의 노년기에서 빈곤율이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년층에서는 빈곤율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10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기와 65세 이상의 노년기에서 빈곤율이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6〉 지역별 전체 인구대비 빈곤율 5%이상 연령대 현황



〈표Ⅳ-12〉 전라북도 지역별·세대별 빈곤인구 현황

구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전체인구	79,504	84,055	107,285	130,806	118,776	98,854	121,636	127,319	152,961	148,258	155,784	132,941	102,022	312,764	
	수급자수	1,592	2,914	6,366	10,162	4,303	1,280	1,658	2,864	5,452	6,858	7,256	5,975	4,452	23,588
	수급자비율	2.00	3.47	5.93	7.77	3.62	1.29	1.36	2.25	3.56	4.63	4.66	4.49	4.36	7.54
전체인구	29,776	32,270	43,238	52,752	47,197	38,920	46,927	48,788	58,677	54,875	53,423	41,502	30,001	71,736	
	수급자 수	504	872	1,908	3,129	1,469	416	498	822	1,665	1,943	1,916	1,431	990	4,508
	수급자비율	1.69	2.70	4.41	5.93	3.11	1.07	1.06	1.68	2.84	3.54	3.59	3.45	3.30	6.28
전체인구	13,700	13,415	16,242	18,435	16,596	14,969	21,293	21,356	24,515	21,744	22,978	20,117	14,886	38,073	
	수급자 수	188	379	861	1,258	549	153	243	392	740	895	985	917	753	3,244
	수급자비율	1.37	2.83	5.30	6.82	3.31	1.02	1.14	1.84	3.02	4.12	4.29	4.56	5.06	8.52
전체인구	12,984	14,081	17,952	22,618	21,677	17,158	20,127	21,127	25,554	25,415	26,376	21,946	15,793	43,731	
	수급자 수	284	489	1,081	1,679	692	186	280	494	933	1,149	1,185	1,050	765	3,759
	수급자비율	2.19	3.47	6.02	7.42	3.19	1.08	1.39	2.34	3.65	4.52	4.49	4.78	4.84	8.60
전체인구	4,120	4,677	6,370	7,888	6,701	5,163	6,129	7,177	8,931	9,101	9,628	8,752	7,006	26,685	
	수급자 수	144	263	586	990	370	112	133	275	462	658	662	530	374	2,177
	수급자비율	3.50	5.62	9.20	12.55	5.52	2.17	2.17	3.83	5.17	7.23	6.88	6.06	5.34	8.16
전체인구	3,113	3,723	4,762	5,650	4,697	3,731	4,238	4,992	6,597	6,519	7,196	6,357	5,274	19,611	
	수급자 수	112	218	427	663	256	84	92	174	353	425	490	408	292	1,524
	수급자비율	3.60	5.86	8.97	11.73	5.45	2.25	2.17	3.49	5.35	6.52	6.81	6.42	5.54	7.77
전체인구	3,015	3,138	3,870	5,100	4,778	4,163	4,644	4,908	5,978	6,509	7,762	7,411	6,349	23,593	
	수급자 수	105	213	485	787	354	101	130	218	382	559	644	557	431	2,761
	수급자비율	3.48	6.79	12.53	15.43	7.41	2.43	2.80	4.44	6.39	8.59	8.30	7.52	6.79	11.70
전체인구	4,568	4,407	4,288	4,827	4,384	4,160	6,267	6,143	6,652	6,176	6,925	6,375	5,018	16,788	
	수급자 수	74	146	285	443	167	62	82	127	255	269	313	224	165	1,145
	수급자비율	1.62	3.31	6.65	9.18	3.81	1.49	1.31	2.07	3.83	4.36	4.52	3.51	3.29	6.82
전체인구	1,073	836	981	1,207	1,130	1,053	1,323	1,344	1,621	1,824	2,363	2,168	1,908	7,872	
	수급자 수	23	38	65	114	48	10	23	34	62	86	104	111	67	514
	수급자비율	2.14	4.55	6.63	9.44	4.25	0.95	1.74	2.53	3.82	4.71	4.40	5.12	3.51	6.53
전체인구	904	955	1,005	1,265	1,180	985	1,227	1,359	1,640	1,801	2,141	2,060	1,699	7,177	
	수급자 수	23	23	66	135	39	17	17	28	60	86	100	57	56	390
	수급자비율	2.54	2.41	6.57	10.67	3.31	1.73	1.39	2.06	3.66	4.78	4.67	2.77	3.30	5.43
전체인구	802	856	868	1,194	1,099	930	1,096	1,112	1,449	1,682	1,933	1,888	1,693	6,641	
	수급자 수	26	63	79	116	60	22	24	30	65	109	119	89	65	384
	수급자비율	3.24	7.36	9.10	9.72	5.46	2.37	2.19	2.70	4.49	6.48	6.16	4.71	3.84	5.78
전체인구	976	882	1,028	1,359	1,447	1,295	1,391	1,404	1,747	2,094	2,538	2,281	2,078	9,219	
	수급자 수	38	63	117	164	47	33	26	58	102	134	140	97	88	584
	수급자비율	3.89	7.14	11.38	12.07	3.25	2.55	1.87	4.13	5.84	6.40	5.52	4.25	4.23	6.33
전체인구	976	1,062	1,293	1,592	1,473	1,209	1,461	1,614	1,934	2,040	2,412	2,233	1,949	9,024	
	수급자 수	25	41	69	132	50	17	28	50	63	116	123	77	64	455
	수급자비율	2.56	3.86	5.34	8.29	3.39	1.41	1.92	3.10	3.26	5.69	5.10	3.45	3.28	5.04
전체인구	1,729	1,866	2,746	3,592	3,249	2,582	2,674	2,925	3,861	4,253	5,049	4,895	4,162	16,939	
	수급자 수	21	58	161	276	81	34	42	77	155	215	247	195	149	1,353
	수급자비율	1.21	3.11	5.86	7.68	2.49	1.32	1.57	2.63	4.01	5.06	4.89	3.98	3.58	7.99
전체인구	1,768	1,887	2,642	3,327	3,168	2,536	2,839	3,070	3,805	4,225	5,060	4,956	4,206	15,675	
	수급자 수	25	48	176	276	121	33	40	85	155	217	228	232	193	1,196
	수급자비율	1.41	2.54	6.66	8.30	3.82	1.30	1.41	2.77	4.07	5.14	4.51	4.68	4.59	7.63

〈표Ⅳ-13〉 가구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계	노인가구	소년 소녀 가장 가구	모자 가구	부자 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 가구	기타	노인 가구 비율	소년 소녀 가장 가구 비율	모자 가구 비율	부자 가구 비율	장애인 가구 비율	일반 가구 비율	기타 가구 비율
계	814,184	236,548	5,882	74,925	18,362	178,397	251,333	48,737	29.05	0.72	9.20	2.26	21.91	30.87	5.99
서울	129,895	40,396	571	12,387	2,636	25,682	39,296	8,927	31.10	0.44	9.54	2.03	19.77	30.25	6.87
부산	81,570	22,903	480	7,697	2,053	16,257	27,753	4,427	28.08	0.59	9.44	2.52	19.93	34.02	5.43
대구	54,306	13,258	275	7,054	1,545	9,667	19,771	2,736	24.41	0.51	12.99	2.84	17.80	36.41	5.04
인천	42,975	12,147	318	4,870	1,035	8,782	12,733	3,090	28.27	0.74	11.33	2.41	20.44	29.63	7.19
광주	31,960	6,352	290	5,104	1,117	6,524	10,995	1,578	19.87	0.91	15.97	3.49	20.41	34.40	4.94
대전	24,618	6,105	102	2,979	673	5,470	8,240	1,049	24.80	0.41	12.10	2.73	22.22	33.47	4.26
울산	10,193	2,937	98	777	237	2,282	3,070	792	28.81	0.96	7.62	2.33	22.39	30.12	7.77
세종	1,787	525	8	126	27	361	568	172	29.38	0.45	7.05	1.51	20.20	31.79	9.63
경기	119,755	38,856	1,054	10,364	2,383	26,212	32,532	8,354	32.45	0.88	8.65	1.99	21.89	27.17	6.98
강원	34,212	10,389	386	2,628	714	7,707	10,240	2,148	30.37	1.13	7.68	2.09	22.53	29.93	6.28
충북	26,800	7,753	253	1,921	497	6,859	8,054	1,463	28.93	0.94	7.17	1.85	25.59	30.05	5.46
충남	32,602	9,951	261	2,304	592	8,634	8,979	1,881	30.52	0.80	7.07	1.82	26.48	27.54	5.77
전북	50,515	13,002	441	4,421	1,077	12,370	16,493	2,711	25.74	0.87	8.75	2.13	24.49	32.65	5.37
전남	46,106	14,541	499	2,858	941	12,305	12,452	2,510	31.54	1.08	6.20	2.04	26.69	27.01	5.44
경북	60,038	17,476	354	4,348	1,295	13,321	19,994	3,250	29.11	0.59	7.24	2.16	22.19	33.30	5.41
경남	55,858	16,451	431	3,816	1,151	13,633	17,276	3,100	29.45	0.77	6.83	2.06	24.41	30.93	5.55
제주	10,994	3,506	61	1,271	389	2,331	2,887	549	31.89	0.55	11.56	3.54	21.20	26.26	4.99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 재구성

다음으로 가구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일반가구의 비율이 32.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가구 25.74%, 장애인가구 24.49%, 모자가구 8.75%, 부자가구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인가구와 모자가구, 부자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다른 가구보다도 일반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능력을 상실한 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Ⅳ-14〉 전라북도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수						한부모	
	계		일반		조건부		시설				계		일반		조건부			
합계	87,008	100.0	75,075	86.29	6,390	7.34	5,543	6.37	14,341	16.48	50,515	100.0	47,991	95.00	2,524	5.00	5,428	10.75
전주	22,695	100.0	19,741	86.98	1,925	8.48	1,029	4.53	5,964	26.28	12,634	100.0	11,880	94.03	754	5.97	2,254	17.84
군산	12,046	100.0	10,263	85.20	992	8.24	791	6.57	1,891	15.70	7,092	100.0	6,703	94.51	389	5.49	729	10.28
익산	14,963	100.0	12,149	81.19	1,321	8.83	1,493	9.98	2,475	16.54	8,322	100.0	7,817	93.93	505	6.07	929	11.16
정읍	7,570	100.0	6,636	87.66	562	7.42	372	4.91	871	11.51	4,434	100.0	4,204	94.81	230	5.19	325	7.33
남원	5,635	100.0	4,963	88.07	243	4.31	429	7.61	556	9.87	3,198	100.0	3,094	96.75	104	3.25	212	6.63
김제	7,443	100.0	7,021	94.33	208	2.79	214	2.88	612	8.22	4,678	100.0	4,593	98.18	85	1.82	236	5.04
완주	4,152	100.0	3,431	82.63	197	4.74	524	12.62	501	12.07	2,280	100.0	2,206	96.75	74	3.25	195	8.55
진안	1,276	100.0	1,092	85.58	97	7.60	87	6.82	97	7.60	796	100.0	756	94.97	40	5.03	34	4.27
무주	1,102	100.0	965	87.57	78	7.08	59	5.35	124	11.25	717	100.0	681	94.98	36	5.02	47	6.56
장수	1,281	100.0	1,152	89.93	86	6.71	43	3.36	117	9.13	753	100.0	717	95.22	36	4.78	42	5.58
임실	1,716	100.0	1,440	83.92	172	10.02	104	6.06	84	4.90	1,005	100.0	939	93.43	66	6.57	32	3.18
순창	1,338	100.0	1,153	86.17	88	6.58	97	7.25	144	10.76	810	100.0	775	95.68	35	4.32	56	6.91
고창	2,823	100.0	2,405	85.19	179	6.34	239	8.47	511	18.10	1,825	100.0	1,749	95.84	76	4.16	187	10.25
부안	2,968	100.0	2,664	89.76	242	8.15	62	2.09	394	13.27	1,971	100.0	1,877	95.23	94	4.77	150	7.61

자료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한편,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형을 보면, 전체 약 87,008명 중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75,07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86.3%를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는 7.3% 그리고 나머지는 6.4%를 시설수급자였다. 14개 시군별로 시설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완주군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12.62%가 시설수급자였고, 이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이 많은 완주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완주군의 시설수급자는 524명으로 전체 시설수급자 5,543명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완주군은 시설수급자 10명 중 약 한명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부안군 62명(2.09%), 김제시 214명(2.88%) 등으로 이들 지역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기초생활수급자 중 시설수급자의 비율이 낮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 수급자는 14,341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16.48%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전주시와 고창군 그리고 익산시 등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한부모 수급자가 많았다.

다음으로 조건부 수급자는 총 6,39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7.34%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임실군이 172명으로 비율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익산시 8.83%, 전주 9.48% 등의 순이었다.

〈표Ⅳ-15〉 가구원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구분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인 가구 비율	2인 가구 비율	3인 가구 비율	4인 가구 비율	5인 가구 비율	6인 가구 비율	7인 가구 비율	4인 가구 이상
서울	129,895	89,797	22,187	11,139	4,861	1,350	390	171	69.13	17.08	8.58	3.74	1.04	0.30	0.13	5.21
부산	81,570	56,781	13,995	7,019	2,776	742	183	74	69.61	17.16	8.60	3.40	0.91	0.22	0.09	4.63
대구	54,306	34,005	10,564	6,432	2,383	691	174	57	62.62	19.45	11.84	4.39	1.27	0.32	0.10	6.09
인천	42,975	28,075	8,046	4,281	1,792	566	155	60	65.33	18.72	9.96	4.17	1.32	0.36	0.14	5.99
광주	31,960	18,441	6,021	4,412	2,093	731	199	63	57.70	18.84	13.80	6.55	2.29	0.62	0.20	9.66
대전	24,618	15,682	4,490	2,638	1,217	414	127	50	63.70	18.24	10.72	4.94	1.68	0.52	0.20	7.34
울산	10,193	7,624	1,435	711	290	88	32	13	74.80	14.08	6.98	2.85	0.86	0.31	0.13	4.15
세종	1,787	1,249	304	124	77	19	10	4	69.89	17.01	6.94	4.31	1.06	0.56	0.22	6.16
경기	119,755	85,209	19,763	9,127	3,927	1,164	350	215	71.15	16.50	7.62	3.28	0.97	0.29	0.18	4.72
강원	34,212	23,845	6,121	2,610	1,092	387	96	61	69.70	17.89	7.63	3.19	1.13	0.28	0.18	4.78
충북	26,800	19,008	4,622	1,956	778	284	100	52	70.93	17.25	7.30	2.90	1.06	0.37	0.19	4.53
충남	32,602	22,858	5,651	2,413	1,097	384	125	74	70.11	17.33	7.40	3.36	1.18	0.38	0.23	5.15
전북	50,515	32,778	9,258	4,791	2,429	833	288	138	64.89	18.33	9.48	4.81	1.65	0.57	0.27	7.30
전남	46,106	32,025	8,213	3,310	1,635	605	202	116	69.46	17.81	7.18	3.55	1.31	0.44	0.25	5.55
경북	60,038	42,370	10,339	4,523	1,949	610	154	93	70.57	17.22	7.53	3.25	1.02	0.26	0.15	4.67
경남	55,858	40,338	8,944	4,093	1,691	554	156	82	72.22	16.01	7.33	3.03	0.99	0.28	0.15	4.45
제주	10,994	7,190	1,868	1,051	545	212	83	45	65.40	16.99	9.56	4.96	1.93	0.75	0.41	8.05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각연도 자료 재구성

아울러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보면, 4인 이상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7.30%로 광주, 대전, 제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라북도는 가구주의 빈곤으로 인한 가구원의 빈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유형별 현황에서는 자가가가가 21.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아파트가 19.88%, 보증부 월세 11.75%, 월세 10.42% 등의 순이었다. 가정위탁과 그룹홈 거주는 1% 미만이었다.

전라북도의 주거유형별 수급자 비율에서는 자가가가가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중 긴급보수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6〉 주거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단위 : %)

구분	계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영구·전세 매입 국민임대 주택	가정위탁	보장기관 제공거주	그룹홈 거주	기타
계	100.00	10.08	7.64	14.11	15.74	22.12	0.13	1.39	0.33	28.46
서울	100.00	0.95	13.27	13.92	22.73	26.22	0.28	0.34	0.46	21.83
부산	100.00	5.76	8.75	8.90	24.88	26.29	0.02	1.25	0.15	23.99
대구	100.00	3.89	9.41	21.17	16.40	28.18	0.05	0.50	0.19	20.21
인천	100.00	7.41	11.87	14.25	13.16	26.46	0.07	0.30	0.25	26.23
광주	100.00	5.34	6.90	15.80	13.48	37.14	0.08	0.13	0.35	20.79
대전	100.00	4.65	6.78	11.49	15.68	41.00	0.06	0.45	0.69	19.20
울산	100.00	3.43	4.50	13.67	23.94	20.75	0.25	7.45	0.24	25.78
세종	100.00	19.47	5.60	17.01	6.60	7.11	0.28	0.11	0.11	43.70
경기	100.00	4.11	9.04	13.42	15.74	24.48	0.08	1.42	0.51	31.20
강원	100.00	16.88	4.07	16.90	13.19	13.38	0.37	1.12	0.29	33.79
충북	100.00	16.07	4.72	11.98	9.51	21.88	0.09	1.32	0.57	33.85
충남	100.00	18.00	3.35	13.94	9.58	13.66	0.09	1.38	0.23	39.76
전북	100.00	21.03	4.62	10.41	11.75	19.88	0.10	0.46	0.32	31.44
전남	100.00	31.03	3.95	11.55	4.39	8.61	0.09	1.59	0.18	38.60
경북	100.00	20.71	3.58	18.61	8.28	11.44	0.15	3.01	0.14	34.09
경남	100.00	14.73	3.93	12.97	17.76	13.19	0.11	4.92	0.31	32.06
제주	100.00	7.55	0.84	34.25	10.47	11.07	0.01	1.11	0.35	34.36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 재구성

〈표Ⅳ-17〉 주거상태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현황(가구)							비율(%)					
	계	양호	개축	긴급 보수	편의 도보수	환경 개선	기타	양호	개축	긴급 보수	편의 도보수	환경 개선	기타
계	814,184	612,360	3,971	3,289	33,081	41,361	120,122	75.21	0.49	0.40	4.06	5.08	14.75
서울	129,895	96,083	356	156	1,231	3,227	28,842	73.97	0.27	0.12	0.95	2.48	22.20
부산	81,570	62,999	298	242	1,978	3,740	12,313	77.23	0.37	0.30	2.42	4.59	15.10
대구	54,306	43,883	127	70	853	1,659	7,714	80.81	0.23	0.13	1.57	3.05	14.20
인천	42,975	33,397	143	106	653	1,217	7,459	77.71	0.33	0.25	1.52	2.83	17.36
광주	31,960	26,781	83	50	471	933	3,642	83.80	0.26	0.16	1.47	2.92	11.40
대전	24,618	20,224	76	47	737	948	2,586	82.15	0.31	0.19	2.99	3.85	10.50
울산	10,193	8,199	42	33	239	353	1,327	80.44	0.41	0.32	2.34	3.46	13.02
세종	1,787	1,144	11	13	77	146	396	64.02	0.62	0.73	4.31	8.17	22.16
경기	119,755	90,941	566	289	2,458	3,963	21,538	75.94	0.47	0.24	2.05	3.31	17.99
강원	34,212	25,621	169	197	2,144	2,109	3,972	74.89	0.49	0.58	6.27	6.16	11.61
충북	26,800	19,801	198	215	2,016	1,635	2,935	73.88	0.74	0.80	7.52	6.10	10.95
충남	32,602	22,875	186	272	2,354	3,116	3,799	70.16	0.57	0.83	7.22	9.56	11.65
전북	50,515	37,613	394	359	3,807	4,160	4,182	74.46	0.78	0.71	7.54	8.24	8.28
전남	46,106	30,642	448	383	4,704	5,469	4,460	66.46	0.97	0.83	10.20	11.86	9.67
경북	60,038	42,753	309	466	5,338	4,356	6,816	71.21	0.51	0.78	8.89	7.26	11.35
경남	55,858	40,761	524	363	3,600	3,604	7,006	72.97	0.94	0.65	6.44	6.45	12.54
제주	10,994	8,643	41	28	421	726	1,135	78.62	0.37	0.25	3.83	6.60	10.32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 재구성

〈표Ⅳ-18〉 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

년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8년	가구	115,574	78,689	51,142	38,069	29,705	23,703	10,914		120,653	37,679	31,686	41,689	61,896	65,839	72,408	62,779
	인원	206,133	138,890	100,113	69,786	61,339	46,635	18,741		207,821	64,679	57,400	74,105	115,093	114,922	124,538	106,597
'09년	가구	121,829	83,138	55,691	40,338	31,865	24,998	11,468		124,497	39,113	32,677	42,485	61,564	63,680	73,588	63,590
	인원	215,016	144,860	107,918	73,055	65,487	48,633	19,393		212,037	66,973	58,505	74,780	113,782	110,725	125,702	107,294
'10년	가구	122,745	84,620	56,954	40,817	32,484	25,118	11,340		122,783	38,876	31,982	41,587	60,353	61,352	72,155	63,004
	인원	214,256	145,198	108,586	73,749	65,821	48,338	18,851		209,175	66,503	57,408	72,989	110,894	106,210	122,450	104,797
'11년	가구	121,283	84,211	56,299	40,650	31,537	24,798	10,695		119,953	37,339	30,334	38,827	56,971	56,680	68,284	60,436
	인원	206,808	141,597	104,532	71,700	62,482	46,549	17,191		199,335	62,543	53,370	66,884	103,085	96,503	113,990	98,939
'12년	가구	120,704	82,491	54,784	40,840	31,148	24,471	10,090	1,872	117,096	35,609	28,553	34,513	53,778	51,926	63,987	58,408
	인원	199,310	135,973	99,473	70,860	60,684	44,992	15,804	3,442	192,170	58,820	49,669	58,363	95,656	87,670	105,193	93,977
'13년	가구	124,627	81,515	54,487	41,552	31,273	24,353	9,927	1,803	117,054	34,568	27,103	32,976	51,637	48,417	61,352	56,546
	인원	201,958	130,835	96,803	70,984	59,962	44,066	15,353	3,304	189,259	56,184	46,372	54,970	90,280	80,315	99,437	89,622
'09-'08	가구	6,255	4,449	4,549	2,269	2,160	1,295	554		3,844	1,434	991	796	-332	-2,159	1,180	811
	인원	8,883	5,970	7,805	3,269	4,148	1,998	652		4,216	2,294	1,105	675	-1,311	-4,197	1,164	697
'10-'09	가구	916	1,482	1,263	479	619	120	-128		-1,714	-237	-695	-898	-1,211	-2,328	-1,433	-586
	인원	-760	338	668	694	334	-295	-542		-2,862	-470	-1,097	-1,791	-2,888	-4,515	-3,252	-2,497
'11-'10	가구	-1,462	-409	-655	-167	-947	-320	-645		-2,830	-1,537	-1,648	-2,760	-3,382	-4,672	-3,871	-2,568
	인원	-7,448	-3,601	-4,054	-2,049	-3,339	-1,789	-1,660		-9,840	-3,960	-4,038	-6,105	-7,809	-9,707	-8,460	-5,858
'12-'11	가구	-579	-1,720	-1,515	190	-389	-327	-605	1,872	-2,857	-1,730	-1,781	-4,314	-3,193	-4,754	-4,297	-2,028
	인원	-7,498	-5,624	-5,059	-840	-1,798	-1,557	-1,387	3,442	-7,165	-3,723	-3,701	-8,521	-7,429	-8,833	-8,797	-4,962
'13-'12	가구	3,923	-976	-297	712	125	-118	-163	-69	-42	-1,041	-1,450	-1,537	-2,141	-3,509	-2,635	-1,862
	인원	2,648	-5,138	-2,670	124	-722	-926	-451	-138	-2,911	-2,636	-3,297	-3,383	-5,376	-7,355	-5,756	-4,355
'13-'08	가구	9,053	2,826	3,345	3,483	1,568	650	-987	1,803	-3,599	-3,111	-4,583	-8,713	-10,259	-17,422	-11,056	-6,233
	인원	-4,175	-8,055	-3,310	1,198	-1,377	-2,569	-3,388	3,304	-18,562	-8,495	-11,028	-19,135	-24,813	-34,607	-25,101	-16,975

기초생활수급자의 전년대비 증가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수급자 가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감소폭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6천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1만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60,353가구였지만 2012년에는 53,778가구로 6,575가구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는 110,894명에서 95,656명으로 15,238명이 감소했다.

〈표Ⅳ-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

구분	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년 이상	5년이상 수급자	5년이상 수급자 비율
전체	814,184	80,256	64,253	75,561	92,661	59,179	49,358	79,413	81,424	232,079	442,274	54.32
서울	129,895	15,831	13,269	11,078	11,847	8,864	8,317	13,809	13,248	33,632	69,006	53.12
부산	81,570	7,628	6,038	6,838	7,115	5,930	5,729	8,744	9,292	24,256	48,021	58.87
대구	54,306	4,805	4,250	4,269	4,613	3,956	4,438	6,264	6,245	15,466	32,413	59.69
인천	42,975	5,137	4,019	4,260	4,400	3,180	2,699	4,410	4,339	10,531	21,979	51.14
광주	31,960	3,476	2,617	2,755	2,567	2,772	2,253	3,108	3,397	9,015	17,773	55.61
대전	24,618	2,211	1,810	2,087	2,483	1,824	1,550	2,557	2,695	7,401	14,203	57.69
울산	10,193	1,172	791	1,378	680	599	669	973	1,069	2,862	5,573	54.67
세종	1,787	164	138	131	116	74	112	194	190	668	1,164	65.14
경기	119,755	13,424	10,271	11,705	16,452	8,728	6,781	11,388	11,106	29,900	59,175	49.41
강원	34,212	3,191	2,703	3,423	5,014	2,428	2,088	3,115	3,179	9,071	17,453	51.01
충북	26,800	2,422	1,743	2,052	3,671	2,104	1,598	2,590	2,660	7,960	14,808	55.25
충남	32,602	2,955	2,252	2,965	4,197	2,540	1,853	2,974	2,867	9,999	17,693	54.27
전북	50,515	3,814	3,072	4,959	7,042	4,123	2,267	4,235	5,021	15,982	27,505	54.45
전남	46,106	3,396	2,701	4,227	5,193	3,114	2,193	3,730	4,229	17,323	27,475	59.59
경북	60,038	4,776	3,777	4,900	7,803	4,330	3,398	5,523	5,734	19,797	34,452	57.38
경남	55,858	4,854	3,889	7,500	7,786	3,711	2,731	4,649	5,164	15,574	28,118	50.34
제주	10,994	1,000	913	1,034	1,682	902	682	1,150	989	2,642	5,463	49.69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장기수급자의 경우 27,50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54.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5년 이상 장기수급자 비율인 54.3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을 추세로 살펴보면, 1년미만 단기수급자의 경우 2007년 5,365명에서 2014년 3,814명으로 감소했다.

〈표Ⅳ-2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

가구원수	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년 이상
2007년	62,952	5,365	6,205	6,512	5,297	4,668	3,362	31,481	53	9
2008년	61,896	3,990	5,263	5,615	5,939	4,854	4,259	5,904	25,615	457
2009년	61,564	4,800	4,017	4,777	5,172	5,463	4,515	6,766	25,766	288
2010년	60,353	8,898	4,188	3,225	4,057	4,279	4,722	7,007	4,815	19,162
2011년	56,971	12,243	6,179	3,511	2,680	3,256	3,395	6,450	4,354	14,903
2012년	53,778	6,623	9,041	5,198	2,850	2,262	2,801	6,064	4,616	14,323
2013년	51,637	3,595	5,678	7,897	4,575	2,497	2,033	5,226	5,000	15,136
2014년	50,515	3,814	3,072	4,959	7,042	4,123	2,267	4,235	5,021	15,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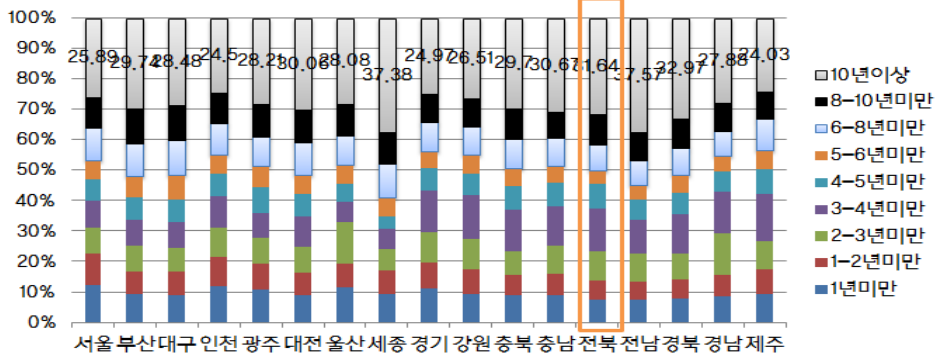
〈표Ⅳ-21〉 보장기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

구분	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100.00	9.86	7.89	9.28	11.38	7.27	6.06	9.75	10.00	28.50
서울	100.00	12.19	10.22	8.53	9.12	6.82	6.40	10.63	10.20	25.89
부산	100.00	9.35	7.40	8.38	8.72	7.27	7.02	10.72	11.39	29.74
대구	100.00	8.85	7.83	7.86	8.49	7.28	8.17	11.53	11.50	28.48
인천	100.00	11.95	9.35	9.91	10.24	7.40	6.28	10.26	10.10	24.50
광주	100.00	10.88	8.19	8.62	8.03	8.67	7.05	9.72	10.63	28.21
대전	100.00	8.98	7.35	8.48	10.09	7.41	6.30	10.39	10.95	30.06
울산	100.00	11.50	7.76	13.52	6.67	5.88	6.56	9.55	10.49	28.08
세종	100.00	9.18	7.72	7.33	6.49	4.14	6.27	10.86	10.63	37.38
경기	100.00	11.21	8.58	9.77	13.74	7.29	5.66	9.51	9.27	24.97
강원	100.00	9.33	7.90	10.01	14.66	7.10	6.10	9.10	9.29	26.51
충북	100.00	9.04	6.50	7.66	13.70	7.85	5.96	9.66	9.93	29.70
충남	100.00	9.06	6.91	9.09	12.87	7.79	5.68	9.12	8.79	30.67
전북	100.00	7.55	6.08	9.82	13.94	8.16	4.49	8.38	9.94	31.64
전남	100.00	7.37	5.86	9.17	11.26	6.75	4.76	8.09	9.17	37.57
경북	100.00	7.95	6.29	8.16	13.00	7.21	5.66	9.20	9.55	32.97
경남	100.00	8.69	6.96	13.43	13.94	6.64	4.89	8.32	9.24	27.88
제주	100.00	9.10	8.30	9.41	15.30	8.20	6.20	10.46	9.00	24.03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 재구성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기간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수급자가 31.64%로 전남과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장기수급자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탈수급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Ⅳ-7〉 보장기간별 현황



〈표Ⅳ-22〉 소득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계	소득 없음	0 원 ~ 10 만원	10 만원 ~ 20 만원	20 만원 ~ 30 만원	30 만원 ~ 40 만원	40 만원 ~ 50 만원	50 만원 ~ 60 만원	60 만원 ~ 70 만원	70 만원 ~ 80 만원	80 만원 ~ 90 만원	90 만원 ~ 100 만원	100 만원 ~ 110 만원	110 만원 ~ 120 만원	120 만원 초과
계	100.00	24.33	12.52	20.20	10.71	8.60	4.92	4.30	4.26	2.23	1.71	1.25	0.91	0.78	3.29
서울	100.00	27.51	10.43	22.43	10.14	8.44	4.44	3.92	3.70	1.92	1.36	1.13	0.82	0.71	3.05
부산	100.00	28.56	11.15	20.80	9.35	7.52	4.58	4.06	4.07	2.07	1.69	1.16	0.87	0.79	3.33
대구	100.00	24.66	9.84	18.13	9.60	8.28	5.34	4.86	6.14	2.83	2.19	1.63	1.17	1.06	4.26
인천	100.00	27.40	12.60	19.57	9.79	8.07	4.37	4.51	3.63	2.05	1.50	1.18	0.89	0.82	3.64
광주	100.00	27.43	10.20	16.50	7.88	6.53	4.41	4.92	5.45	3.23	2.39	1.92	1.41	1.39	6.34
대전	100.00	28.60	9.86	20.36	7.91	7.45	4.29	3.84	5.10	2.52	1.91	1.47	1.14	0.91	4.65
울산	100.00	26.73	12.29	21.94	10.40	8.76	4.68	3.90	3.64	1.65	1.47	1.02	0.61	0.63	2.28
세종	100.00	16.51	13.04	19.98	12.93	10.74	5.04	4.92	5.43	2.35	2.29	1.23	0.95	1.06	3.53
경기	100.00	25.23	13.89	21.22	11.55	8.51	4.52	3.64	3.28	1.78	1.35	0.95	0.73	0.64	2.69
강원	100.00	20.88	14.42	20.33	11.62	8.99	5.32	4.57	3.95	2.30	1.71	1.29	0.94	0.76	2.91
충북	100.00	21.57	14.80	20.25	11.84	8.95	5.17	4.57	4.13	2.24	1.72	1.15	0.76	0.59	2.28
충남	100.00	20.23	14.96	19.16	12.28	9.33	5.45	4.40	3.95	2.29	1.86	1.30	0.97	0.74	3.08
전북	100.00	20.98	13.43	18.50	10.55	9.05	5.23	5.17	4.89	2.58	2.01	1.44	1.08	0.93	4.15
전남	100.00	14.03	14.58	18.63	13.20	10.96	6.88	5.33	5.26	2.85	2.12	1.55	0.99	0.90	2.73
경북	100.00	20.40	13.65	19.52	12.12	9.58	5.49	4.69	4.64	2.28	1.88	1.28	0.89	0.68	2.87
경남	100.00	25.18	13.91	20.40	11.26	8.67	4.72	3.84	4.17	1.92	1.59	1.02	0.69	0.51	2.12
제주	100.00	17.45	13.07	19.47	11.18	9.43	5.61	3.98	4.50	2.93	2.38	1.81	1.39	0.92	5.87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 재구성

\*소득범위 : 초과~이하

또한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수준을 보면, 소득수준이 월평균 12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4.15%로 전국 평균인 3.29%보다도 다소 높았다.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전라북도가 20.98%로 나타나 전국 평균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24.33%보다도 낮았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에서는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10%로 전국 평균인 10.31%보다도 낮았고, 재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북은 2.37%로 전국평균인 3.47%보다도 낮았다.

〈표Ⅳ-23〉 재산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계	재산 없음	0 원 ~ 500 만원	500 만원 ~ 1,000 만원	1,000 만원 ~ 1,500 만원	1,500 만원 ~ 2,000 만원	2,000 만원 ~ 2,500 만원	2,500 만원 ~ 3,000 만원	3,000 만원 ~ 3,500 만원	3,500 만원 ~ 4,000 만원	4,000 만원 ~ 4,500 만원	4,500 만원 ~ 5,000 만원	5,000 만원 ~ 5,500 만원	5,500 만원 초과
계	100.00	10.31	42.30	12.49	8.15	5.67	4.57	3.60	2.99	2.22	1.79	1.35	1.10	3.47
서울	100.00	9.50	36.32	12.78	8.74	5.55	4.95	4.23	3.68	2.62	2.27	1.76	1.66	5.94
부산	100.00	9.44	43.20	13.26	8.16	5.56	4.30	3.22	2.59	2.02	1.65	1.35	1.18	4.09
대구	100.00	10.75	43.92	12.04	7.22	5.04	4.12	3.20	2.74	2.15	1.79	1.47	1.37	4.19
인천	100.00	10.94	40.06	11.19	7.00	5.85	4.54	3.42	3.08	2.63	2.24	1.93	1.58	5.53
광주	100.00	9.32	41.76	12.51	7.57	5.47	4.23	3.61	2.83	2.52	2.07	1.64	1.47	5.02
대전	100.00	9.34	45.63	12.88	7.04	5.05	3.85	2.84	2.64	2.05	1.84	1.59	1.30	3.96
울산	100.00	12.56	47.13	12.83	7.50	4.24	3.37	2.42	1.87	1.43	1.22	1.01	0.97	3.44
세종	100.00	12.03	43.82	11.86	5.88	5.15	4.36	3.64	3.81	2.57	2.13	1.68	1.01	2.07
경기	100.00	10.36	42.80	11.65	8.14	6.09	4.87	3.84	3.23	2.25	1.72	1.18	0.91	2.96
강원	100.00	12.53	45.78	12.04	7.54	5.17	4.33	3.26	2.59	1.80	1.52	1.05	0.68	1.72
충북	100.00	9.79	44.98	12.59	8.70	6.06	4.90	3.72	2.79	1.96	1.45	0.94	0.69	1.43
충남	100.00	10.90	44.87	11.84	8.17	5.77	4.50	3.54	2.96	2.16	1.56	1.15	0.79	1.79
전북	100.00	9.10	42.31	13.39	8.70	6.14	4.95	3.74	2.98	2.36	1.78	1.26	0.92	2.37
전남	100.00	10.27	42.44	14.17	9.17	6.38	4.83	3.75	2.67	2.07	1.41	0.93	0.61	1.30
경북	100.00	11.73	44.87	12.44	7.90	5.51	4.35	3.42	2.85	1.98	1.50	1.07	0.69	1.69
경남	100.00	10.76	43.03	12.40	8.56	5.66	4.49	3.62	2.87	2.11	1.81	1.25	0.88	2.57
제주	100.00	11.86	47.59	11.40	8.06	5.05	3.88	2.73	2.45	1.93	1.36	0.93	0.67	2.10

자료 : 보건복지부(2014).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 재구성

\*재산범위 : 초과-이하

한편,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향후 추이를 회귀식을 통해 추정해 보면,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4.47%에서 2018년 4.42%정도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빈곤율을 정책적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빈곤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text{기초생활수급자비중 추정} = \beta_0 + \beta_1 \times \text{노인인구비율} + \beta_2 \times \text{재정자립도}$$

$$\text{회귀방정식} : 8.825 - .001 * (\text{노인인구비율}) - .159 * (\text{재정자립도})$$

〈표Ⅳ-24〉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향후 추정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인인구비율	17.39	18.10	18.85	19.63	20.44
재정자립도	19.16	19.21	19.27	19.32	19.38
기초수급자비율	4.48	4.47	4.46	4.43	4.42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46,391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중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2004년보다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전주시의 경우 2004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0,925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21,666명으로 약 3.54%가 증가했다.

〈표Ⅳ-25〉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추이 및 증감률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3개 전체	52,889	57,446	59,744	61,453	61,170	61,662	61,037	55,844	60,009	50,875	46,391	-12.29
전주	20,925	23,150	24,379	25,576	26,271	27,061	27,307	24,901	24,259	23,078	21,666	3.54
군산	15,124	16,687	17,071	16,756	15,786	15,674	15,313	14,016	19,782	12,324	11,255	-25.58
익산	16,840	17,609	18,294	19,121	19,113	18,927	18,417	16,927	15,968	15,473	13,470	-20.01
11개 전체	59,658	61,087	59,594	57,464	55,319	54,084	52,014	46,350	42,520	39,151	35,074	-41.21
정읍	11,874	12,243	11,755	11,662	10,975	10,700	10,530	9,739	8,755	8,118	7,198	-39.38
남원	7,922	8,265	8,273	8,183	8,231	7,982	7,682	6,864	6,619	5,980	5,206	-34.28
김제	10,661	11,155	11,130	10,546	10,191	10,242	10,161	9,312	8,627	7,721	7,229	-32.19
완주	6,446	6,237	6,169	6,212	6,202	6,147	5,894	5,007	4,630	4,287	3,628	-43.72
진안	2,294	2,289	2,287	2,137	2,095	1,990	1,864	1,656	1,461	1,391	1,189	-48.17
무주	2,671	2,648	2,388	1,933	1,807	1,659	1,633	1,419	1,295	1,097	1,043	-60.95
장수	2,169	2,267	2,029	2,032	1,982	1,917	1,794	1,531	1,371	1,307	1,238	-42.92
임실	2,668	2,772	2,678	2,497	2,387	2,449	2,266	2,051	1,929	1,804	1,612	-39.58
순창	2,192	2,176	2,167	2,095	1,910	1,960	1,851	1,652	1,517	1,407	1,241	-43.39
고창	4,762	5,083	4,852	4,636	4,478	4,399	3,956	3,404	3,060	2,899	2,584	-45.74
부안	5,999	5,952	5,866	5,531	5,061	4,639	4,383	3,715	3,256	3,140	2,906	-51.56
14개 전체	112,547	118,533	119,338	118,917	116,489	115,746	113,051	102,194	102,529	90,026	81,465	-27.62

자료 : 전라북도 기본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각 연도별)

〈표Ⅳ-26〉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2015.6.30.현재)

구분	합계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소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차상위	소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합 계	1,587	1,380	280	446	21	633	207	26	97	84	
전주	소 계	337	289	75	92	2	120	48	11	19	18
	전주	106	96	15	31	0	50	10	2	5	3
	전주덕진	120	89	26	31	0	32	31	5	12	14
	전주생명	111	104	34	30	2	38	7	4	2	1
군산	소계	155	138	28	39	3	68	17	1	6	10
	군산	68	60	10	20	2	28	8	0	2	6
	군산한마음	87	78	18	19	1	40	9	1	4	4
익산	소계	248	226	11	113	9	93	22	1	17	4
	익산	125	115	7	55	0	53	10	1	7	2
	익산원광	123	111	4	58	9	40	12	0	10	2
정읍	정읍지역	117	102	17	33	4	48	15	3	5	7
남원	남원지역	100	80	15	14	0	51	20	0	10	10
김제	김제지역	118	115	56	13	0	46	3	1	0	2
완주	완주지역	85	69	20	20	0	29	16	0	7	9
진안	진안지역	58	52	3	26	0	23	6	0	6	0
무주	무주지역	50	36	10	6	0	20	14	2	7	5
장수	장수지역	55	50	10	8	0	32	5	2	1	2
임실	임실지역	55	43	9	16	0	18	12	1	7	4
순창	순창지역	45	33	2	18	0	13	12	0	6	6
고창	고창지역	88	74	13	23	0	38	14	3	5	6
부안	부안지역	76	73	11	25	3	34	3	1	1	1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5)

한편, 전라북도의 자활참여자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총 1,587명이고 이중 자활사업단에는 1,380명, 자활기업은 207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이 337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다음으로 익산 248명, 군산 155명 등의 순이다.

자활참여자가 가장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권역을 제외하면 농촌지역은 자활참여자가 100명 내외인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의 지역은 자활참여자가 6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자활참여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특히 자활사업 관련하여 취창업지원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표Ⅳ-27〉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추이 및 증감률

시군별	탈수급자수 (A=①+②)	자활(이행)특례상 향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업그레이드형 자활참여자(B)	탈수급율(%) (A/B)×100
합 계	298	109	189	2,277	13.1
전 주	36	3	33	407	8.8
군 산	33	-	33	303	10.9
익 산	67	31	36	557	12.0
정 읍	28	13	15	260	10.8
남 원	29	15	14	155	18.7
김 제	21	5	16	178	11.8
완 주	10	-	10	87	11.5
진 안	2	-	2	36	5.6
무 주	4	3	1	31	12.9
장 수	7	6	1	23	30.5
임 실	12	8	4	45	26.7
순 창	3	1	2	25	12.0
고 창	38	17	21	106	35.8
부 안	8	7	1	64	12.5

한편,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탈수급자는 총 298명이고 업그레이드형 자활참여자는 2,277명 등으로 총 탈수급율은 13.1% 수준이다. 또한 자활참여자 중 취업자와 창업자는 총 401명으로 취업업율은 17.6% 수준이다.

〈표Ⅳ-28〉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률 현황 (2014년12월말, 단위 :명)

시군별	수급유지자중 취창업자 (A=①+②)	취업자(①)	창업자(②)	업그레이드형 자활참여자(B)	취창업율(10%) (A/B)×100
시군별	401	389	12	2,277	17.6
전 주	109	106	3	407	26.8
군 산	27	27	-	303	8.9
익 산	93	91	2	557	16.7
정 읍	41	41	-	260	15.8
남 원	24	22	2	155	15.5
김 제	44	44	-	178	24.7
완 주	15	15	-	87	17.2
진 안	5	5	-	36	13.9
무 주	5	5	-	31	16.1
장 수	3	3	-	23	13.0
임 실	7	5	2	45	15.6
순 창	10	10	-	25	40.0
고 창	12	9	3	106	11.3
부 안	6	6	-	64	9.4

※ 전국 평균 : 18.5%

한편, 전라북도의 자활정책은 중요한 자활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가 전주 3개소, 군산 2개소, 익산 2개이고 그 외 지역은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총 18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표Ⅳ-29〉 지역자활센터 현황

(단위 : 개소)

전주	전주 덕진	전주 생명	군산	군산 해미	익산	익산 원광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규모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표준	표준	기본	기본	표준	기본	확대	표준
정원	6	6	6	6	6	7	7	7	7	7	6	6	5	5	6	5	7	6

자료 : 전라북도(2015) 내부자료

전라북도의 자활사업단은 총 152개의 사업단에 약 1,673명의 자활참여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자활사업단은 기타업종을 제외하면 영농분야가 17개 사업단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분야 9개 사업단, 집수리 8개 사업단, 청소 8개 사업단, 폐자원재활용 8개 사업단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자활사업단이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7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익산 22개, 군산 16개, 김제 12개, 부안 11개 사업단 등의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전주시가 30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241명, 정읍 158명, 군산 149명 등의 순이다.

또한 자활기업은 총 107개 기업에 757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전주와 익산이 각각 19개 자활기업이 창업되어 운영 중에 있고, 군산 11개 등의 순으로 자활기업을 운영 중에 있다. 자활기업은 자활성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자활사업단의 자활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라북도 자활기업의 유형은 청소와 집수리 분야가 각각 1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폐자원활용 14개, 영농 12개 등의 순이다.

〈표Ⅳ-30〉 자활기업현황

구분		총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계	기업	107	19	11	19	7	10	7	3	4	6	3	5	7	5	1
	인원	757	217	37	41	16	37	65	109	105	22	11	24	21	49	3
집수리	기업	18	1	1	3	1	3	2	0	1	1	1	1	1	1	1
	인원	104	7	2	4	4	15	34	0	4	6	3	2	5	15	3
간병	기업	11	2	3	2	1	0	1	1	1	0	0	0	0	0	0
	인원	237	58	11	6	4	0	13	100	45	0	0	0	0	0	0
청소	기업	18	1	3	3	1	1	1	0	1	1	0	2	1	3	0
	인원	140	8	10	9	4	4	8	0	35	5	0	17	9	31	0
폐자원 재활용	기업	14	4	0	4	1	2	1	0	0	0	1	1	0	0	0
	인원	130	106	0	7	2	5	2	0	0	0	6	2	0	0	0
세차	기업	2	0	1	0	0	0	0	0	0	1	0	0	0	0	0
	인원	5	0	2	0	0	0	0	0	0	3	0	0	0	0	0
영농	기업	12	0	0	4	0	3	1	0	0	1	0	0	3	0	0
	인원	28	0	0	6	0	10	6	0	0	3	0	0	3	0	0
음식	기업	10	4	1	0	0	1	1	1	1	0	0	0	1	0	0
	인원	53	15	4	0	0	3	2	6	21	0	0	0	2	0	0
환경 정비	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모 도우미	기업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4	4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반찬 유통등)	기업	21	6	2	3	3	0	0	1	0	2	1	1	1	1	0
	인원	56	19	8	9	2	0	0	3	0	5	2	3	2	3	0

자료 : 전라북도(2015) 내부자료



## 제 5 장

# 전라북도 빈곤가구 복지욕구 현황

### 1. 전라북도 빈곤인구 추정



# V. 전라북도 빈곤가구 복지욕구 현황

## 1. 전라북도 빈곤인구 추정

전라북도의 절대빈곤율(전라북도 도민의 월평균소득이 국가 고시 최저생계비 미만인 인구 및 가구 비율)은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시 21.9%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절대빈곤율은 경북과 충남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은 27.5%로 경북, 강원, 충남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로 분석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적 빈곤율은 21.2%로 추정된다.

한국노동패널로 분석된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로 산출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유무 등 세 가지 조건 중 소득기준으로만 분석된 것이다.

때문에 전라북도의 절대빈곤율이 21.9%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4.5%라는 점에서 나머지 약 16%정도는 한달 평균 소득이 정부 고시 최저생계비 미만인 사실상의 소득빈곤가구이지만 정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표V-1〉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0	3.7	3.9	2.5	4.1	2.9	1.3	1.5	3.6	2.9	2.7	4.8	4.2	3.7	2.7
절대빈곤율	12.9	15.4	18.1	18.0	20.8	12.1	5.1	10.6	19.5	16.2	24.0	21.9	19.6	24.9	13.7
전북복지실태조사												21.2			
상대빈곤율	18.1	23.0	23.8	21.7	25.6	17.4	6.8	15.1	26.7	19.8	26.3	27.5	23.6	31.0	19.4

주1 : 절대빈곤율은 가구 총소득을 당해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로 산출

주2 : 상대빈곤율은 가구균등화소득 보정 후 중위소득 50%이하로 산출

자료 : 한국노동패널 Raw data 원자료 분석/전라북도 도민 복지욕구조사(2014)

〈표 V-2〉 소득원천별 연평균 소득 현황(단위 : 만원)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서울	4180.2	832.3	2325.8	813.5	378.5	3705.2	4274.2
부산	4237.5	246.2	1500.4	732.9	479.6	1434.2	4017.7
대구	3960.9	210.3	716.8	831.6	384.5	6353.7	3835.5
대전	3772.1	313.8	2015.1	1071.9	629.9	933.9	4472.2
인천	4247.1	581.9	1439.6	557.3	538.6	353.2	4136.5
광주	3980.2	330.2	1291.1	1229.2	487.2	1238.2	3934.9
울산	6210.1	223.8	1069.3	639.7	893.8	6188.6	6791.6
경기	4422.3	476.0	1998.0	846.1	481.8	2665.3	4441.7
강원	3726.8	545.2	743.6	1126.0	442.4	745.9	3272.5
충북	3198.3	325.4	1200.7	865.3	233.1	2306.1	3423.7
충남	3123.1	151.7	1239.4	362.8	390.4	617.6	3171.4
전북*	3296.2	263.0	613.8	864.2	318.8	816.5	3231.1
	79.53	71.74	37.19	102.34	74.38	36.13	77.84
전남	4887.6	468.5	3305.7	623.4	540.3	284.7	5118.2
경북	3831.7	211.9	888.9	1078.7	288.3	859.2	3740.8
경남	3942.9	297.4	681.5	808.1	430.7	1980.0	3911.4
전체	4144.8	366.6	1650.5	844.4	428.6	2260.1	4150.7

주. 전라북도 소득원천별 비율은 전체 소득원천별 평균소득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15차(2012) raw data 분석

한편, 전라북도의 소득원천별 연평균 소득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은 3,296만원 이고, 금융소득은 263만원, 부동산소득 613.8만원 등으로 연평균 3,231.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이 같은 소득은 전국 평균과 비교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총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매년 연평균 6,7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라북도 도민 연평균소득의 약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16개 시도 평균 근로소득의 79.53%수준이고, 전라북도 평균이 전체 국민 금융소득도 71.74%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총 소득은 전체 국민의 총소득의 77.84%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빈곤인구의 비율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전환에 맞추어 추정해 보면, 중위소득 28%이하 빈곤가구는 최소 7.3%~최대 12.3%로 추정되고, 중위소득 50%는 최소 21.2%~ 최대 23.0%로 추정된다.

〈표 V-3〉 소득원천별 연평균 소득 현황(단위 : 만원)

구분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3%	중위소득 50%
소득	가구균등화 미적용(패널)	980만원	1400만원	1505만원	1,750만원
	가구균등화 적용(패널)	589만원	841만원	904만원	1,051만원
비율	가구균등화 미적용(패널)	11.7	17.7	19.5	23.0
	가구균등화 적용(패널)	7.3	13.8	15.6	19.3
	가구균등화 적용(실태조사)	12.3	17.9	18.8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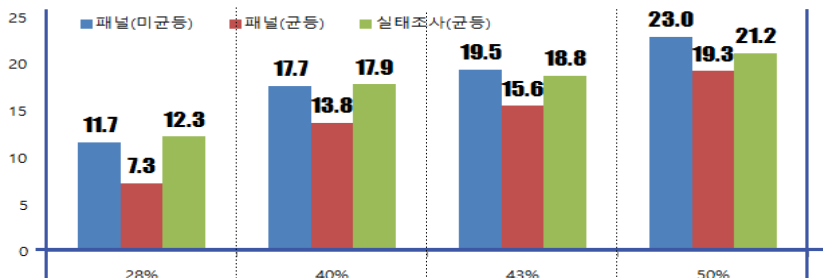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 15차(2012) raw data 분석/전북발전연구원(2014) 복지실태조사 Raw data 분석

한편, 전라북도의 소득을 현재 빈곤선의 기준인 중위소득의 구간별로 평균값을 산출해 보면, 중위소득 28%의 평균소득은 가구균등화 미적용시 980만원이었고, 중위소득 50%는 1,750만원으로 추정된다. 가구균등화 적용시에는 중위소득 28%가 589만원이었고, 중위소득 50%는 1,051만원이었다.

한편,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위소득 28%의 구간은 전라북도 도민의 약 11.7%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위소득 50%는 23.0%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시에는 중위소득 28%미만이 7.3%, 중위소득 50%미만이 19.3%였다.

전북 복지실태조사에서는 중위소득 28% 이하가 12.3%였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21.2%로 한국노동패널 분석 자료와는 약 1.9%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림 V-1〉 조사원별 빈곤가구 비율 추정



〈표 V-4〉 전라북도 소득분위별·소득원천별 연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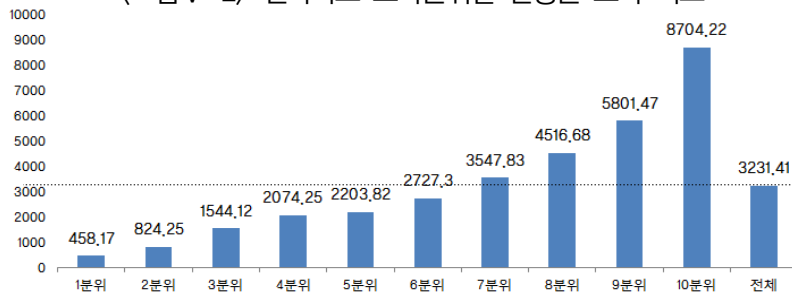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1분위	348.38	216.14	114.68	187.51	360.86		458.17
2분위	500.05	350.00	145.06	306.66	400.12		824.25
3분위	1352.09		452.04	359.95	365.35		1544.12
4분위	1795.74	324.10	91.76	275.44	716.29		2074.25
5분위	1838.18	157.40	904.18	348.05	388.97	500.00	2203.82
6분위	2383.00	216.83	291.45	882.55	202.70		2727.30
7분위	3491.06	60.00	490.41	1069.46	152.54		3547.83
8분위	3717.37	165.00	701.43	2541.94	149.32		4516.68
9분위	5271.47	510.21	316.85	1213.60	336.65	264.59	5801.47
10분위	8404.57	221.73	1534.97	3429.73	84.94	1500.00	8704.22
전체	3301.49	263.03	613.83	872.12	317.24	816.53	3231.41

자료 : 한국노동패널 15차(2012) raw data

전라북도의 소득수준을 10분위평균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458만원이었고, 가장 소득이 많은 10분위의 연평균소득인 8,704.22만원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의 중간값인 5분위 평균소득은 2,203만원으로 이는 10분위 소득의 22.3%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소득분위간 소득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평균 이전소득액이 근로소득액보다 많아 1분위 계층은 자신의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보다는 정부지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전라북도 소득분위별 연평균 소득 비교



〈표V-5〉 전국 소득분위별 연평균 소득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1분위	363.02	180.68	248.10	226.59	339.26		446.63
2분위	754.36	191.04	308.44	309.45	508.59	90.00	895.40
3분위	1226.86	292.54	511.48	386.90	498.00	441.21	1395.78
4분위	1700.31	293.40	559.64	540.33	463.40	563.74	1846.33
5분위	2277.88	278.52	950.08	551.89	366.12	260.39	2448.33
6분위	2871.68	278.39	813.12	934.33	319.85	230.52	3035.60
7분위	3492.82	209.77	1281.26	892.08	253.62	430.33	3695.04
8분위	4332.71	323.78	1084.04	1163.06	277.26	531.51	4620.08
9분위	5256.27	307.93	1191.54	1260.72	357.33	801.94	5619.04
10분위	8580.76	593.34	3765.58	1697.21	858.87	4574.19	10153.65
전체	4146.88	367.15	1655.55	845.52	428.59	2260.06	4152.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5차(2012) raw data

전라북도의 소득분위별 연평균 소득을 보면, 중위소득에 가까운 5분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2,277.9만원, 금융소득 278.5만원, 부동산소득 950.1만원 등으로 총 소득이 2,448.3만원이었다.

〈표V-6〉 전국 소득분위별 구성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서울	5.70	6.02	6.98	7.40	8.74	10.33	13.46	6.45	21.39	13.53	100.00
부산	6.68	7.91	10.35	6.65	6.78	8.87	13.46	7.62	16.79	14.88	100.00
대구	7.08	10.66	6.71	7.69	8.32	13.68	12.56	9.53	13.60	10.18	100.00
대전	5.00	5.96	7.13	10.19	8.58	10.31	9.27	6.18	18.76	18.63	100.00
인천	2.67	7.26	4.41	5.24	11.04	16.27	11.07	8.56	21.13	12.37	100.00
광주	7.22	2.84	5.24	9.63	13.00	11.56	10.07	12.47	18.56	9.42	100.00
울산	0.98	3.20	2.30	3.23	6.25	8.30	7.93	13.78	14.70	39.33	100.00
경기	3.74	5.91	5.99	6.62	7.89	11.61	14.97	7.96	19.87	15.44	100.00
강원	11.58	8.49	8.30	7.85	11.83	6.37	24.12	3.93	13.90	3.62	100.00
충북	5.49	9.36	5.15	10.12	13.06	18.99	10.49	6.50	9.45	11.39	100.00
충남	8.37	14.70	8.78	5.33	9.85	12.75	9.59	7.24	13.53	9.86	100.00
전북	10.56	9.68	9.72	10.42	9.84	10.42	9.19	10.29	9.80	10.07	100.00
전남	4.17	10.00	6.67	4.53	8.55	6.40	12.99	8.24	16.70	21.75	100.00
경북	13.20	6.74	4.26	5.15	8.34	9.28	13.03	4.88	22.09	13.03	100.00
경남	6.84	5.23	7.07	6.52	9.28	11.69	11.88	9.85	20.27	11.36	100.00
전체	6.02	7.01	6.67	7.03	8.89	11.16	13.14	7.71	18.66	13.72	10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5차(2012) raw data

〈표V-7〉 전국 소득분위별 구성비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4 분위 합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5~8 분위 합계	9분위	10분위	9~10 분위 합계
서울	5.7	6.02	6.98	7.4	26.1	8.74	10.33	13.46	6.45	38.98	21.39	13.53	34.92
부산	6.68	7.91	10.35	6.65	31.59	6.78	8.87	13.46	7.62	36.73	16.79	14.88	31.67
대구	7.08	10.66	6.71	7.69	32.14	8.32	13.68	12.56	9.53	44.09	13.6	10.18	23.78
대전	5	5.96	7.13	10.19	28.28	8.58	10.31	9.27	6.18	34.34	18.76	18.63	37.39
인천	2.67	7.26	4.41	5.24	19.58	11.04	16.27	11.07	8.56	46.94	21.13	12.37	33.5
광주	7.22	2.84	5.24	9.63	24.93	13	11.56	10.07	12.47	47.1	18.56	9.42	27.98
울산	0.98	3.2	2.3	3.23	9.71	6.25	8.3	7.93	13.78	36.26	14.7	39.33	54.03
경기	3.74	5.91	5.99	6.62	22.26	7.89	11.61	14.97	7.96	42.43	19.87	15.44	35.31
강원	11.58	8.49	8.3	7.85	36.22	11.83	6.37	24.12	3.93	46.25	13.9	3.62	17.52
충북	5.49	9.36	5.15	10.12	30.12	13.06	18.99	10.49	6.5	49.04	9.45	11.39	20.84
충남	8.37	14.7	8.78	5.33	37.18	9.85	12.75	9.59	7.24	39.43	13.53	9.86	23.39
전북	10.56	9.68	9.72	10.42	40.38	9.84	10.42	9.19	10.29	39.74	9.8	10.07	19.87
전남	4.17	10	6.67	4.53	25.37	8.55	6.4	12.99	8.24	36.18	16.7	21.75	38.45
경북	13.2	6.74	4.26	5.15	29.35	8.34	9.28	13.03	4.88	35.53	22.09	13.03	35.12
경남	6.84	5.23	7.07	6.52	25.66	9.28	11.69	11.88	9.85	42.7	20.27	11.36	31.63
전체	6.02	7.01	6.67	7.03	26.73	8.89	11.16	13.14	7.71	40.9	18.66	13.72	3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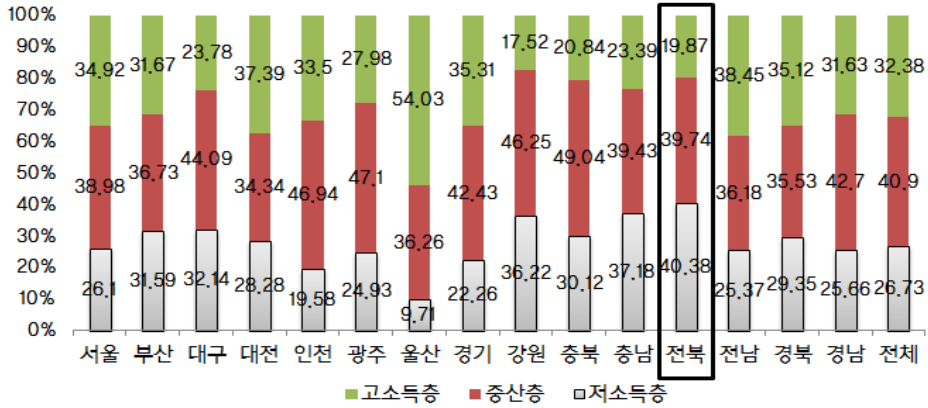
또한 전라북도의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소득가구는 8.37%로 전국 평균인 5.70%보다도 2.7%p 높았고, 2분위 소득도 전체 가구의 9.68%로 전국 평균인 6.02%보다도 3.7%p 낮았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구성비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40.38%가 저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전국 평균인 26.73%의 약 두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중산층은 전라북도의 경우 39.4%로 추정된다. 중산층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40.9%보다도 약 10%p 낮은 수준이고 9분위와 10분위의 고소득층은 약 19.87%로 전국 평균인 32.38%보다도 12.5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소득 9분위와 10분위의 고소득층은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반면, 1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 비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 지역별 소득구성비 비교



결국, 전라북도의 경우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비율도 매우 높아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적절한 탈빈곤정책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산층 그리고 잠재적 빈곤가구가 극빈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적 빈곤정책이 요구된다.



## 제6장

# 전라북도 빈곤가구 복지수요 분석

1. 전라북도 빈곤가구 추정 및 재정현황
2. 전라북도 빈곤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Ⅵ. 전라북도 빈곤가구 복지수요 분석

### 1. 전라북도 빈곤가구 추정 및 재정현황

전라북도의 빈곤인구를 추정해 보면, 중위소득 28%이하 가구가 노동패널기준 12.5%, 전북복지실태조사 기준 12.3%로 추정된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노동패널 기준 22.1%, 전북복지실태조사 기준 17.8%로 추정되고, 중위소득 43%이하는 한국 노동패널 기준 25.2%, 전북복지실태조사 기준 18.8%로 추정된다. 상대적 빈곤선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한국노동패널 기준 29.7%, 전북복지실태조사 기준 21.2%로 추정된다. 전라북도의 중위소득 기준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교단위인 한국노동패널 기준 적용시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가구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19.7%이지만 전북은 29.7%로 전국 평균보다도 약 10%p 높다.

〈표Ⅵ-1〉 중위소득 기준별 빈곤인구 비율

구분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3%		중위소득 50%	
	한국 노동패널	전북복지 실태조사	한국 노동패널	전북복지 실태조사	한국 노동패널	전북복지 실태조사	한국 노동패널	전북복지 실태조사
서울	7.2	-	12.7	-	14.7	-	18.7	-
부산	9.3	-	15.8	-	19.2	-	24.9	-
대구	8.0	-	18.2	-	19.7	-	24.4	-
대전	5.5	-	11.6	-	13.1	-	18.1	-
인천	2.8	-	10.8	-	11.8	-	14.3	-
광주	7.8	-	11.4	-	13.3	-	15.3	-
울산	1.6	-	5.5	-	5.5	-	6.5	-
경기	5.0	-	10.5	-	12.3	-	15.6	-
강원	12.5	-	20.4	-	24.0	-	28.4	-
충북	6.6	-	15.8	-	17.1	-	20.0	-
충남	11.9	-	25.0	-	26.1	-	31.9	-
전북	12.5	12.3	22.1	17.8	25.2	18.8	29.7	21.2
전남	5.6	-	17.4	-	18.6	-	20.8	-
경북	15.3	-	20.2	-	21.1	-	24.1	-
경남	8.5	-	15.0	-	15.2	-	18.9	-
전체	7.4	-	14.1	-	15.9	-	19.7	-

자료 : 한국노동패널 15차 raw data

〈표Ⅵ-2〉 전라북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 빈곤인구 비율

가구규모	40대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70세 미만	70세 이상
중위 28%	8.5	3.8	6.6	17.0	43.0
중위 40%	11.9	5.1	9.6	26.1	63.0
중위 43%	12.6	6.4	9.6	26.6	66.3
중위 50%	12.6	9.8	12.6	33.0	71.7

맞춤형 급여체계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이하 빈곤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추정해 보면, 중위소득 28% 미만의 극빈계층은 70세 이상의 경우 43.0%로 추정되고 40대 미만은 8.5%로 추정된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경우 71.7%로 대부분의 70세 이상 노인은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빈곤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0대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12.6%였고, 50세 미만은 9.8% 수준이었다.

도시와 농촌별로 중위소득 기준 빈곤율을 추정해 보면, 도시와 농촌의 빈곤율은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량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는 21.8%, 농촌은 21.2%로 추정된다.

〈표Ⅵ-3〉 전라북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 빈곤인구 비율

가구규모	지역		분위				
	도시	농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중위 28%	13.2	10.7	34.8	6.6	0.9	10.5	0.8
중위 40%	18.6	16.4	55.1	7.4	4.9	10.9	0.8
중위 43%	19.2	18.0	59.1	7.8	4.9	10.9	0.8
중위 50%	21.8	21.2	68.6	8.6	5.5	10.9	0.8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총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북복지실태조사 기준 적용시 1인 가구의 총소득은 1,295만원이었고, 2인가구는 2,544.5만원, 3인가구 4,275.2만원, 4인 가구 5,145.2만원 등이었다. 가구원수가 4인가구까지는 가구원수가 증가 할수록 총소득이 증가하지만 5인 이상부터는 총소득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대체로 5인 가구 이상부터 소득이 없는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생활하는 3세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Ⅵ-4〉 전라북도 가구원수별·소득형태별 평균소득

전체	전북복지실태조사							전북실태조사 [총소득]	한국노동패널 [총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보조	기초생계	기타소득		
1인 가구	765.78	272.37	30.18	1.17	75.45	51.70	98.88	1,295.54	1,070.39
2인 가구	1,893.55	153.92	65.40	4.68	95.32	23.92	307.67	2,544.47	2,616.84
3인 가구	3,466.46	375.24	50.28	0.35	139.45	17.71	225.67	4,275.16	3,534.74
4인 가구	3,755.26	388.55	19.86	2.90	76.09	3.58	898.92	5,145.16	5,978.21
5인 가구	3,067.04	352.98	17.39	2.03	108.59	0.00	786.41	4,334.44	2,918.15
6인 가구	3,152.54	98.60	6.23	0.00	367.19	0.34	296.03	3,920.93	7,604.50
7인 가구	2,120.22	37.62	62.29	0.00	361.70	0.00	421.69	3,003.54	-
8인 가구	3,500.00	0.00	0.00	0.00	780.00	0.00	0.00	4,280.00	-
9인 가구	4,300.00	0.00	0.00	0.00	230.00	0.00	0.00	4,530.00	-
전체	2,753.56	290.59	36.26	2.36	116.07	16.15	490.94	3,705.94	3,231.05

자료 :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소득분위별 기초수급형태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28%이하 가구의 28%는 절대빈곤가구 인 것으로 추정되고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44.4%를 절대빈곤가구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중위소득 43% 이하는 약 48.0%가 절대빈곤가구로 추정되고 중위소득 50%이하는 55.3%가 절대 빈곤가구로 추정된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인 중위소득 28% 이하 가구 중 현재 기초수급가구는 약 9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위소득 28% 이하 가구 중 일반 수급가구는 29.5%였고, 조건부 수급가구는 11.8%, 가구원 중 수급가구는 20.0%, 그리고 차상위 가구가 28.6%였다.

〈표Ⅵ-5〉 전라북도 기초수급형태별 빈곤가구 유형

가구규모	절대 빈곤가구	기초수급여부				일반가구
		일반수급 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가구원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	
생계급여(중위28%)	28.0	29.5	11.8	20.0	28.6	10.1
의료급여(중위40%)	44.4	39.5	17.6	30.0	35.7	15.1
주거급여(중위43%)	48.0	40.3	27.8	30.0	47.6	15.6
교육급여(중위50%)	55.3	45.7	29.4	30.0	50.0	17.7

자료 :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국 현재 중위소득 28% 이하 빈곤가구 중 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가구 즉 복지사각지대는 10.1%로 추정되고 있고, 의료급여의 경우 15.1%, 주거급여의 경우 15.6%, 교육급여는 17.7%가 복지사각지대로 추정된다.

〈표Ⅵ-6〉 전라북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기준 빈곤인구 비율

가구규모	자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전체
중위28%	한국노동패널data	35.5	1.00	5.3	1.4				12.5
	전북복지조사	36.3	16.7	7.9	1.2	17.4	-	-	12.3
중위40%	한국노동패널data	56.5	17.9	11.9	1.4	17.7			22.1
	전북복지조사	49.2	23.1	10.7	1.9	25.5	12.1	6.3	17.8
중위43%	한국노동패널data	56.5	20.6	11.9	1.4	54.3			25.2
	전북복지조사	51.3	24.2	13.0	1.9	26.8	12.1	6.3	18.9
중위50%	한국노동패널data	61.2	28.4	14.6	4.9	54.3	9.4		29.7
	전북복지조사	56.0	27.6	15.0	2.8	12.1	12.5		21.2

다음으로 중위소득 기준별 연평균 소득액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28%기준 502.6만원에서 중위소득 50%기준 928.7만원 까지의 소득액을 보이고 있으며, 중위소득 28%의 경우 다른 소득기준선들과는 달리 이전소득액이 378.1만원으로 근로소득액 319.0만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28% 빈곤계층의 이전소득액이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것은 그만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중위소득 50%이하 경우 근로소득은 연평균 874.02만원이었고, 금융소득 264.87만원, 이전소득 375.77만원 등이었다.

〈표Ⅵ-7〉 중위소득 기준별 연평균소득

구분	(단위 : 만원/연)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3%	중위소득 50%
근로소득	319.05	642.12	819.93	874.02
금융소득	216.14	264.87	264.87	264.87
부동산소득	114.68	143.54	191.38	251.91
사회보험소득	253.07	270.30	262.66	311.51
이전소득	378.18	363.67	374.11	375.92
총소득	502.61	715.19	840.96	928.77



## 2. 전라북도 빈곤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일반 빈곤가구 빈곤실태 및 욕구

전라북도의 중위소득 이하 빈곤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중위소득 50%미만의 경우 남자는 13.8%였지만 여자는 23.8%로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가구주의 빈곤율이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동부가 21.8%, 읍부가 13.2% 그리고 면부가 23.9%였다.

가구주의 학력수준에서는 무학자의 경우 78.2%가 중위소득 50% 이하였고, 초졸은 53.1%, 중졸은 26.5%, 대졸은 7.0% 수준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빈곤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I-8〉 전라북도 인구학적 특성별 빈곤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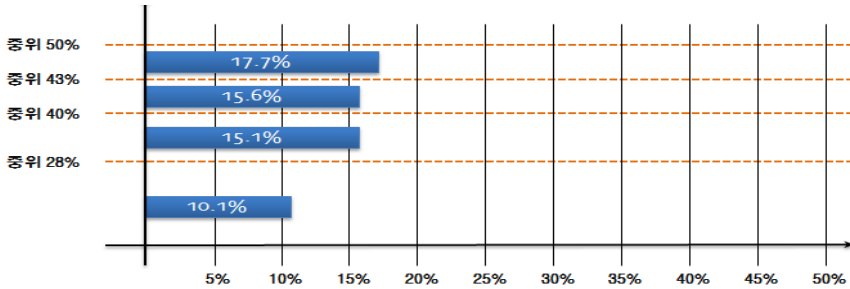
구분	성별		지역			학력수준						
	남자	여자	동부	읍부	면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중위 28%	12.1	12.5	13.2	3.2	14.4	52.9	32.5	15.3	2.9	6.4	0.0	33.3
중위 40%	16.9	18.8	18.6	10.6	19.4	69.7	45.6	20.2	8.6	6.8	0.0	33.3
중위 43%	17.4	20.5	19.2	11.1	21.8	72.5	46.9	20.5	9.9	7.0	0.0	33.3
중위 50%	13.8	23.8	21.8	13.2	23.9	78.2	53.1	26.5	11.5	7.0	0.0	33.3

가구형태별로는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50%이하의 경우 조부모 한자녀 가구의 비중이 각각 35.7%, 53.8%로 가장 높았고, 중위소득 40%와 43% 기준에서는 독신가구의 비중이 46.8%, 48.5%로 높게 나타났다.

〈표VI-9〉 전라북도 가구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구분	가구형태							수급자 형태				
	독신가구	부부가구	부부 자녀가 구	한부모 + 자녀 가구	3세대 가구	조부모 한자녀 가구	기타	일반 수급 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일반
중위 28%	34.5	18.2	5.3	17.8	2.3	35.7	0.0	29.5	11.8	20.0	28.6	10.1
중위 40%	46.8	25.7	7.8	20.6	11.4	46.2	16.7	39.5	17.6	30.0	35.7	15.1
중위 43%	48.5	26.1	8.1	25.9	11.4	46.2	16.7	40.3	27.8	30.0	47.6	15.6
중위 50%	53.2	28.9	9.3	31.1	13.6	53.8	17.4	45.7	29.4	30.0	50.0	17.7

〈그림Ⅵ-1〉 일간가구 중 중위소득이하 빈곤인구 비율



빈곤가구의 가구형태로는 대체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위소득 28%와 40%의 경우 주택의 소유형태로 월세가 16.9%, 23.7%로 높았으며, 중위소득 43%, 50%는 기타의 형태가 27.3%, 30.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상대적 빈곤가구의 경우 다세대 일반주택 거주자가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단독주택 등의 순이었다.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빈곤가구의 비율도 약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라북도 도민의 가구형태가 일반단독주택자가 50%를 상회하고 있고, 일반아파트도 25.6%정도 수준인 것으로 감안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일반단독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거주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형태에서는 자가가구는 21.2%에 불과했고, 대부분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다. 전체 도민은 72.8%가 자가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빈곤가구의 자가소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월세 생활자도 전체 도민이 3.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빈곤가구의 월세 생활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Ⅵ-10〉 전라북도 가구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구분	가구형태							소유 형태				
	일반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일반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 아파트	비 거주용 건물내 주택	자가	월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관사 사택)
중위 28%	13.7	29.7	1.3	8.7	15.6	17.4	0.0	12.1	1.0	8.4	16.9	14.5
중위 40%	21.2	30.6	2.6	13.1	17.8	21.3	0.0	18.4	12.4	11.7	23.7	18.2
중위 43%	22.1	30.6	10.1	13.6	17.8	21.3	0.0	19.1	13.3	11.7	24.1	27.3
중위 50%	25.3	38.9	10.1	14.4	21.7	21.3	13	21.2	17.9	15.1	27.6	30.9
전체	54.8	2.4	5.1	25.6	3.0	3.1	5.3	72.8	7.0	11.9	3.9	3.7

〈표VI-11〉 한 달 평균 지출액

구분	중위28%	중위40%	중위43%	중위50%	전체
1 식비	18,392	20,691	20,854	21,204	54,832
2 주거비	6,183	5,863	5,671	5,708	11,005
3 광역수도비	14,651	14,594	14,996	14,741	20,701
4 가구가사용품비	1,452	1,347	1,301	1,491	54,832
5 보육비	1,274	0,900	0,888	0,864	3,618
6 의류신발비	6,596	7,949	7,882	7,750	13,577
7 보건의료비	11,093	9,789	9,650	9,631	11,270
8 공교육비	12,158	9,400	9,433	8,983	14,821
9 사교육비	10,207	12,812	12,274	11,151	17,002
10 교양오락비	0,925	1,703	1,761	1,661	4,755
11 교통비	14,994	12,836	12,634	12,333	28,050
12 통신비	9,170	8,540	8,578	8,464	15,452
13 기타소비지출	17,082	14,454	14,351	13,930	31,640
14 사적이전	4,207	4,257	4,099	3,831	8,030
15 세금	12,753	9,518	9,172	8,711	12,002
16 사회보험료	2,413	2,794	3,382	3,408	16,037
전체	143,55	137,45	136,93	133,86	317,624

한편, 빈곤가구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식비와 가구 및 가사용품비로 54.8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기타소비지출 31.6만원, 광역수도비 20.7만원 등의 순으로 월 평균 지출액이 나타났다. 소득기준별로는 중위소득 50%는 약 133.8만원에서 중위소득 28%기준 약 143.5만원으로 소득기준선이 낮아질수록 지출액이 높아졌고, 세금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대비 약 4.0만원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경제적 빈곤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빈곤가구는 50.6%였다. 이 중 19.6%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가구의 30.3%는 부채청산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도 6.9%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및 재취업 등 일자리 문제는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가구의 33.4%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5.6%는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직 및 재취업으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빈곤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유사했다.

〈표VI-1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구분	소득분위	잘 모르겠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비해당
1 저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중위28%	2.2	3.8	8.6	38.2	9.1	12.4
	중위40%	5.9	4.1	7.8	32.6	17.0	12.2
	중위43%	5.6	4.2	7.4	32.0	16.9	13.7
	중위50%	5.0	3.7	7.8	30.4	19.6	14.6
	전체	1.6	4.7	6.9	43.6	20.3	10.1
2 부채 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등 (부채 부담)	중위28%	2.2	9.7	7.5	31.2	5.4	5.4
	중위40%	6.3	9.2	7.4	25.8	6.3	5.2
	중위43%	6.0	9.5	7.0	25.3	6.3	4.9
	중위50%	5.6	9.0	7.8	23.4	6.9	5.9
	전체	2.7	8.0	7.9	26.5	16.5	6.5
3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고용, 일자리)	중위28%	2.7	5.4	6.0	33.7	6.0	9.2
	중위40%	2.6	5.9	6.3	29.7	5.9	8.9
	중위43%	2.8	5.7	6.0	29.3	5.7	8.8
	중위50%	2.8	5.9	6.6	27.8	5.6	10.0
	전체	2.3	10.3	9.2	23.2	5.5	6.1
4 성인돌봄, 환자,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 (돌봄 부양부담)	중위28%	17.9	6.0	4.9	16.8	8.7	2.7
	중위40%	17.2	7.1	5.6	14.6	8.6	2.2
	중위43%	16.7	7.1	5.3	14.5	8.2	2.1
	중위50%	15.0	7.5	5.3	14.4	8.5	2.2
	전체	7.0	9.8	7.5	17.2	7.3	3.6
5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관한 어려움 (자녀교육)	중위28%	2.2	5.4	22.3	14.1	5.4	6.0
	중위40%	6.3	6.7	17.5	16.0	5.6	5.2
	중위43%	6.4	6.4	17.0	15.5	5.7	6.7
	중위50%	5.6	6.9	15.4	15.0	7.5	6.9
	전체	2.8	8.1	11.6	25.2	13.8	6.8
6 가정내 불화 및 단절로 인한 어려움 (가정문제)	중위28%	2.2	24.5	9.2	14.1	4.3	6.0
	중위40%	6.3	22.0	13.1	11.9	3.4	5.6
	중위43%	6.3	20.8	12.7	11.6	3.9	7.0
	중위50%	5.9	20.0	12.5	12.5	4.7	6.9
	전체	3.5	20.7	11.2	11.3	2.3	3.1
7 정신건강의 어려움 (우울증 등)	중위28%	2.2	24.9	9.9	15.5	9.4	6.1
	중위40%	2.3	19.7	14.0	19.3	8.3	6.1
	중위43%	2.5	18.6	13.6	18.9	10.4	5.7
	중위50%	2.2	17.8	13.3	20.0	10.5	6.0
	전체	2.9	20.6	8.7	16.0	6.1	2.6

성인돌봄이나 환자 및 장애인에 대한 돌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빈곤가구는 22.9%였고, 이중 8.5%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빈곤가구의 22.5%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17.2%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중 3.9%의 빈곤가구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Ⅵ-13〉 현재 생활여건에 대한 평가

구분		소득분위	있다	없다	비해당
1	지난 한해 동안 돈이 없어서 두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중위28%	5.3	55.1	39.6
		중위40%	5.6	61.1	33.3
		중위43%	5.3	60.7	34.0
		중위50%	5.6	61.6	32.8
		전체	3.9	77.6	18.5
2	지난해 돈이없어서 공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중위28%	8.6	90.9	.0
		중위40%	13.7	86.0	.0
		중위43%	12.9	86.7	.0
		중위50%	13.0	86.6	.0
		전체	11.8	87.9	.2
3	지난해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를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적이 있다	중위28%	5.9	93.1	1.1
		중위40%	9.6	89.7	.7
		중위43%	9.1	90.2	.7
		중위50%	8.7	90.7	.6
		전체	3.3	96.4	.3
4	지난해 돈이없어서 자녀(대학생포함) 공교육비를 한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중위28%	3.2	57.8	39.0
		중위40%	2.9	62.5	34.6
		중위43%	2.8	62.9	34.3
		중위50%	3.1	64.6	32.3
		전체	3.7	77.9	18.4
5	지난해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중위28%	9.1	90.9	.0
		중위40%	9.6	90.4	.0
		중위43%	11.2	88.8	.0
		중위50%	12.7	87.3	.0
		전체	8.8	91.0	.2
6	지난해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수 없었던 적이 있다	중위28%	7.5	91.4	1.1
		중위40%	7.7	91.5	.7
		중위43%	9.1	90.2	.7
		중위50%	9.9	89.4	.6
		전체	4.8	94.6	.6
7	지난해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중위28%	3.7	63.6	32.6
		중위40%	7.7	66.3	26.0
		중위43%	7.3	67.6	25.1
		중위50%	6.5	70.0	23.5
		전체	2.8	89.5	7.8

현재 생활여건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5.6%가 집세를 밀려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이유로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한 경험이 있는 가구도 1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도나 전기가 끊긴 적이 있다는 빈곤가구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빈곤가구도 3.1%였고, 돈이 없어서 난방을 하지 못한 가구도 12.7%였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에너지 빈곤 가구는 10가구 중 1.2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어 병원을 갈수 없었다고 응답한 빈곤가구는 9.9%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급여가 정지된 경험이 있는 빈곤가구도 6.5%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빈곤가구의 약 10% 내외의 비율이 한 집세 체납 문제, 공과금 미납부, 전기 및 수도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생활여건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공과금 미납부(13.0%), 비용부담으로 인한 난방제한(12.7%) 등을 지적했다.

지역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의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빈곤가구의 비율이 46.1%였고, 의료시설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빈곤가구의 비율은 41.2%였다. 쓰레기나 매연 등의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서는 빈곤가구의 18.9%가 동의하고 있었고, 범죄 및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는 16.9%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차별의 문제 등도 빈곤가구의 약 40.0%내외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문제는 빈곤가구의 19.6%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빈부격차의 문제(49.4%), 복지시설 부족문제(46.1%), 의료시설 부족문제(41.2%), 차별 문제(38.3%), 주거환경 열악(37.5%)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복지시설의 부족과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주거환경의 열악성에 대해서는 심각성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표VI-1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구분	소득분위	잘 모르겠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sup>a</sup>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sup>b</sup>	대체로 심각하다 <sup>c</sup>	매우 심각하다 <sup>d</sup>	심각하지 않다 <sup>(a+b)</sup>	심각하다 <sup>(c+d)</sup>
1 복지시설 부족	중위28%	16.5	14.9	20.2	29.3	19.1	35.1	48.4
	중위40%	17.0	15.5	20.3	28.0	19.2	35.8	47.2
	중위43%	16.4	15.4	21.3	28.7	18.2	36.7	46.9
	중위50%	17.3	15.5	21.1	29.4	16.7	36.6	46.1
	전체	16.6	17.0	27.3	26.8	12.3	44.3	39.1
2 의료시설 부족	중위28%	8.0	20.3	29.4	26.7	15.5	49.7	42.2
	중위40%	7.7	20.7	28.4	27.7	15.5	49.1	43.2
	중위43%	7.7	20.6	28.9	26.5	16.4	49.5	42.9
	중위50%	8.7	20.6	29.6	26.2	15.0	50.2	41.2
	전체	9.0	21.9	28.5	27.0	13.5	50.4	40.5
3 쓰레기, 매연 등 환경오염 문제	중위28%	13.4	18.2	56.7	10.2	1.6	74.9	11.8
	중위40%	16.9	18.4	47.4	16.2	1.1	65.8	17.3
	중위43%	16.8	17.8	46.9	17.5	1.0	64.7	18.5
	중위50%	18.0	17.4	45.7	17.7	1.2	63.1	18.9
	전체	14.9	20.4	40.8	22.5	1.4	61.2	23.9
4 범죄, 학교폭력 치안 문제	중위28%	17.7	15.1	55.9	10.2	1.1	71	11.3
	중위40%	19.7	14.9	49.8	10.8	4.8	64.7	15.6
	중위43%	20.1	14.4	48.6	12.3	4.6	63	16.9
	중위50%	19.9	14.0	48.9	13.1	4.0	62.9	17.1
	전체	19.5	15.5	44.3	19.4	1.4	59.8	20.8
5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중위28%	12.3	16.0	33.7	17.1	20.9	49.7	38
	중위40%	12.2	14.8	35.2	17.0	20.7	50	37.7
	중위43%	12.6	14.4	35.1	18.2	19.6	49.5	37.8
	중위50%	13.4	13.7	35.4	18.6	18.9	49.1	37.5
	전체	15.8	18.2	35.1	20.4	10.5	53.3	30.9
6 빈부격차 문제	중위28%	11.2	13.4	34.2	35.8	5.3	47.6	41.1
	중위40%	10.7	12.9	28.0	40.6	7.7	40.9	48.3
	중위43%	10.5	12.6	28.0	40.9	8.0	40.6	48.9
	중위50%	10.9	12.4	27.3	40.7	8.7	39.7	49.4
	전체	17.0	11.7	28.9	34.1	8.4	40.6	42.5
7 차별의 문제	중위28%	12.3	15.5	35.8	32.1	4.3	51.3	36.4
	중위40%	15.6	15.2	31.5	33.3	4.4	46.7	37.7
	중위43%	15.4	14.7	32.9	32.5	4.5	47.6	37
	중위50%	15.3	14.6	31.8	33.3	5.0	46.4	38.3
	전체	19.8	16.4	37.8	21.0	5.0	54.2	26
8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중위28%	7.5	27.8	39.6	24.6	.5	67.4	25.1
	중위40%	6.3	33.1	39.8	20.4	.4	72.9	20.8
	중위43%	8.1	32.6	39.3	19.6	.4	71.9	20
	중위50%	8.4	34.3	37.7	19.0	.6	72	19.6
	전체	9.5	31.9	48.0	9.0	1.5	79.9	10.5

〈표Ⅵ-15〉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

소득분위	여성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생	어르신	장애인	빈곤층	기타
중위28%	2.7	.5	.5	2.7	44.9	7.0	35.8	5.9
중위40%	8.5	.7	.7	2.6	39.3	7.4	36.8	4.0
중위43%	8.1	.7	.7	3.5	38.6	7.4	37.2	3.9
중위50%	7.8	.9	.9	3.1	37.3	7.5	38.8	3.7
전체	14.1	9.0	7.3	12.2	24.5	5.4	24.4	2.9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할 복지대상으로는 중위소득 50%미만 빈곤가구의 37.3% 노인을 위한 복지를 지적하였다. 이외에는 빈곤층 38.8%, 여성 7.8%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노인 및 빈곤층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Ⅵ-16〉 지역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소득분위	대중교통 접근성 불편	시설 불편 낙후	불결한 환경	행정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프로그램 부족	제한된 이용 시간	질 낮은 서비스	사회복지사 직원의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의 시간 부족	기타
중위28%	40.9	2.2	.5	.5	7.0	17.7	2.2	.5	.0	10.2	12.4	5.9
중위40%	41.0	1.8	.4	4.4	8.5	13.3	1.8	1.1	.0	9.6	12.9	5.2
중위43%	41.3	2.1	.3	4.2	8.7	12.9	1.7	1.0	.0	9.4	13.3	4.9
중위50%	40.1	2.5	.3	4.0	8.7	12.1	2.2	.9	.0	9.0	15.5	4.7
전체	22.4	2.9	2.2	1.8	19.7	14.1	6.8	1.1	.5	3.4	22.9	1.9

지역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으로는 전체적으로 본인의 시간부족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빈곤가구 기준으로는 대중교통 및 접근성의 불편함이 40%를 약간 상회하며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전체적으로 10%대 이하로 이용경험이 매우 낮았으며, 그 중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이 10.5%로 가장 많았다. 빈곤가구의 경우 의료비지원의 이용경험이 17.6%~20.4%로 많았고, 생계비지원, 물품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전라북도의 빈곤계층은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대중교통의 불편에 따른 접근성 불편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였고, 또한 정보제공의 부족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표VI-17〉 소득분위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서비스 유형	중위28%		중위40%		중위43%		중위50%		전체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1	생계비지원	11.2	88.8	12.5	87.5	14.0	86.0	14.6	85.4	4.7	95.0
2	의료비지원	17.6	82.4	17.6	82.4	19.2	80.8	20.4	79.6	8.7	91.3
3	물품지원(식료품 등)	9.2	90.8	11.5	88.5	13.1	86.9	14.4	85.6	5.7	94.3
4	가정봉사(청소,세탁)	5.3	94.7	4.4	95.6	4.2	95.8	5.0	95.0	1.9	98.1
5	아이돌봄서비스	1.1	98.9	1.5	98.5	3.2	96.8	3.4	96.6	10.5	89.5
6	노인돌봄서비스	2.2	97.8	2.6	97.4	2.5	97.5	2.5	97.5	2.5	97.4
7	식사배달서비스	6.4	93.6	5.9	94.1	5.6	94.4	6.8	93.2	1.9	98.0
8	주거복지(집수리 등)	9.6	90.4	8.1	91.9	8.0	92.0	9.3	90.7	3.4	96.6
9	직업훈련/취업상담	6.4	93.6	6.3	93.7	5.9	94.1	5.6	94.4	2.4	97.6
10	심리정서상담	2.1	97.3	1.8	97.8	1.7	97.9	1.5	98.1	1.6	98.3
11	약물중독치유	1.6	98.4	1.1	98.9	1.1	98.9	1.2	98.8	0.5	99.5
12	부모상담, 부모교육	1.1	98.9	0.7	99.3	0.7	99.3	0.9	99.1	3.3	96.7
13	각종대출 용자	2.7	97.3	2.6	97.4	2.4	97.6	2.8	97.2	7.6	92.4

다음으로 빈곤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보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계층은 14.6%였고, 의료비지원 20.4%, 물품지원 14.4%, 주거복지 9.3% 등의 순이었다. 이용율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심리정서상담,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의 사업이었다.

〈표VI-18〉 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서비스 유형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 일부 수급		차상위계층		일반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1	생계비지원	31.5	68.5	38.9	61.1	20.0	80.0	23.8	76.2	1.0	98.6
2	의료비지원	33.9	66.1	55.6	44.4	40.0	60.0	52.4	47.6	4.1	95.9
3	물품지원(식료품 등)	21.7	78.3	47.1	52.9	30.0	70.0	31.0	69.0	2.7	97.3
4	가정봉사(청소,세탁)	10.2	89.8	-	100.0	-	100.0	11.6	88.4	0.8	99.2
5	아이돌봄서비스	1.6	98.4	-	100.0	11.1	88.9	23.8	76.2	11.2	88.8
6	노인돌봄서비스	3.9	96.1	5.9	94.1	-	100.0	14.3	85.7	1.9	98.0
7	식사배달서비스	12.2	87.8	11.1	88.9	10.0	90.0	14.3	85.7	0.4	99.5
8	주거복지(집수리 등)	17.1	82.9	27.8	72.2	20.0	80.0	14.3	85.7	1.2	98.8
9	직업훈련/취업상담	11.7	88.3	-	100.0	10.0	90.0	16.7	83.3	1.1	98.9
10	심리정서상담	3.9	96.1	5.6	94.4	-	100.0	7.1	92.9	0.8	99.1
11	약물중독치유	2.4	97.6	-	100.0	-	100.0	7.1	92.9	0.5	99.5
12	부모상담, 부모교육	2.4	97.6	5.6	94.4	20.0	80.0	11.9	88.1	2.8	97.2
13	각종대출 용자	3.3	96.7	0.0	100.0	20.0	80.0	16.7	83.3	7.4	92.6

수급자 형태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역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전체적으로 11.2%로 많았고, 의료비지원, 생계비지원, 물품지원 등의 생계에 밀접한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많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방문형 복지서비스인 가정봉사서비스의 경우 다른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고, 차상위계층의 이용경험이 11.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VI-19〉 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사회서비스유형	중위 28%		중위 40%		중위 43%		중위 50%		전체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1	노인돌봄종합	31.7	68.3	32.2	67.8	31.5	68.5	30.7	69.3	17.5	82.5
2	장애인활동보조	12.7	87.3	13.2	86.8	12.9	87.1	13.4	86.6	10.5	89.5
3	산모산생아도우미	3.9	96.1	3.6	96.4	3.5	96.5	4.4	95.6	4.5	95.5
4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6.6	83.4	18.8	81.2	18.5	81.5	18.9	81.1	12.6	87.4
5	지역사회서비스	6.1	93.9	10.8	89.2	12.2	87.8	12.0	88	11.6	88.4
6	아동인지능력향상	4.4	95.6	8.0	92	9.8	90.2	9.6	90.4	10.6	89.4
7	임실출산지원	3.9	96.1	3.6	96.4	3.4	96.6	3.7	96.3	5.4	94.6
8	장애아동 재활치료	4.5	95.5	5.6	94.4	5.3	94.7	5.3	94.7	7.3	92.7
9	I 사랑 보육서비스	3.9	96.1	3.6	96.4	3.4	96.6	3.4	96.6	9.9	90.1
10	언어발달지원	3.9	96.1	3.6	96.4	3.4	96.6	3.0	97	3.6	96.4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으로는 빈곤가구의 경우 노인돌봄이 30.7%로 가장 높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8.9%, 장애인활동보조 13.4%, 지역사회서비스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이외 일반 가구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17.5%로 가장 많았지만 빈곤가구의 이용경험은 30.7%로 나타나 일반 가구보다는 빈곤가구의 이용율이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평균보다 약 14% 높게 나타났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전체적인 이용경험이 12.6%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다음으로 이용경험이 많았고, 빈곤가구의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약 18%선으로 전체이용경험보다 약 6% 높았다.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경험으로는 보건소의 이용경험이 빈곤가구 전체적으로 90%를 상회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Ⅵ-20〉 사회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이용만족도

구분		이용경험		이용만족도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한 적 있다	잘모르겠다	앞으로 이용안한다	앞으로 이용한다	
1	종합사회복지관	중위28%	77.1	22.9	57.8	16.8	25.4
		중위40%	81.2	18.8	58.9	14.8	26.3
		중위43%	81.8	18.2	59.0	15.3	25.7
		중위50%	81.9	18.1	57.4	14.9	27.7
		전체	83.5	16.5	55.2	6.0	38.8
2	종합자원봉사센터	중위28%	93.6	6.4	62.8	18.0	19.2
		중위40%	94.9	5.1	65.1	16.2	18.7
		중위43%	95.2	4.8	65.3	16.5	18.1
		중위50%	93.9	6.1	64.4	15.3	20.3
		전체	91.6	8.4	61.1	6.9	32.0
3	지역자활센터	중위28%	97.1	2.9	70.5	18.2	11.4
		중위40%	97.9	2.1	70.1	16.6	13.3
		중위43%	97.6	2.4	70.2	16.1	13.7
		중위50%	97.8	2.2	70.1	16.0	13.9
		전체	94.3	5.7	66.3	8.2	25.5
4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위28%	89.5	10.5	62.1	9.0	28.8
		중위40%	92.3	7.7	63.6	9.5	26.9
		중위43%	92.7	7.3	62.1	9.8	28.1
		중위50%	93.1	6.9	63.0	9.7	27.3
		전체	94.9	5.0	60.2	5.8	34.0
5	보건소	중위28%	6.1	93.9	5.0	1.1	93.9
		중위40%	6.0	93.6	5.2	.8	94.0
		중위43%	7.9	91.7	4.9	1.1	93.9
		중위50%	7.4	92.3	5.0	1.0	94.0
		전체	17.8	82.2	7.1	.9	92.1

보건소의 향후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92.1%로 앞으로 이용한다는 비중이 가장 많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향후 이용한다고 38.8%로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이용경험이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10%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향후 이용한다는 비중이 26%를 상회하며 다소 높았다.

지역의 복지관에서는 빈곤가구의 이용경험율이 가장 높은 보건소가 92.3%로 가장 높고, 종합사회복지관 16.5%, 종합자원봉사센터 8.4%, 지역자활센터 5.7%, 건강가정지원센터 5.0%였다. 이용만족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27.7%, 종합자원봉사센터 20.3%, 지역자활센터 13.9%, 건강가정지원센터 27.3%, 보건소 94.0%였다.

## 2) 여성빈곤가구의 빈곤실태 및 욕구

전라북도 여성의 학력은 고졸이 5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졸 34.1%, 중졸 9.4% 등의 순이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서는 고졸이 37.8%로 가장 높았고, 대졸은 35.4%, 중졸 15.7%, 초졸 9.3%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우 대졸의 학력도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가구가 35.4%에 이르고 있는 부분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 고졸 학력자의 상대적 빈곤율 높았고, 대출자도 전체 여성의 34.1%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었다.

〈표VI-21〉 전라북도 여성 빈곤가구의 교육수준

구분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기타
생계급여 (중위28%)	12.9	19.4	14.5	51.6		1.6
의료급여 (중위40%)	10.2	16.3	27.6	44.9		1.0
주거급여 (중위43%)	9.3	15.0	32.7	41.1		1.9
교육급여 (중위50%)	9.4	15.7	37.8	35.4		1.6
전체	5.2	9.4	50.5	34.1	0.3	0.6

여성가구 형태별 빈곤율은 한부모가정의 상대적 빈곤율이 5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부자녀가구 24.4%, 3세대 가구 15.0% 등의 순이었다. 대체로 여성 빈곤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한부모 자녀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VI-22〉 전라북도 여성가구 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구분	가구형태						수급자 형태				
	부부 가구	부부 자녀 가구	한부모+ 자녀 가구	3세대 가구	조부모 한자녀 가구	기타	일반 수급 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가구원 중 일부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일반
중위28%	21.7	65.0	11.7	1.7	0.0	0.0	13.1	1.6	4.9	6.6	73.7
중위40%	28.6	57.1	10.2	2.0	0.0	2.0	9.2	1.0	3.1	5.1	81.6
중위43%	26.4	54.7	15.1	1.9	0.0	1.9	9.4	0.9	2.8	9.4	0.9
중위50%	3.1	24.4	52.0	15.0	3.9	1.6	8.7	1.6	2.4	7.9	78.8

수급자의 형태로는 일반수급가구가 전반적으로 많았고, 중위소득 43%의 경우 일반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비율이 9.4%로 같았고, 중위소득 50%일때도 일반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차이가 0.8%로 매우 적었다.

〈표VI-23〉 여성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구분	소득분위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여부			
		잘 모름	조금 안다	잘 안다	없다	있다	잘 모르 겠음	이용 안함	이용함	
1	지역자활센터	중위28%	75.8	12.9	11.3	100.0	.0	90.6	3.8	5.7
		중위40%	80.4	12.4	7.2	100.0	.0	73.8	5.0	21.3
		중위43%	80.0	13.3	6.7	100.0	.0	74.4	5.8	19.8
		중위50%	79.2	12.8	8.0	100.0	.0	75.5	5.7	18.9
		전체	58.1	30.8	11.1	96.3	3.7	62.7	9.0	28.3
2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위28%	78.7	9.8	11.5	98.2	1.8	90.6	3.8	5.7
		중위40%	81.6	11.2	7.1	98.8	1.2	72.5	3.8	23.8
		중위43%	81.1	12.3	6.6	98.9	1.1	66.7	5.7	27.6
		중위50%	80.2	12.7	7.1	99.1	.9	63.8	5.7	30.5
		전체	57.0	29.5	13.5	93.2	6.8	59.0	12.1	28.9
3	여성상담소	중위28%	73.8	14.8	11.5	100.0	.0	94.3	1.9	3.8
		중위40%	77.8	13.1	9.1	100.0	.0	75.9	3.8	20.3
		중위43%	77.6	14.0	8.4	100.0	.0	69.8	4.7	25.6
		중위50%	73.2	16.5	10.2	100.0	.0	69.5	4.8	25.7
		전체	57.8	30.6	11.6	97.5	2.5	63.4	14.1	22.5
4	여성문화센터 및 여성문화의집	중위28%	74.2	9.7	16.1	94.5	5.5	86.8	3.8	9.4
		중위40%	76.5	12.2	11.2	96.3	3.8	68.8	5.0	26.3
		중위43%	76.4	13.2	10.4	95.5	4.5	64.0	5.8	30.2
		중위50%	68.5	18.9	12.6	96.2	3.8	62.3	5.7	32.1
		전체	51.3	29.1	19.6	81.9	18.1	46.4	12.0	41.6
5	전북여성 일자리센터	중위28%	78.7	9.8	11.5	98.2	1.8	88.5	1.9	9.6
		중위40%	80.6	10.2	9.2	96.3	3.7	71.3	1.3	27.5
		중위43%	79.4	12.1	8.4	96.6	3.4	65.5	3.4	31.0
		중위50%	73.2	15.7	11.0	97.2	2.8	63.2	4.7	32.1
		전체	59.4	27.8	12.8	91.8	8.2	56.0	11.4	32.6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아주 낮았고, 그 중 여성문화센터 및 여성문화의집 등 문화관련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19.6%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의 이용경험 또한 전반적으로 1%~2% 수준으로 아주 낮았고 여성문화센터 및 문화의집의 이용경험이 3.8%~5.5%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중위 28% 빈곤가구의 경우 향후 이용수요가 모든 시설에서 10%미만으로 매우 낮았고, 빈곤가구의 소득기준이 높아질수록 시설의 이용수요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불편한 점으로는 일반 여성가구의 경우 본인 시간 부족 등 개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부족과 대중교통 부족 등이 높은 비율이었지만 빈곤가구의 경우 대중교통 등 접근성 부족과 서비스의 낮은 품질 등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중위소득 28% 이하 가구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은 문제가 여성복지시설 이용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빈곤여성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질은 개선이 필요하다.

〈표VI-24〉 여성관련 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

구분	대중 교통 접근성 불편	시설 불편 낙후	불결한 환경	행정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프로 그램 부족	제한된 이용 시간	질낮은 서비스	직원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 시간 부족	기타
중위28%	11.3				8.1	3.2		45.2	4.8	1.6	16.1	9.7
중위40%	22.2			11.1	5.1	5.1		29.3	3.0	1.0	15.2	8.1
중위43%	25.2			10.3	5.6	4.7		27.1	2.8	.9	15.9	7.5
중위50%	24.2	.8		8.6	5.5	4.7	.8	22.7	2.3	1.6	21.1	7.8
전체	11.8	1.0	.3	3.4	19.9	11.6	9.6	3.5	.7	2.7	33.5	2.0

여성관련 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본인의 시간부족이 전체적으로 3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보제공부족이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가 전체적으로는 3.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빈곤가구별로는 적게는 22.7%에서 많게는 45.2%까지 나타나 서비스의 질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여성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체적으로는 문화 및 여가활동 서비스가 37.7%로 가장 많았으나, 빈곤가구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서비스의 필요성이 50.4%에서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았다.

〈표VI-25〉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구분	직업훈련 직업알선 서비스	문화여가활 동 서비스	건강의료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가정성 폭력 피해자 쉼터	기타
중위28%	60.7	6.6	9.8	1.6		6.6	3.3	11.5
중위40%	54.1	8.2	21.4	1.0	.0	4.1	3.1	8.2
중위43%	54.2	9.3	20.6	1.9	.0	3.7	2.8	7.5
중위50%	50.4	11.8	22.8	1.6	.0	3.9	2.4	6.3
전체	24.9	37.7	21.8	6.8	4.2	2.0	.7	1.8

전체적으로는 일반 여성은 문화 여가 활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37.7%로 가장 높았지만 빈곤가구의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서비스 등 일자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여성의 경우 31.0%로 매우 높았지만 빈곤여성의 경우 중위소득 28%이하 가구 12.9%로 가장 높고 그 외에는 9.4% 정도 수준이었다. 직장을 그만 둔 시기에서는 빈곤여성의 경우 만3세에서 취학 전이 가장 높았지만 일반 여성의 경우 임신시와 출산 및 출산 휴가 후 그만 둔 경우가 각각 34.3%, 32.2%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 여성가구는 직장을 그만 둔 경험율이 일반 여성가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VI-26〉 자녀양육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

구분	직장을 그만둔 경험			직장을 그만둔 시기					
	있다	없다	비해당	임신 했을때	출산 및 출산휴가 후	만1세 이전	만1세~ 2세	만3세~ 취학전	비해당
중위 28%	12.9	56.5	30.6		22.2		11.1	55.6	11.1
중위 40%	9.0	63.0	28.0	10.0	20.0		10.0	50.0	10.0
중위 43%	8.3	64.8	26.9	10.0	20.0		10.0	50.0	10.0
중위 50%	9.4	58.6	32.0	5.9	23.5	5.9	5.9	29.4	29.4
전체	31.0	41.0	28.0	34.3	32.2	3.8	5.1	14.7	9.9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28%에서 12.9%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만3세~취학전 일 때 55.6%가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VI-27〉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

구분	수입보다 보육비용 많아서	아이를 믿고 맡길곳 없어	일이많아 육아에 지장을 줘서	몸이 힘들어서	직장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중위 28%	25.0	62.5		12.5	
중위 40%	25.0	62.5		12.5	
중위 43%	25.0	62.5		12.5	
중위 50%	45.5	45.5		9.1	
전체	28.8	45.3		22.5	

직장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반 여성가구와 빈곤여성 가구 모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만, 이 같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는 일반 여성가구는 45.3%였지만 중위소득 28%이하는 62.5%로 일반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빈곤 여성가구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가구는 67.8%였지만 중위소득 50%이하의 빈곤가구는 78.8%였다. 빈곤 여성가구가 일반 여성가구보다는 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노동수요에 대해서는 일반 여성가구의 경우 60.6%였고, 중위소득 50%이하 빈곤가구의 경우 56.0%~60.0% 수준이었다.

〈표VI-28〉 근로 여부 및 근로희망

구분	현재 근로 여부		향후 일을 할 의향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있다	없다
중위 28%	74.1	25.9	60.0	40.0
중위 40%	77.6	22.4	50.0	50.0
중위 43%	78.6	21.4	50.0	50.0
중위 50%	78.8	21.2	56.0	44.0
전체	67.8	32.2	60.6	39.4

빈곤가구의 모든 형태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가 75%대 이상으로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향후 일을 할 의향이 50%에서 60% 수준으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그리 높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과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경우 향후 일할 의향 모두 빈곤 여성가구와 일반 여성가구의 수요가 큰 차이가 없었다.



〈표Ⅵ-29〉 근로희망 업종

구분	교육/상담	행정지원	서비스직	생산직	복지 서비스직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중위 28%		18.2	27.3	36.4	18.2			
중위 40%	52.0	8.0	12.0	20.0	8.0			
중위 43%	52.0	8.0	12.0	20.0	8.0			
중위 50%	39.4	9.1	15.2	15.2	15.2			6.1
전체	19.0	13.8	24.2	12.4	25.6	3.3	.8	.8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업종으로는 중위소득 40% 이상에서는 교육 및 상담 관련 일자리의 비중이 높았고, 중위소득 28%에서는 생산직의 수요가 36.4%로 가장 많았다. 또한, 희망하는 급여수준으로는 빈곤가구에서는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고용형태로는 상용직이 70%대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희망급여수준에서는 빈곤여성가구의 경우 희망급여 100만원 이하가 22.5%로 일반 여성가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Ⅵ-30〉 희망급여 및 희망고용형태

구분	희망급여						희망고용형태			
	100만원 미만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 이상	상용직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중위28%	21.7	6.5	8.7	60.9	2.2		74.5	4.3	12.8	8.5
중위40%	19.7	7.6	28.8	42.4	1.5		74.2	6.1	12.1	7.6
중위43%	17.6	8.1	32.4	40.5	1.4		76.7	5.5	11.0	6.8
중위50%	22.5	9.0	31.5	36.0	1.1		71.1	12.0	9.6	7.2
전체	15.0	28.0	29.5	19.5	2.2	5.8	60.4	20.7	16.7	2.2

새 직장을 선택할 경우 중요한 요소로는 직장상사의 직장여성에 대한 이해정도가 전체적으로 54.6%로 가장 많았고 빈곤가구별로도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고용의 안정성 등의 중요도가 임금 또는 소득수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희망하는 고용형태에서는 빈곤여성가구는 71.1%로 일반 가구 60.4%보다도 높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일반 여성가구가 20.7%로 빈곤여성가구 12.0%로 일반 여성가구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일반 여성가구는 시간제와 계약직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빈곤 여성가구는 상용직에 대한 수요가 일반 여성가구보다도 높았다.

〈표VI-31〉 새직장 선택시 중요도

구분	소득분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임금 또는 소득수준	중위28%	1.9		57.7	26.9	13.5
		중위40%	1.2	.0	48.2	21.7	28.9
		중위43%	1.1	.0	45.1	23.1	30.8
		중위50%	.9	.0	38.9	26.9	33.3
		전체	.3	1.2	10.2	41.0	47.3
2	고용의 안정성	중위28%	1.9		7.7	78.8	11.5
		중위40%	1.2	.0	4.8	54.2	39.8
		중위43%	1.1	.0	5.5	51.6	41.8
		중위50%	.9	.0	5.6	52.8	40.7
		전체	.2	.6	6.5	39.6	53.1
3	근로환경(작업환경)	중위28%	1.9		5.8	28.8	63.5
		중위40%	1.2		3.6	23.8	71.4
		중위43%	1.1		4.3	29.3	65.2
		중위50%	.9		3.7	36.1	59.3
		전체	.3	.5	6.4	40.6	52.2
4	개인의 업무적성	중위28%	1.9	1.9	9.6	76.9	9.6
		중위40%	13.3	1.2	7.2	49.4	28.9
		중위43%	12.1	2.2	6.6	52.7	26.4
		중위50%	10.2	1.9	5.6	57.4	25.0
		전체	1.3	2.1	7.6	47.7	41.3
5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여부	중위28%	5.9	2.0	5.9	78.4	7.8
		중위40%	16.9	2.4	4.8	50.6	25.3
		중위43%	15.4	3.3	9.9	48.4	23.1
		중위50%	13.9	3.7	10.2	50.0	22.2
		전체	4.9	10.7	17.9	30.0	36.5
6	근무시간(정시퇴근여부)	중위28%	1.9		5.8	28.8	63.5
		중위40%	1.2	13.1	4.8	21.4	59.5
		중위43%	1.1	12.1	4.4	27.5	54.9
		중위50%	.9	10.2	3.7	34.3	50.9
		전체	.2	1.8	6.7	37.6	53.6
7	직장상사의 직장여성에 대한 이해정도	중위28%	2.0		7.8	25.5	64.7
		중위40%	1.2	.0	4.9	20.7	73.2
		중위43%	1.1	.0	5.5	22.0	71.4
		중위50%	.9	.0	5.6	27.1	66.4
		전체	.3	1.5	7.9	35.7	54.6

### 3) 취학전아동가구의 빈곤실태 및 욕구

지역 내 보육시설은 충분하지 않다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곳 ~ 2곳이 빈곤가구별로 모두 100%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빈곤가구의 약 87% 이상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45.2%만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보육시설의 충분한 설치에 대해서는 빈곤가구의 상당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도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일반 보육아동양육 가구의 경우 63.3%정도만 충분치 않다고 응답해 유치원의 설치에 대해서도 빈곤 영유아 가정은 설치율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Ⅵ-32〉 보육시설 설치 여부와 안심정도

구분	소득분위	설치여부				안심할 수 있는 시설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없음	1-2곳	많음	잘모름
1 어린이집	중위28%		100.0	.0			100.0		
	중위40%	.0	96.7	3.3		100.0	.0		
	중위43%	.0	93.5	6.5		100.0	.0		
	중위50%	3.0	87.9	6.1	3.0	100.0	.0		
	전체	3.9	45.2	35.8	15.2	19.5	39.3	17.3	23.9
2 유치원	중위28%		100.0	.0			100.0		
	중위40%	.0	100.0	.0			100.0		
	중위43%	.0	100.0	.0			100.0		
	중위50%	.0	93.5	6.5		.0	100.0		
	전체	5.4	63.3	30.8	.5	15.8	61.2	1.9	21.1

다음으로 영유아 대상 아동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으로는 직원의 불친절함이 빈곤가구별로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정보제공의 부족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가 27.6%로 가장 많았다. 전술한 여성복지시설의 경우도 빈곤여성의 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운 점으로 직원의 불친절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가구에 대한 복지시설의 불친절은 일정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Ⅵ-33〉 미취학 아동대상 복지시설이용시 불편한 점

구분	대중교통 접근성 불편	시설 불편 낙후	불결한 환경	행정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프로그램 부족	제한된 이용 시간	질 낮은 서비스	직원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 시간 부족	기타
중위28%						.0			100.0			.0
중위40%	.0				.0	.0			100.0			.0
중위43%	.0				.0	3.4			96.6			.0
중위50%	.0				.0	3.2			90.3	.0		6.5
전체	6.3	1.0	3.5	4.1	27.6	21.0	6.0	8.6	8.9	9.2	.6	3.2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반적으로 영유아 전용 도서관의 확대가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의 경우에는 영유아와 부모의 공동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34.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위소득 43%까지의 빈곤영유아 가구는 영유아 전용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고, 일반 영유아 가정의 경우 영유아와 부모의 공동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Ⅵ-34〉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시간연장형 교육	휴일보육	장애아 전담보육	영유아 전용도서관 확대	영유아부모 공동문화공간	영유아 모 일자리	기타
중위28%				100.0	.0		
중위40%				96.7	3.3		.0
중위43%				96.7	3.3		.0
중위50%	13.1	21.9	.4	26.9	34.3	3.2	.4
전체	12.1	19.7	.3	33.4	31.2	2.9	.3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는 중위소득 50%의 경우 선생님의 자질이 58.3%로 가장 많았고, 그 이하의 소득기준 가구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96.7% ~ 1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Ⅵ-35〉 보육시설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구분	선생님 자질	운영 시간	시설 규모	시설 청결도	급식 간식 영양	집과의 거리	주위 평판	비용	기타
중위28%						.0		100.0	
중위40%					.0	.0	.0	100.0	
중위43%	3.3				.0	.0	.0	96.7	
중위50%	58.3	5.7	10.6	3.2	14.5	1.8	5.3	.4	.4
전체	52.9	5.1	9.6	2.9	13.1	1.6	4.8	9.9	.3

#### 4) 초등학생 가구의 빈곤실태 및 욕구

초등학생 관련 복지시설의 경우 모든 빈곤가구에서 도서관을 80%이상 알고 있었고, 이용경험과 향후 이용수요 또한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인지도 및 이용경험 등의 수요가 가장 낮은 시설은 아동상담소로 이용을 한 경험이 모든 빈곤가구에서 0%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수요 또한 중위소득 43%이상의 가구에서 만 14.3%, 17.4% 등으로 낮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표VI-36〉 초등학생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구분	소득분위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여부			
		잘 모름	조금 안다	잘 안다	없다	있다	잘 모르겠음	이용 안함	이용함	
1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중위28%	91.9	5.4	2.7	97.2	2.8	88.2	.0	11.8
		중위40%	87.5	10.0	2.5	94.9	5.1	86.1	.0	13.9
		중위43%	77.8	20.0	2.2	93.2	6.8	73.8	.0	26.2
		중위50%	75.0	20.8	4.2	91.7	8.3	69.6	.0	30.4
		전체	35.3	40.8	23.9	61.4	38.6	31.6	4.1	64.3
2	공부방	중위28%	5.4	91.9	2.7	100.0	.0	88.2	.0	11.8
		중위40%	7.7	89.7	2.6	97.4	2.6	83.8	2.7	13.5
		중위43%	8.9	77.8	13.3	86.4	13.6	73.8	2.4	23.8
		중위50%	14.3	71.4	14.3	87.5	12.5	71.1	2.2	26.7
		전체	29.2	55.3	15.5	73.1	26.9	49.3	8.6	42.1
3	도서관	중위28%	5.3	10.5	84.2	11.1	88.9	.0	5.9	94.1
		중위40%	5.1	12.8	82.1	12.8	87.2	.0	5.6	94.4
		중위43%	4.4	13.3	82.2	11.4	88.6	.0	4.8	95.2
		중위50%	4.1	12.2	83.7	10.4	89.6	.0	4.3	95.7
		전체	6.0	37.1	56.9	10.5	89.5	5.8	4.1	90.1
4	드림스타트센터	중위28%	97.3	2.7	.0	100.0	.0	97.1	2.9	.0
		중위40%	97.4	2.6	.0	100.0	.0	94.4	2.8	2.8
		중위43%	86.4	13.6	.0	88.4	11.6	85.0	2.5	12.5
		중위50%	85.4	12.5	2.1	87.2	12.8	79.5	2.3	18.2
		전체	77.6	19.2	3.2	93.5	6.5	70.6	4.9	24.5
5	아동상담소	중위28%	94.6	5.4	.0	100.0	.0	97.1	2.9	.0
		중위40%	92.3	7.7	.0	100.0	.0	94.4	5.6	.0
		중위43%	93.3	6.7	.0	100.0	.0	81.0	4.8	14.3
		중위50%	89.8	10.2	.0	100.0	.0	78.3	4.3	17.4
		전체	67.3	28.3	4.4	96.0	4.0	64.4	3.1	32.5
6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중위28%	8.3	86.1	5.6	88.9	11.1	82.4	11.8	5.9
		중위40%	7.7	84.6	7.7	86.8	13.2	80.0	11.4	8.6
		중위43%	6.8	84.1	9.1	86.4	13.6	80.5	9.8	9.8
		중위50%	10.2	79.6	10.2	85.4	14.6	77.3	9.1	13.6
		전체	24.5	47.8	27.7	67.3	32.7	44.7	5.1	50.2

빈곤 초등학생의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공부방,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상담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순으로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경험에 있어서는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높은 10% 이내의 낮은 이용율을 보였고, 인지율에 있어서도 빈곤 초등학생 가구의 경우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 이내였다.

초등학생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정보의 제공부족이 28.7%로 가장 많았으나, 빈곤가구별로는 서비스의 낮은 질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다가 중위소득 50% 기준에서 58.3%, 중위소득 43% 기준 63.6%까지 높게 나타났다. 일반 초등학생 가구에서는 정보부족과 대중교통부족 등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된 것과는 다소 차이나는 결과이다.

〈표VI-37〉 취학아동대상 복지시설이용시 불편한 점

구분	대중교통 접근성 불편	시설 불편 나후	불결한 환경	행정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프로그램 부족	제한된 이용 시간	질 낮은 서비스	직원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 시간 부족	기타
중위28%	8.3				5.6	.0		77.8	8.3			
중위40%	7.7				5.1	2.6	2.6	71.8	7.7			2.6
중위43%	6.8				4.5	2.3	13.6	63.6	6.8			2.3
중위50%	8.3		.0		4.2	4.2	12.5	58.3	6.3		4.2	2.1
전체	20.3	6.3	1.5		28.7	13.7	9.6	11.6	.9	3.3	3.0	1.2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체적으로는 방과 후 학습지도가 29.9%로 가장 많았으나 빈곤가구별로는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 적게는 77.6%에서 많게는 89.2%까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VI-38〉 취학아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방과후 학습지도	취미특기 교실	체험학습 활동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부모상담 교육	자녀 교육비 지원	원어민 영어교육	기타
중위28%	8.1	2.7				89.2		
중위40%	10.3	2.6			.0	84.6		2.6
중위43%	9.1	2.3			.0	86.4		2.3
중위50%	14.3	2.0	4.1		.0	77.6		2.0
전체	29.9	13.6	15.7	5.5	.0	27.5	7.5	.3

〈표Ⅵ-39〉 아동대상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의향

구분	소득분위	이용여부		향후 이용의향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이용 안한다	이용 한다	
1	아동상담, 집단프로그램	중위28%	100.0	.0	94.1	.0	5.9
		중위40%	100.0	.0	91.7	.0	8.3
		중위43%	88.9	11.1	80.5	.0	19.5
		중위50%	87.8	12.2	78.3	.0	21.7
		전체	94.3	5.7	63.8	4.5	31.7
2	방과후 학교	중위28%	2.7	97.3		.0	100.0
		중위40%	2.6	97.4	.0	2.6	97.4
		중위43%	2.2	97.8	.0	2.2	97.8
		중위50%	4.1	95.9	2.1	2.1	95.8
		전체	22.6	77.4	10.5	4.3	85.1
3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위28%	91.9	8.1	3.0	84.8	12.1
		중위40%	89.7	10.3	5.7	80.0	14.3
		중위43%	77.8	22.2	4.9	68.3	26.8
		중위50%	79.6	20.4	8.9	62.2	28.9
		전체	82.8	17.2	43.0	23.1	33.9
4	무료급식	중위28%	5.4	94.6	2.7		97.3
		중위40%	5.1	94.9	5.0		95.0
		중위43%	4.4	95.6	4.4		95.6
		중위50%	6.1	93.9	4.2		95.8
		전체	25.8	74.2	17.3	4.2	78.6
5	학비지원	중위28%	91.9	8.1	89.5	5.3	5.3
		중위40%	92.3	7.7	87.5	5.0	7.5
		중위43%	82.2	17.8	77.8	4.4	17.8
		중위50%	83.7	16.3	75.5	4.1	20.4
		전체	75.9	24.1	41.7	5.2	53.1
6	예체능 교실	중위28%	10.8	89.2	8.1		91.9
		중위40%	12.5	87.5	10.3		89.7
		중위43%	11.1	88.9	8.9		91.1
		중위50%	10.2	89.8	10.2		89.8
		전체	61.0	39.0	48.2		51.8
7	문화활동	중위28%	18.9	81.1	10.8		89.2
		중위40%	20.0	80.0	10.3		89.7
		중위43%	28.9	71.1	8.9		91.1
		중위50%	30.6	69.4	10.2		89.8
		전체	68.7	31.3	39.6	4.3	56.1
8	가정봉사 서비스	중위28%	100.0		94.6	2.7	2.7
		중위40%	100.0		94.9	2.6	2.6
		중위43%	100.0		82.2	2.2	15.6
		중위50%	100.0		81.3	2.1	16.7
		전체	98.6	1.4	58.5	13.6	27.9

아동대상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방과후 학교, 무료급식, 예체능교실, 문화활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았고,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 초등학생 가구의 경우 방과후 학교, 예체능교실,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가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용율에 있어서는 방과후 학교와 예체능 교실을 제외하고는 이용율이 높지 않아 빈곤 초등학생의 복지수요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한편,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는 집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및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등에서 방과후 시간을 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초등학생이 방과후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77.6%로 일반 아동 48.4%의 약 두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은 방과후 보내는 빈곤 아동의 비율이 5% 이내였다.

〈표VI-40〉 초등학생자녀가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구분	집	조부모 집	친척집	학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친구 집	기타
중위28%	94.6			5.4			.0
중위40%	89.7	.0		5.1	2.6		2.6
중위43%	79.5	.0		4.5	2.3		13.6
중위50%	77.6	.0		6.1	4.1		12.2
전체	48.4	.3	3.7	33.8	10.6	1.4	1.7

방과 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방과 후 학원비 지원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교에서 방과 후 연장교육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VI-41〉 초등학생자녀 방과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구분	학교에서 방과후 연장교육	지역아동센터 확대	여가문화 복지시설확대	방과 후 학원비지원	기타
중위28%	10.8	.0		89.2	
중위40%	12.8	.0		87.2	
중위43%	20.5	.0		79.5	
중위50%	24.5	2.0		73.5	
전체	26.9	6.9		66.2	



〈표VI-42〉 초등학생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구분	학습지도	학교 부적응	문제행동	방과후 돌봄교육	진로지도	여가활동 부족	게임중독	자녀건강	기타
중위28%	2.7			10.8	10.8	75.7			
중위40%	5.0			10.0	10.0	72.5			2.5
중위43%	4.4			20.0	8.9	64.4			2.2
중위50%	8.3			18.8	8.3	62.5			2.1
전체	27.8			11.2	8.0	41.0	10.6	.3	1.1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여가활동의 부족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비도의 경우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27.8%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빈곤가구에서는 8%대 이하로 학습지도의 어려움은 매우 낮았다.

〈표VI-43〉 초등학생자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1순위

구분	아동양육 시설확대	아동폭력에 방정책	아동급식 지원	취약아동 가족지원	자녀상담 지원	방과후 돌봄지원	문화여가 활동지원
중위28%	2.7		.0	2.7	2.7	5.4	86.5
중위40%	2.6	2.6	.0	2.6	2.6	5.3	84.2
중위43%	2.3	2.3	.0	2.3	4.5	15.9	72.7
중위50%	4.3	2.1	.0	4.3	4.3	14.9	70.2
전체	17.8	15.4	4.2	.6	11.4	14.2	36.4

초등학생자녀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는 문화여가활동지원이 전체적으로 36.4%로 가장 많았고, 2순위 또한 문화여가활동지원이 전체적으로 35.4%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초등학생과 일반 아동 모두 문화활동 지원이 가장 높았지만 빈곤 초등학생의 문화활동 여가지원에 대한 수요가 일반 아동 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2순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확대가 전체적으로는 15.4%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중위소득 28%에서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빈곤가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2순위에서는 일반 아동의 경우 문화여가활동지원이 1순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지만 빈곤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확대가 2순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Ⅵ-44〉 초등학생자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2순위

구분	아동양육 시설확대	아동폭력 예방정책	아동급식 지원	취약아동 가족지원	자녀상담 지원	방과후 돌봄지원	문화여가 활동지원	기타
중위28%	83.3	2.8			11.1	.0	2.8	
중위40%	78.9	2.6		.0	10.5	.0	7.9	
중위43%	68.2	2.3		13.6	9.1	.0	6.8	
중위50%	61.2	2.0	.0	12.2	8.2	8.2	8.2	
전체	15.4	19.1	.9	5.8	9.5	13.8	35.4	

초등학생자녀가 하루 평균 홀로 보내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2.2시간 내외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사용시간은 1.2시간 ~ 1.4시간, 한달 평균 용돈으로는 약 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빈곤아동이나 일반아동이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한달 평균 용돈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Ⅵ-45〉 초등학생자녀의 하루평균 보내는 시간 및 용돈

구분	혼자보내는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한달 평균용돈(만원)
중위28%	2.1	1.4	1.5
중위40%	2.1	1.4	2.0
중위43%	2.1	1.2	2.0
중위50%	2.2	1.2	1.9
전체	2.5	1.8	2.0

초등학생자녀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로는 맞벌이 가구가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기준이 낮아질수록 맞벌이가구 형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미만 빈곤 초등학생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67.3%로 일반 아동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자만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도 빈곤 초등학생가구가 14.3%로 일반 초등학생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Ⅵ-46〉 초등학생자녀 가구 형태

구분	맞벌이 가구	남자만 경제활동	여자만 경제활동	둘다 경제활동 안함	기타
중위28%	81.1	10.8	2.7	5.4	.0
중위40%	78.9	10.5	5.3	5.3	.0
중위43%	68.2	9.1	15.9	4.5	2.3
중위50%	67.3	12.2	14.3	4.1	2.0
전체	59.7	31.0	7.5	.9	.9

〈표 VI-47〉 초등학교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정도

구분	소득분위	이용여부		필요성				
		없다	있다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조금 필요	많이 필요	
1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중위28%	18.9	81.1	.0	.0	78.9	21.1
		중위40%	20.5	79.5	.0	.0	78.9	21.1
		중위43%	28.9	71.1	.0	.0	70.5	29.5
		중위50%	34.7	65.3	.0	.0	68.8	31.3
		전체	66.7	33.3	4.4	7.3	48.5	39.8
2	외국어 교육	중위28%	18.9	81.1	.0	.0	86.8	13.2
		중위40%	20.0	80.0	.0	.0	84.6	15.4
		중위43%	17.8	82.2	.0	.0	75.0	25.0
		중위50%	20.4	79.6	.0	.0	68.8	31.3
		전체	61.0	39.0	.3	2.9	28.1	68.7
3	정서발달서비스	중위28%	97.3	2.7	.0	88.2	.0	11.8
		중위40%	97.4	2.6	.0	83.8	2.7	13.5
		중위43%	86.7	13.3	.0	73.8	2.4	23.8
		중위50%	85.4	14.6	.0	68.9	8.9	22.2
		전체	91.3	8.7	6.4	25.2	39.0	29.4
4	예술교육	중위28%	13.2	86.8	.0	2.6	89.5	7.9
		중위40%	15.4	84.6	.0	2.6	89.7	7.7
		중위43%	13.6	86.4	.0	2.3	79.5	18.2
		중위50%	20.4	79.6	.0	4.2	79.2	16.7
		전체	63.7	36.3	.3	6.2	65.8	27.7
5	체육교실	중위28%	89.2	10.8	.0	2.7	94.6	2.7
		중위40%	87.5	12.5	.0	2.6	89.7	7.7
		중위43%	79.5	20.5	.0	4.4	77.8	17.8
		중위50%	72.9	27.1	.0	4.1	79.6	16.3
		전체	54.7	45.3	5.0	12.2	41.1	41.7
6	학업관련상담서비스	중위28%	100.0	.0	2.8	5.6	88.9	2.8
		중위40%	100.0	.0	2.6	5.3	89.5	2.6
		중위43%	97.7	2.3	2.3	4.5	77.3	15.9
		중위50%	97.9	2.1	2.1	8.3	75.0	14.6
		전체	95.0	5.0	4.7	17.0	51.0	27.3
7	자녀진로지도서비스	중위28%	100.0	.0	.0	18.9	78.4	2.7
		중위40%	100.0	.0	.0	20.5	74.4	5.1
		중위43%	97.8	2.2	.0	18.2	65.9	15.9
		중위50%	97.9	2.1	2.1	16.7	60.4	20.8
		전체	93.8	6.2	.9	18.2	50.4	30.5

〈표VI-48〉 초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정도

구분	소득분위	이용여부		필요성			
		없다	있다	전혀필요 없음	별로필요 없음	조금 필요	많이 필요
8	중위28%	18.9	81.1	2.7	10.8	2.7	83.8
	중위40%	20.5	79.5	5.0	12.5	2.5	80.0
	중위43%	17.8	82.2	4.4	11.1	2.2	82.2
	중위50%	20.4	79.6	4.1	10.2	6.1	79.6
	전체	59.0	41.0	.9	7.6	44.7	46.8
9	중위28%	100.0	.0	5.3	86.8	5.3	2.6
	중위40%	100.0	.0	5.1	87.2	5.1	2.6
	중위43%	100.0	.0	4.5	88.6	4.5	2.3
	중위50%	100.0	.0	4.2	85.4	8.3	2.1
	전체	96.2	3.8	4.7	44.7	31.5	19.1
10	중위28%	94.6	5.4	2.8	5.6	88.9	2.8
	중위40%	89.7	10.3	2.7	5.4	86.5	5.4
	중위43%	79.5	20.5	2.3	4.7	74.4	18.6
	중위50%	79.2	20.8	2.1	4.2	75.0	18.8
	전체	77.5	22.5	8.2	20.8	33.4	37.5

초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의 경우 방문학습지도, 외국어 교육, 예술교육,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고,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초등학생의 경우 원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예술교육, 체육교실, 학업관련 상담서비스, 자녀진로지도서비스, 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이 다른 복지서비스의 유형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정서발달서비스와 게임중독 치료상담 서비스 등의 수요에서는 다른 사업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서비스의 품질이 모든 빈곤 가구층에서 75%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담당선생님의 친절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VI-49〉 사회서비스 이용시 가장 중요한 것

구분	서비스품질	담당선생님 친절도	제공기관 접근성	이용비용 적절성	자녀의서비스 선호도	기타
중위28%	81.1	16.2	.0	.0	2.7	.0
중위40%	79.5	15.4	.0	2.6	2.6	.0
중위43%	81.8	13.6	.0	2.3	2.3	.0
중위50%	75.0	12.5	2.1	6.3	4.2	.0
전체	40.1	8.4	8.4	15.9	26.9	.3

## 5) 중고등학생 가구의 빈곤실태 및 욕구

중고등학생관련 복지시설의 인지도는 중위소득 28% 빈곤가구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도서관 등에 대한 인지도가 53.8%~75.0%까지로 높게 나타났고,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수요 또한 80%~90%로 높았다.

〈표Ⅵ-50〉 중고등학생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구분	소득분위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여부			
		잘 모름	조금 안다	잘 안다	없다	있다	잘 모르겠음	이용 안함	이용함	
1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중위28%	25.0	16.7	58.3	36.4	63.6	18.2	.0	81.8
		중위40%	10.5	68.4	21.1	47.2	52.8	34.3	37.1	28.6
		중위43%	10.0	67.5	22.5	48.7	51.3	36.8	34.2	28.9
		중위50%	17.4	58.7	23.9	50.0	50.0	34.9	32.6	32.6
		전체	16.4	48.5	35.1	47.1	52.9	42.7	17.8	39.6
2	청소년 공부방	중위28%	23.1	23.1	53.8	50.0	50.0	20.0		80.0
		중위40%	71.8	7.7	20.5	80.6	19.4	34.3		65.7
		중위43%	70.7	9.8	19.5	82.1	17.9	39.5		60.5
		중위50%	71.7	8.7	19.6	81.8	18.2	40.5		59.5
		전체	52.5	24.9	22.6	79.5	20.5	50.5	15.4	34.1
3	청소년 도서관	중위28%	16.7	8.3	75.0	16.7	83.3	10.0		90.0
		중위40%	7.9	36.8	55.3	69.4	30.6	34.3		65.7
		중위43%	7.3	39.0	53.7	69.2	30.8	35.1		64.9
		중위50%	10.6	34.0	55.3	65.9	34.1	35.7		64.3
		전체	32.1	28.6	39.3	53.9	46.1	37.9	8.9	53.3
4	지역아동센터	중위28%	53.8	30.8	15.4	83.3	16.7	72.7	18.2	9.1
		중위40%	21.1	39.5	39.5	64.9	35.1	22.9	74.3	2.9
		중위43%	20.0	40.0	40.0	64.1	35.9	26.3	71.1	2.6
		중위50%	24.4	35.6	40.0	63.6	36.4	26.2	66.7	7.1
		전체	25.3	37.2	37.5	78.0	22.0	48.6	33.2	18.2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위28%	66.7	25.0	8.3	83.3	16.7	70.0		30.0
		중위40%	84.6	10.3	5.1	94.4	5.6	54.3	37.1	8.6
		중위43%	82.9	12.2	4.9	94.9	5.1	56.8	35.1	8.1
		중위50%	82.6	10.9	6.5	90.9	9.1	55.8	30.2	14.0
		전체	58.8	22.5	18.7	91.2	8.8	56.3	22.5	21.2

〈표Ⅵ-51〉 중고등학생대상 복지시설이용시 불편한 점

구분	대중 교통 접근성 불편	시설 불편 낙후	불결한 환경	행정 불편	정보 제공 부족	프로 그램 부족	제한된 이용 시간	질 낮은 서비스	직원 불친절	비용 부담	본인 시간 부족	기타
중위28%	8.3				25.0	8.3		.0			58.3	
중위40%	42.1				7.9	31.6		.0			18.4	
중위43%	39.0				9.8	34.1		.0			17.1	
중위50%	34.8				13.0	30.4		.0			17.4	4.3
전체	20.8	6.0	.8	.4	27.2	16.2	4.5	2.3	.4	1.1	17.0	3.4

중고등학생 대상 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정보제공의 부족이 27.2%로 가장 많았으나, 중위소득 28%가구에서는 본인의 시간부족이 58.3%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에서는 대중교통 및 접근성의 불편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 및 접근성 불편이 34.8%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의 부족이 30.4%, 본인 시간 부족이 17.4%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일반 중고등학생 가구의 경우 정보부족이 27.2%로 가장 높아 빈곤 중고등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표Ⅵ-52〉 중고등학생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구분	학습지도 학습능력 향상	진로상담	개인고민 상담	문화 취미활동	문제행동 개선	자원봉사활동	아르 바이트 연계	기타
중위28%	23.1	15.4	15.4	38.5			7.7	
중위40%	45.9	5.4	5.4	13.5			29.7	
중위43%	46.3	4.9	4.9	17.1			26.8	
중위50%	41.3	8.7	6.5	19.6			23.9	
전체	21.2	32.6	15.9	23.5		.8	4.9	1.1

중고등학생자녀 양육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중위소득 28% 가구에서는 문화 및 취미활동서비스가 38.5%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에서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향상 서비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일반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상담이 32.6%로 가장 높고 문화취미활동 23.5% 등의 순이었다.

〈표VI-53〉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내는 시간 - 1순위

구분	집에서 휴식	집에서 TV/오락	집에서 학업	학원에서 예체능	외출해서 오락활동	복지시설 활동참여	학교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아르 바이트
중위28%	8.3	41.7	41.7	8.3	.0				
중위40%	8.1	45.9	16.2	29.7	.0				
중위43%	7.3	46.3	14.6	26.8	.0			4.9	
중위50%	6.4	48.9	14.9	23.4	.0		2.1	4.3	
전체	11.1	31.4	29.5	16.9	1.1	.8	6.9	2.3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시간활용은 전체적으로 1순위는 집에서 TV시청 및 오락을 하는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는 집에서 휴식을 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표VI-54〉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내는 시간 - 2순위

구분	집에서 휴식	집에서 TV/오락	집에서 학업	학원에서 예체능	외출해서 오락활동	복지시설 활동참여	학교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아르 바이트
중위28%	8.3	58.3	16.7			.0		.0	16.7
중위40%	29.7	21.6	40.5		2.7	.0		.0	5.4
중위43%	28.2	20.5	43.6		2.6	.0		.0	5.1
중위50%	28.9	20.0	40.0	4.4	2.2	.0		.0	4.4
전체	28.2	26.7	23.5	4.7	6.7	.4	5.9	3.1	.8

방과 후 시간활용의 2순위에서 중위소득 28%가구의 경우 집에서 TV시청 및 오락이 58.3%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40%이상 빈곤가구에서는 집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가 40%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주로 보내는 시간은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다만 방과 후 집에서 TV나 오락을 보내는 시간이 48.9%로 일반 중고등학생 31.4%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73.2%로 가장 많았고, 아무도 없다가 19.5%로 이어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호자 없다는 응답이 37.0%로 일반 중고등학생 19.5%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VI-55〉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호자 유무

구분	아무도 없다	형제가 있다	보호자가 있다	기타
중위28%	8.3		91.7	
중위40%	39.5		60.5	
중위43%	41.5		58.5	
중위50%	37.0		63.0	
전체	19.5	5.4	73.2	1.9

중고등학생 자녀가 하루 평균 홀로 보내는 시간으로는 2.7시간 ~ 3.2시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사용시간은 1.9시간 ~ 2.5시간, 한달 평균 용돈으로는 5.2만원 ~ 6.9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받고 있었다.

〈표VI-56〉 중고등학생자녀의 하루평균 보내는 시간 및 용돈

구분	혼자 보내는 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한달 평균용돈(천원)
중위28%	2.7	1.9	5.2
중위40%	3.2	2.5	6.9
중위43%	3.2	2.5	6.9
중위50%	3.2	2.5	6.6
전체	2.6	1.9	6.1

경제활동을 하는 형태로는 맞벌이 가구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40% 이상 빈곤가구에서는 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25.6% ~ 30.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 중고등학생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25.6%로 일반 중고등학생 부모보다도 높았다.

〈표VI-57〉 중고등학생자녀 가구 형태

구분	맞벌이 가구	남자만 경제활동	여자만 경제활동	둘다 경제활동 안함	기타
중위28%	30.0		10.0	10.0	50.0
중위40%	47.2	5.6	2.8	30.6	13.9
중위43%	47.4	7.9	2.6	28.9	13.2
중위50%	46.5	7.0	7.0	25.6	14.0
전체	66.8	18.9	5.0	5.5	3.8



〈표Ⅵ-58〉 중고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정도

구분	소득분위	이용여부		필요성				
		없다	있다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조금 필요	많이 필요	
1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	중위28%	33.3	66.7		.0	27.3	72.7
		중위40%	78.9	21.1		29.7	45.9	24.3
		중위43%	78.0	22.0		28.2	46.2	25.6
		중위50%	78.3	21.7		25.0	50.0	25.0
		전체	80.8	19.2	4.7	19.4	34.1	41.8
2	외국어 교육	중위28%	83.3	16.7		8.3	8.3	83.3
		중위40%	92.1	7.9		2.8	2.8	94.4
		중위43%	92.7	7.3		5.1	7.7	87.2
		중위50%	89.1	10.9	4.5	4.5	6.8	84.1
		전체	59.5	40.5	.8	4.9	16.5	77.8
3	정서발달서비스	중위28%	91.7	8.3	8.3	8.3	16.7	66.7
		중위40%	97.4	2.6	2.8	38.9	5.6	52.8
		중위43%	97.6	2.4	2.6	41.0	7.7	48.7
		중위50%	97.8	2.2	4.5	36.4	13.6	45.5
		전체	97.7	2.3	20.3	23.7	18.5	37.5
4	예술교육	중위28%	100.0	.0		9.1	27.3	63.6
		중위40%	71.1	28.9		40.5	8.1	51.4
		중위43%	70.7	29.3		41.0	10.3	48.7
		중위50%	71.7	28.3	4.5	38.6	13.6	43.2
		전체	68.7	31.3	5.5	20.8	34.3	39.4
5	체육교실	중위28%	84.6	15.4		9.1	.0	90.9
		중위40%	94.7	5.3	2.8	38.9	30.6	27.8
		중위43%	92.7	7.3	2.6	39.5	31.6	26.3
		중위50%	89.1	10.9	4.7	37.2	32.6	25.6
		전체	72.9	27.1	5.9	20.9	40.6	32.6
6	학업관련상담서비스	중위28%	83.3	16.7			27.3	72.7
		중위40%	92.1	7.9		37.1	8.6	54.3
		중위43%	92.7	7.3		38.5	12.8	48.7
		중위50%	93.5	6.5		34.1	15.9	50.0
		전체	92.0	8.0	4.6	14.2	30.0	51.3
7	자녀진로지도서비스	중위28%	83.3	16.7			9.1	90.9
		중위40%	92.1	7.9		63.9	8.3	27.8
		중위43%	85.4	14.6		60.5	10.5	28.9
		중위50%	87.0	13.0		52.3	11.4	36.4
		전체	88.5	11.5	2.1	13.7	29.9	54.4

구분	소득분위	이용여부		필요성			
		없다	있다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조금 필요	많이 필요
8	중위28%	66.7	33.3	.0	.0	18.2	81.8
	중위40%	86.8	13.2	.0	36.1	36.1	27.8
	중위43%	85.4	14.6	.0	33.3	38.5	28.2
	중위50%	87.0	13.0	4.4	31.1	33.3	31.1
	전체	69.7	30.3	3.3	24.2	36.9	35.7
9	중위28%	91.7	8.3		63.6	18.2	18.2
	중위40%	97.4	2.6		88.6	5.7	5.7
	중위43%	97.6	2.4	5.1	84.6	5.1	5.1
	중위50%	97.8	2.2	4.7	76.7	14.0	4.7
	전체	99.2	.8	9.2	35.5	21.9	33.3
10	중위28%	91.7	8.3	9.1	54.5	9.1	27.3
	중위40%	97.4	2.6	2.9	54.3	34.3	8.6
	중위43%	97.6	2.4	2.6	52.6	36.8	7.9
	중위50%	95.7	4.3	7.0	48.8	37.2	7.0
	전체	93.1	6.9	20.7	34.4	23.2	21.6

중고등학생 관련 사회서비스 중 정규교과 방문학습지도의 경우 중위소득 28% 가구에서 66.7%로 이용경험이 가장 많았고, 필요성 또한 72.7%로 다른 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외국어교육 서비스의 경우 빈곤가구의 이용경험이 16.7%로 중위소득 28% 가구에서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인 40.5%에 비해서는 이용경험이 낮은 반면,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은 83.3%에서 많게는 94.4%로 전체적인 평균 77.8%보다 높게 나타났다.

## 6) 노인 가구의 빈곤실태 및 욕구

노인빈곤가구의 교육수준으로는 중위소득 28% 빈곤가구에서 무학이 46.0%등으로 그 외 빈곤가구에서도 무학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인 교육수준으로는 초졸이 42.2%로 가장 많았다. 노인빈곤가구의 약 80%이상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노인빈곤가구의 학력은 일반 노인가구의 학력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Ⅵ-59〉 전라북도 노인 빈곤가구의 교육수준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중위28%	46.0	35.5	8.1	9.7	.8
중위40%	41.9	39.2	9.1	8.1	1.6
중위43%	42.1	39.5	8.9	7.9	1.6
중위50%	42.5	39.1	9.7	7.2	1.4
전체	35.3	42.2	11.4	8.4	2.8

빈곤노인의 가구형태로는 전체적으로 독거가구의 형태가 26.0%로 가장 많았고 빈곤가구별로도 46.4%에서 52.8%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 형태별로는 일반수급가구 형태가 빈곤가구별과 전체적인 수준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46.4%, 30.1% 등으로 매우 높은 빈곤수준을 보였다.

〈표Ⅵ-60〉 전라북도 노인가구 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구분	가구형태							수급자 형태				
	독거가구	노인부부	노인부부 + 자녀	독거노인 + 자녀	독거노인 + 손자녀	노인부부 + 손자녀	기타	일반수급가구	조건부수급가구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
중위28%	52.8	31.2	3.2	7.2	1.6	.8	3.2	7.4	1.6	2.5	6.6	82.0
중위40%	47.3	31.2	3.2	7.0	1.1	1.1	9.1	10.3	2.2	1.6	6.0	79.9
중위43%	47.9	31.3	3.1	6.8	1.0	1.0	8.9	10.1	2.1	1.6	5.8	80.4
중위50%	46.4	30.1	3.8	8.1	1.9	1.0	8.6	10.2	2.0	1.5	5.4	81.0
전체	26.0	25.2	7.8	19.1	3.0	1.5	17.4	5.3	1.5	1.5	3.7	88.0

〈표Ⅵ-61〉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본 일상생활

기본적 일상생활	소득분위	다른사람 도움없이 전혀못함	다른사람 도움없이 어느정도 가똥	다른사람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	
1	옷 벗고 입기	중위28%	.0	8.9	91.1
		중위40%	.5	11.8	87.7
		중위43%	.5	11.5	88.0
		중위50%	.5	11.5	88.0
		전체	1.3	9.2	89.6
2	세수하기	중위28%	.0	8.8	91.2
		중위40%	.5	11.3	88.2
		중위43%	.5	11.5	88.0
		중위50%	.5	11.1	88.5
		전체	1.1	9.0	90.0
3	양치질하기	중위28%	.0	5.6	94.4
		중위40%	.5	9.1	90.3
		중위43%	.5	9.4	90.1
		중위50%	.5	9.1	90.4
		전체	1.1	8.3	90.6
4	목욕하기	중위28%	.0	6.5	93.5
		중위40%	1.6	10.2	88.2
		중위43%	1.6	9.9	88.5
		중위50%	1.4	10.1	88.5
		전체	2.8	8.5	88.7
5	식사하기	중위28%	.0	5.6	94.4
		중위40%	.0	10.2	89.8
		중위43%	.0	10.4	89.6
		중위50%	.0	10.1	89.9
		전체	.9	9.1	90.0
6	방 밖으로 나오기	중위28%	.8	5.6	93.6
		중위40%	1.1	9.6	89.3
		중위43%	1.0	9.9	89.1
		중위50%	1.0	10.0	89.0
		전체	1.5	8.7	89.8
7	화장실 사용하기	중위28%	.0	6.4	93.6
		중위40%	.5	9.7	89.8
		중위43%	.5	9.9	89.6
		중위50%	.5	10.0	89.5
		전체	1.1	8.7	90.2
8	소변대변 조절하기	중위28%	.0	5.6	94.4
		중위40%	.0	10.2	89.8
		중위43%	.0	9.9	90.1
		중위50%	.0	9.6	90.4
		전체	.9	8.5	90.6

〈표Ⅵ-62〉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타 일상생활

기타 일상생활	소득분위	다른사람 도움없이 전혀못함	다른사람 도움없이 어느정도 가능	다른사람 도움없이 혼자서 가능	
1	몸단장하기	중위28%	.0	6.4	93.6
		중위40%	.5	10.7	88.8
		중위43%	.5	10.4	89.1
		중위50%	.5	10.5	89.0
		전체	1.3	9.4	89.4
2	집안일(청소·설거지 등)하기	중위28%	.0	8.1	91.9
		중위40%	.5	12.4	87.1
		중위43%	.5	12.5	87.0
		중위50%	.5	13.4	86.1
		전체	4.2	10.2	85.6
3	식사 준비하기	중위28%	.0	8.1	91.9
		중위40%	1.1	11.3	87.6
		중위43%	1.0	11.5	87.5
		중위50%	1.0	12.5	86.5
		전체	4.5	10.0	85.5
4	빨래하기	중위28%	.8	10.4	88.8
		중위40%	1.6	12.9	85.5
		중위43%	1.6	13.0	85.4
		중위50%	1.4	13.5	85.1
		전체	4.9	10.6	84.5
5	근거리 외출하기	중위28%	1.6	11.2	87.2
		중위40%	2.1	13.4	84.5
		중위43%	2.1	13.5	84.5
		중위50%	1.9	13.9	84.1
		전체	4.5	12.4	83.2
6	교통수단 이용하기	중위28%	4.0	9.7	86.3
		중위40%	3.8	12.9	83.3
		중위43%	3.6	13.0	83.3
		중위50%	3.8	13.9	82.2
		전체	8.5	11.3	80.2
7	상점가게에서 물건사기	중위28%	.8	9.7	89.5
		중위40%	1.6	12.4	86.0
		중위43%	1.6	12.6	85.9
		중위50%	1.9	13.0	85.1
		전체	5.5	9.6	84.9
8	금전 관리하기	중위28%	.8	10.4	88.8
		중위40%	1.6	12.4	86.0
		중위43%	1.6	12.5	85.9
		중위50%	1.4	12.5	86.1
		전체	5.7	9.4	84.9
9	전화 사용하기	중위28%	.0	9.6	90.4
		중위40%	1.1	11.8	87.2
		중위43%	1.0	11.5	87.4
		중위50%	1.0	12.0	87.0
		전체	4.1	10.9	85.1
10	약 챙겨먹기	중위28%	.0	6.4	93.6
		중위40%	.5	10.2	89.3
		중위43%	.5	9.9	89.5
		중위50%	.5	10.1	89.4
		전체	2.6	9.0	88.5

빈곤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정도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과 몸단장하기, 집안일, 식사준비하기 등 기타 일상생활 수행능력 모두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가 85%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VI-63〉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 - 1

구분	근골격계					소화기계/내분비/대사성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소화성 궤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당뇨병	갑상선 질환
중위28%	72.8	28.6	13.9	34.6	18.0	64.5	5.5	33.2	8.7
중위40%	74.0	28.2	19.3	34.9	19.2	60.3	5.3	37.6	8.7
중위43%	74.0	27.8	19.1	35.4	19.8	59.8	5.2	38.4	8.8
중위50%	74.1	26.9	19.0	36.5	19.5	58.5	4.9	39.6	8.6
전체	88.8	39.5	7.2	40.7	34.0	56.3	.8	41.7	5.2

빈곤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관절염이 전체적으로 88.8%로, 소화기계 및 내분비·대사성 질환에서는 소화성 궤양이 56.3%로 가장 많았다. 노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중 순환기계와 호흡기계는 빈곤노인이나 일반 노인이나 유사한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순환기계 질병으로는 일반 노인의 경우 고혈압이 93.9%로 가장 많고, 호흡기계 질환으로는 천식이 69.7%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빈곤노인의 경우도 고혈압과 천식 등의 순으로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VI-64〉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 - 2

구분	순환기계				호흡기계		
	고혈압	저혈압	중풍 뇌혈관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폐결핵 결핵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중위28%	93.1	2.6	7.3	7.9	3.5	23.9	74.1
중위40%	92.7	2.2	7.3	8.6	7.3	27.4	68.3
중위43%	92.8	2.2	7.5	8.3	7.2	28.4	67.4
중위50%	92.6	2.0	7.8	9.7	8.9	24.8	68.8
전체	93.9	2.0	10.7	11.5	10.4	24.5	69.7

다음으로 눈·귀·피부·골절 등의 질환에서는 백내장을 앓고 있는 노인이 전체적으로 54.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빈혈을 앓고 있는 빈곤노인이 중위소득 28%에서는 14.7%, 중위소득 40%에서 16.4% 등으로 빈혈을 앓고 있는 전체평균 6.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빈곤노인의 경우 백내장과 녹내장 그리고 빈혈의 유병율이 일반 노인에 비해서 다소 높았고 만성중이염과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빈곤노인보다는 일반 노인의 유병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VI-65〉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 - 3

구분	눈/귀/피부/골절 등						
	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만성신장질환	빈혈	피부병	골절탈구
중위28%	67.5	11.2	3.6	7.3	14.7	4.1	1.4
중위40%	68.3	9.8	3.4	7.7	16.4	3.5	2.3
중위43%	69.0	9.6	3.3	7.5	16.0	3.4	2.3
중위50%	67.0	10.0	3.2	9.5	15.9	3.3	2.2
전체	54.5	4.8	15.8	30.6	6.7	3.5	.0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90%이상을 상회하며 매우 높았고, 향후 이용의향 또한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수요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무료급식 등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이용수요가 이용하고 싶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교육서비스의 이용수요에 있어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가 이용하고 싶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빈곤노인과 일반노인의 욕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의료비지원의 경우 빈곤 노인의 약 90%이상은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노인도 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약 9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노인무료급식이나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등도 빈곤 노인의 욕구만큼이나 일반 노인의 욕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들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율에 있어서는 빈곤노인과 일반노인의 이용율이 10%이내에 그치고 있어 수요대비 공급량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표Ⅵ-66〉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구분	소득분위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없다	있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지않다	가끔 이용하고 싶다	자주 이용하고 싶다	
1	기초노령연금 지원	중위28%	8.8	91.2	.0	.9	4.5	94.5
		중위40%	8.1	91.9	.7	1.3	3.9	94.1
		중위43%	8.3	91.7	.6	1.3	4.4	93.7
		중위50%	8.7	91.3	.6	1.7	4.0	93.7
		전체	12.6	87.4	1.1	1.9	5.0	92.1
2	의료비 지원	중위28%	89.5	10.5	2.0	2.0	31.4	64.7
		중위40%	86.5	13.5	1.5	2.9	29.4	66.2
		중위43%	86.8	13.2	1.4	2.9	29.3	66.4
		중위50%	86.5	13.5	1.3	3.3	28.8	66.7
		전체	84.2	15.8	.9	4.3	31.0	63.8
3	노인무료급식	중위28%	91.9	8.1	8.2	15.3	34.7	41.8
		중위40%	87.0	13.0	8.3	18.2	34.1	39.4
		중위43%	86.8	13.2	8.0	19.7	33.6	38.7
		중위50%	86.4	13.6	8.0	20.7	33.3	38.0
		전체	89.9	10.1	9.6	31.4	32.3	26.7
4	물품지원	중위28%	91.1	8.9	19.8	8.9	23.8	47.5
		중위40%	90.8	9.2	15.6	11.1	28.9	44.4
		중위43%	90.5	9.5	15.0	11.4	30.0	43.6
		중위50%	90.3	9.7	14.4	11.8	31.4	42.5
		전체	93.2	6.8	9.6	25.0	33.4	32.0
5	가정봉사서비스	중위28%	96.8	3.2	5.1	14.1	35.4	45.5
		중위40%	96.8	3.2	4.5	16.4	35.8	43.3
		중위43%	96.8	3.2	4.3	17.3	36.0	42.4
		중위50%	97.1	2.9	4.6	17.9	37.1	40.4
		전체	96.1	3.9	6.3	22.6	36.3	34.8
6	식사배달 서비스	중위28%	94.4	5.6	6.0	14.0	34.0	46.0
		중위40%	94.1	5.9	5.2	17.9	33.6	43.3
		중위43%	94.2	5.8	5.8	18.0	33.8	42.4
		중위50%	94.2	5.8	5.9	18.4	34.2	41.4
		전체	97.0	3.0	6.9	32.6	30.5	29.9

또한 방문간호 및 간병서비스와 이동편의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도 향후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빈곤노인과 일반노인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



〈표Ⅵ-67〉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구분	소득분위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없다	있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지않다	가끔 이용하고 싶다	자주 이용하고 싶다	
7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중위28%	93.5	6.5	4.0	13.0	35.0	48.0
		중위40%	94.6	5.4	4.4	17.0	34.8	43.7
		중위43%	94.7	5.3	4.3	17.3	35.3	43.2
		중위50%	95.1	4.9	4.6	19.1	34.9	41.4
		전체	95.1	4.9	5.2	30.3	31.2	33.2
8	이동편의서비스	중위28%	98.4	1.6	10.0	12.0	36.0	42.0
		중위40%	98.4	1.6	8.3	14.3	37.6	39.8
		중위43%	98.4	1.6	8.7	14.5	38.4	38.4
		중위50%	98.1	1.9	8.6	15.2	39.7	36.4
		전체	96.4	3.6	6.7	27.0	36.9	29.4
9	주야간 보호서비스	중위28%	100.0	.0	15.3	25.5	31.6	27.6
		중위40%	100.0	.0	14.2	29.9	29.9	26.1
		중위43%	100.0	.0	13.7	30.2	30.2	25.9
		중위50%	100.0	.0	13.3	32.0	30.7	24.0
		전체	99.1	.9	10.1	33.1	36.7	20.1
10	노인일자리사업	중위28%	94.4	5.6	39.4	20.2	24.2	16.2
		중위40%	88.1	11.9	34.6	25.6	21.1	18.8
		중위43%	88.4	11.6	34.8	25.4	21.0	18.8
		중위50%	88.4	11.6	34.4	27.8	20.5	17.2
		전체	88.2	11.8	26.5	24.5	23.9	25.1
11	사회교육서비스	중위28%	95.1	4.9	34.3	26.3	25.3	14.1
		중위40%	89.1	10.9	31.3	29.1	23.9	15.7
		중위43%	89.5	10.5	30.9	29.5	24.5	15.1
		중위50%	88.8	11.2	30.3	28.9	24.3	16.4
		전체	93.1	6.9	22.3	33.5	26.0	18.2

가령, 방문간호 및 간병서비스의 경우 빈곤노인의 약 75%정도는 향후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편의 서비스도 약 80%정도의 수요를 보이고 있었다. 주야간 보호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사업도 각각 50% 내외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달리 현재 이용율에 있어서는 10%내외에 그치고 있어 높은 수요에 비해 복지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표Ⅵ-68〉 일자리 없는 경우 희망일자리

구분	근로여부	일을 할 의향		원하는 일자리 분야					원하는 급여 (만원)
	없다	없다	있다	행정직	기술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기타	
중위28%	91.0	81.6	18.4	5.0	.0	60.0	15.0	20.0	68.9
중위40%	86.3	84.0	16.0	31.6	.0	47.4	7.9	13.2	190.8
중위43%	86.2	83.9	16.1	31.6	.0	47.4	7.9	13.2	186.5
중위50%	85.8	83.8	16.2	29.3	.0	48.8	9.8	12.2	180.2
전체	77.4	81.8	18.2	16.7	2.6	59.0	6.4	15.4	132.1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은 전체적으로 81.8%로 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빈곤가구별로 16%~18.4%만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며, 원하는 일자리 분야로는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28% 빈곤가구는 월 평균 68.9만원을 중위소득 43% 가구에서는 186.5만원의 월평균 급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빈곤노인이 일반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노인의 경우 빈곤노인과 일반노인 간에는 큰 편차가 없었다. 원하는 일자리 분야의 경우 빈곤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단순노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원하는 급여수준에서는 일반 노인의 경우 월평균 132.1만원을 원하고 있는 반면, 중위소득 50%의 노인의 경우 180.2만원을 원하고 있어 일반노인보다는 빈곤노인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원하고 있었다.

〈표Ⅵ-69〉 일자리 있는 경우 월평균 급여

구분	일자리 있다	현재 월평균 급여(만원)
중위28%	9.0	32.9
중위40%	13.7	36.9
중위43%	13.8	36.4
중위50%	14.2	35.9
전체	22.6	59.4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28% 빈곤가구에서는 월 평균 32.9만원을, 중위소득 40%에서 36.9만원 수준의 월평균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평균 59.4만원에 비해 약 22만원 정도 적은 수준 이었다.

〈표Ⅵ-7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받지 않는 이유

구분	이용경험	받지 않는 이유				
	없다	건강해서	어떤제도인지 몰라서	신청방법 몰라서	자격조건 맞지않아서	본인부담금 때문에
중위28%	98.3	78.4	3.9	2.0	13.7	2.0
중위40%	97.3	77.8	4.3	2.5	12.3	3.1
중위43%	97.3	78.0	4.2	3.0	11.9	3.0
중위50%	97.1	78.0	3.8	3.3	11.5	3.3
전체	93.8	84.3	3.8	2.3	8.3	1.5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전체적으로 93.8%,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97%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고, 받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해서가 가장 많았다.

〈표Ⅵ-7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및 부담비용

구분	이용경험	장기요양등급					월평균 본인부담금 (만원)
	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 A	등급 외 B	
중위28%	1.7		50.0	50.0	.0	.0	5.2
중위40%	2.7		25.0	50.0	.0	25.0	4.9
중위43%	2.7		25.0	50.0	.0	25.0	4.9
중위50%	2.9		20.0	40.0	20.0	20.0	4.6
전체	6.3	18.2	12.1	57.6	3.0	9.1	10.2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3등급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 28% 빈곤가구에서 5.2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참여의 경우 빈곤노인보다는 일반노인의 참여율이 약 7%p이상 높았다.

〈표Ⅵ-7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구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향후 참여의향		월 평균 급여 (만원)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중위28%	86.3	13.7	86.0	14.0	21.3
중위40%	85.9	14.1	80.3	19.7	21.6
중위43%	86.3	13.7	80.3	19.7	21.6
중위50%	86.5	13.5	80.8	19.2	21.5
전체	79.8	20.2	80.3	19.7	30.6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경험으로는 전체적으로 20.2%가 참여경험이 있었으며 빈곤가구별로는 중위소득 40% 가구에서 14.1%로 가장 많았다.

향후 노인일자리 참여의향으로는 전반적으로 19%대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받은 월 평균 급여로는 빈곤가구별로 21.3만원에서 21.6만원 수준으로 전체적인 평균급여 수준인 30.6만원보다 약 9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가사지원서비스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22.7%, 빈곤가구 수준에서도 많게는 3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인별 맞춤형상담지원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빈곤노인과 일반노인간의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빈곤노인의 경우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방문간호, 가사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반노인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고,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여가문화활동지원 등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빈곤노인이 일반노인보다는 그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Ⅵ-73〉 노인복지향상위해 필요한 서비스

구분	보호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 제공상담	가사지원 서비스	여가문화 활동	방문간호	주거환경 개선	개인별 맞춤형상담지원	기타
중위28%	4.8	4.0	8.9	33.9	12.1	8.9	7.3	18.5	1.6
중위40%	4.3	4.9	8.1	28.6	10.8	11.4	8.1	21.6	2.2
중위43%	4.2	4.8	8.5	28.6	10.6	11.6	7.9	21.7	2.1
중위50%	4.3	4.8	9.1	28.8	10.1	12.5	8.2	20.2	1.9
전체	5.8	6.3	16.6	22.7	13.2	11.9	5.6	16.4	1.5

노인관련 복지시설의 이용경험은 경로당과 기초노령연금의 인지도가 9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노인복지회관과 양로원의 인지도가 50%대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노인의 경우 경로당, 기초연금,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복지서비스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VI-74〉 노인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구분	소득분위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여부			
		잘 모름	조금 안다	잘 안다	없다	있다	잘 모르 겠음	이용 안함	이용함	
1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중위28%	17.6	35.2	47.2	67.0	33.0	50.4	29.6	20.0
		중위40%	19.5	40.5	40.0	73.2	26.8	50.3	27.0	22.7
		중위43%	19.4	40.3	40.3	73.6	26.4	50.0	27.4	22.6
		중위50%	19.2	40.4	40.4	74.7	25.3	49.7	26.8	23.5
		전체	18.8	38.2	43.0	79.7	20.3	51.3	20.4	28.3
2	노인복지회관	중위28%	13.6	33.6	52.8	63.4	36.6	45.3	28.2	26.5
		중위40%	14.0	30.6	55.4	66.0	34.0	45.1	24.4	30.5
		중위43%	14.1	31.3	54.7	66.5	33.5	44.7	24.7	30.6
		중위50%	13.9	32.2	53.8	67.6	32.4	44.9	24.3	30.8
		전체	13.3	35.0	51.6	76.0	24.0	47.6	17.9	34.4
3	경로당(노인정)	중위28%	1.6	3.2	95.2	22.6	77.4	13.0	8.7	78.3
		중위40%	2.2	3.8	94.1	24.4	75.6	16.7	6.2	77.2
		중위43%	2.1	4.2	93.7	24.1	75.9	16.1	6.5	77.4
		중위50%	1.9	3.9	94.2	23.6	76.4	15.2	6.0	78.8
		전체	2.6	8.7	88.7	24.5	75.5	18.7	6.0	75.4
4	기초노령연금	중위28%	3.2	6.5	90.3	20.9	79.1	11.1	5.1	83.8
		중위40%	2.7	7.0	90.3	19.0	81.0	10.3	3.6	86.1
		중위43%	2.6	6.8	90.6	18.5	81.5	10.0	3.5	86.5
		중위50%	2.9	6.7	90.4	18.5	81.5	9.1	3.8	87.1
		전체	3.4	8.2	88.4	17.4	82.6	15.8	3.8	80.4
5	노인공동작업장	중위28%	62.6	28.5	8.9	95.5	4.5	49.1	41.2	9.6
		중위40%	63.6	28.8	7.6	95.5	4.5	53.1	35.8	11.1
		중위43%	64.2	27.9	7.9	95.7	4.3	52.4	36.3	11.3
		중위50%	65.0	27.7	7.3	96.0	4.0	51.9	36.1	12.0
		전체	71.5	21.7	6.8	95.6	4.4	58.1	32.0	9.9
6	노인취업알선센터	중위28%	74.2	17.7	8.1	96.4	3.6	50.0	39.7	10.3
		중위40%	74.7	17.2	8.1	96.2	3.8	51.8	34.8	13.4
		중위43%	75.4	16.8	7.9	96.3	3.7	51.2	35.3	13.5
		중위50%	75.0	17.8	7.2	96.1	3.9	50.5	35.5	14.0
		전체	71.3	18.9	9.9	93.9	6.1	53.0	32.1	14.9
7	시니어클럽	중위28%	83.9	8.9	7.3	99.1	.9	52.2	38.3	9.6
		중위40%	84.9	9.2	5.9	98.7	1.3	55.8	33.1	11.0
		중위43%	85.3	8.9	5.8	98.8	1.2	55.6	33.1	11.2
		중위50%	84.5	9.7	5.8	98.9	1.1	54.9	33.7	11.4
		전체	81.8	14.0	4.2	97.8	2.2	58.5	28.5	13.0
8	노인전문병원	중위28%	9.6	52.8	37.6	94.6	5.4	59.0	11.1	29.9
		중위40%	11.8	54.5	33.7	94.9	5.1	58.3	10.4	31.3
		중위43%	11.5	54.7	33.9	95.1	4.9	58.0	10.1	32.0
		중위50%	11.5	54.5	34.0	94.9	5.1	57.3	10.3	32.4
		전체	12.0	49.0	39.0	96.4	3.6	53.2	10.8	36.0

〈표VI-75〉 노인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구분	소득분위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여부			
		잘 모름	조금 안다	잘 안다	없다	있다	잘 모르겠음	이용 안함	이용함	
9	노인요양시설	중위28%	5.6	54.4	40.0	98.2	1.8	61.2	9.5	29.3
		중위40%	6.4	50.3	43.3	98.1	1.9	59.9	9.9	30.2
		중위43%	6.3	50.5	43.2	98.2	1.8	59.5	9.5	31.0
		중위50%	6.2	50.2	43.5	98.3	1.7	58.4	10.3	31.4
		전체	7.8	48.4	43.8	98.8	1.2	52.7	9.5	37.7
10	양로원	중위28%	7.3	39.5	53.2	98.2	1.8	65.8	14.9	19.3
		중위40%	8.6	39.8	51.6	97.5	2.5	65.2	15.8	19.0
		중위43%	8.3	40.1	51.6	97.5	2.5	64.6	15.9	19.5
		중위50%	9.1	40.2	50.7	97.7	2.3	63.9	16.7	19.4
		전체	9.8	40.0	50.1	96.6	3.4	61.2	17.6	21.2
11	단기보호시설	중위28%	52.8	36.0	11.2	100.0	.0	66.4	19.1	14.5
		중위40%	61.0	31.0	8.0	99.4	.6	66.9	18.5	14.6
		중위43%	62.0	30.2	7.8	99.4	.6	67.3	18.5	14.2
		중위50%	61.2	30.1	8.6	99.4	.6	67.4	18.5	14.0
		전체	54.4	37.1	8.5	99.8	.2	66.8	16.3	16.8
12	주간보호시설	중위28%	52.4	36.3	11.3	100.0	.0	65.8	19.8	14.4
		중위40%	59.4	32.1	8.6	100.0	.0	66.0	18.6	15.4
		중위43%	60.4	31.3	8.3	100.0	.0	66.0	18.5	15.4
		중위50%	60.3	31.1	8.6	100.0	.0	66.7	18.6	14.7
		전체	52.9	37.9	9.2	99.0	1.0	65.8	15.9	18.3
13	치매상담센터	중위28%	43.2	38.4	18.4	97.3	2.7	67.3	11.5	21.2
		중위40%	48.7	33.7	17.6	96.8	3.2	63.5	10.7	25.8
		중위43%	49.5	33.3	17.2	96.9	3.1	63.4	11.0	25.6
		중위50%	48.3	33.5	18.2	96.6	3.4	63.3	10.6	26.1
		전체	45.1	39.2	15.7	96.3	3.7	64.8	10.4	24.8
14	경로식당/무료급식	중위28%	16.1	54.0	29.8	93.8	6.2	56.6	12.4	31.0
		중위40%	25.8	46.8	27.4	92.5	7.5	52.2	12.6	35.2
		중위43%	25.5	46.9	27.6	92.7	7.3	52.1	13.3	34.5
		중위50%	25.8	46.4	27.8	91.6	8.4	52.2	12.2	35.6
		전체	27.7	46.2	26.2	89.6	10.4	54.0	15.3	30.7
15	노인식사/반찬배달	중위28%	16.1	53.2	30.6	93.8	6.3	45.7	8.6	45.7
		중위40%	25.3	46.8	28.0	92.5	7.5	44.2	9.2	46.6
		중위43%	25.1	46.6	28.3	92.7	7.3	44.0	10.1	45.8
		중위50%	25.0	47.1	27.9	92.7	7.3	44.0	9.2	46.7
		전체	31.1	45.5	23.4	95.9	4.1	51.0	11.7	37.3
16	가사지원서비스	중위28%	21.0	56.5	22.6	93.8	6.3	43.5	6.1	50.4
		중위40%	25.3	48.4	26.3	94.3	5.7	43.5	6.2	50.3
		중위43%	25.1	48.2	26.7	94.5	5.5	43.1	6.6	50.3
		중위50%	24.9	48.3	26.8	94.9	5.1	43.7	6.0	50.3
		전체	38.1	38.1	23.8	94.2	5.8	49.9	7.0	43.1
17	방문간호서비스	중위28%	16.9	54.8	28.2	86.5	13.5	36.9	5.4	57.7
		중위40%	19.3	48.7	32.1	86.2	13.8	34.8	6.2	59.0
		중위43%	19.3	48.4	32.3	85.5	14.5	34.9	6.6	58.4
		중위50%	18.7	48.3	33.0	85.5	14.5	34.1	6.0	59.9
		전체	24.8	46.8	28.3	88.6	11.4	41.5	6.3	52.2

즉, 향후 이용수요에 있어서는 경로당과 기초노령연금의 이용수요가 70%~8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가사지원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의 이용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표VI-76〉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구분	본인시간 부족	거동불편	질 낮은 서비스	이용방법 모름	거리멀고 교통불편	비용부담	필요한 서비스 없음	복지시설 좋지않음
중위28%	11.3	12.9	.0	8.9	40.3	3.2	21.0	2.4
중위40%	15.7	13.5	.0	13.5	37.3	3.2	15.1	1.6
중위43%	15.7	13.1	.0	14.1	37.2	3.1	15.2	1.6
중위50%	16.3	13.9	.0	13.4	37.8	3.3	13.9	1.4
전체	19.4	15.3	.0	16.1	34.2	2.8	11.2	1.1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가 34.2%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시간이 부족해서가 19.4%로 이어서 나타났다. 노인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에서 10%대 미만으로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이용하고 싶은 사회서비스로는 방문건강상담 및 간호서비스의 이용수요가 모든 빈곤가구층에서 45%를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고, 보조기구렌탈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주거환경서비스 등의 이용수요가 전반적으로 30%대의 이용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배달서비스,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주야간돌봄 서비스, 취미여가활동지원 서비스 등도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보다도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도 현재 빈곤노인의 이용율은 5% 이내로 나타나 수요대비 공급은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이었다.

〈표 VI-77〉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구분	소득분위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없다	있다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조금 필요함	많이 필요함	
1	방문건강상담 및 간호서비스	중위28%	88.8	11.2	4.7	6.6	38.7	50.0
		중위40%	90.9	9.1	5.6	7.6	39.6	47.2
		중위43%	90.6	9.4	5.4	8.7	39.6	46.3
		중위50%	89.4	10.6	4.9	9.8	39.0	46.3
		전체	90.1	9.9	4.7	9.2	47.9	38.2
2	운동처방 서비스	중위28%	97.6	2.4	22.3	17.5	22.3	37.9
		중위40%	97.9	2.1	19.0	19.7	26.1	35.2
		중위43%	97.9	2.1	18.4	20.4	27.2	34.0
		중위50%	97.1	2.9	17.5	21.9	27.5	33.1
		전체	97.4	2.6	10.7	19.0	46.0	24.3
3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중위28%	99.2	.8	23.3	22.3	17.5	36.9
		중위40%	98.9	1.1	22.0	24.8	21.3	31.9
		중위43%	99.0	1.0	21.9	24.7	21.9	31.5
		중위50%	99.0	1.0	20.1	27.7	22.6	29.6
		전체	97.9	2.1	13.9	29.1	35.2	21.9
4	취업연계 지원서비스	중위28%	99.2	.8	40.2	40.2	7.8	11.8
		중위40%	98.9	1.1	37.6	38.3	9.9	14.2
		중위43%	99.0	1.0	37.7	37.7	10.3	14.4
		중위50%	99.0	1.0	36.9	39.4	10.0	13.8
		전체	96.8	3.2	33.0	38.1	16.9	12.1
5	가족상담서비스	중위28%	99.2	.8	41.2	42.2	8.8	7.8
		중위40%	98.9	1.1	38.3	42.6	10.6	8.5
		중위43%	99.0	1.0	38.4	42.5	11.0	8.2
		중위50%	99.0	1.0	36.9	44.4	10.6	8.1
		전체	98.9	1.1	32.8	43.5	16.7	7.0
6	여행 및 여가서비스	중위28%	99.2	.8	38.2	42.2	10.8	8.8
		중위40%	98.9	1.1	35.5	41.8	12.8	9.9
		중위43%	99.0	1.0	35.6	41.8	13.0	9.6
		중위50%	99.0	1.0	34.4	41.9	15.0	8.8
		전체	96.6	3.4	29.7	40.4	20.9	9.1



〈표 VI-78〉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표계속)

구분	소득분위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없다	있다	전혀 이용하고 싶지않다	이용하고 싶지않다	가끔 이용하고 싶다	자주 이용하고 싶다	
7	노후설계지원서비스	중위28%	99.2	.8	35.3	37.3	17.6	9.8
		중위40%	99.5	.5	34.8	37.6	17.7	9.9
		중위43%	99.5	.5	34.2	37.0	18.5	10.3
		중위50%	99.5	.5	33.1	38.8	18.1	10.0
		전체	99.6	.4	28.1	39.0	23.8	9.1
8	부양가족 휴식지원서비스	중위28%	100.0	.0	38.8	43.7	8.7	8.7
		중위40%	100.0	.0	36.2	42.6	10.6	10.6
		중위43%	100.0	.0	36.6	42.1	11.0	10.3
		중위50%	100.0	.0	34.4	43.1	12.5	10.0
		전체	100.0	.0	30.4	41.1	18.8	9.7
9	식사배달서비스	중위28%	96.0	4.0	19.8	21.7	20.8	37.7
		중위40%	96.8	3.2	19.3	21.4	25.5	33.8
		중위43%	96.9	3.1	18.7	22.0	26.0	33.3
		중위50%	96.6	3.4	17.8	23.3	26.4	32.5
		전체	98.1	1.9	17.3	29.9	28.5	24.3
10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중위28%	96.8	3.2	21.9	19.0	22.9	36.2
		중위40%	97.3	2.7	20.3	18.9	25.9	35.0
		중위43%	97.4	2.6	20.3	19.6	26.4	33.8
		중위50%	97.1	2.9	19.1	21.0	26.5	33.3
		전체	98.3	1.7	16.3	29.1	30.9	23.7
11	주야간 볼동서비스	중위28%	100.0	.0	10.7	31.1	42.7	15.5
		중위40%	99.5	.5	11.4	28.6	43.6	16.4
		중위43%	99.5	.5	11.6	28.6	43.5	16.3
		중위50%	99.5	.5	11.9	29.4	43.1	15.6
		전체	98.9	1.1	13.8	35.1	36.8	14.3
12	취미여가활동지원서비스	중위28%	98.4	1.6	27.2	24.3	31.1	17.5
		중위40%	98.4	1.6	27.0	27.0	29.1	17.0
		중위43%	98.4	1.6	26.7	26.7	30.1	16.4
		중위50%	97.6	2.4	25.0	27.5	30.0	17.5
		전체	95.5	4.5	21.7	33.4	30.5	14.4

## 7) 장애인 가구의 빈곤실태 및 욕구

장애인빈곤가구의 교육수준으로는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고졸의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으나 빈곤가구별로는 무학의 경우가 35%에서 많게는 50.0%로 나타나 전체적인 평균수준과 차이가 나타났다.

〈표VI-79〉 장애인 빈곤가구의 교육수준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중위28%	50.0	14.3	21.4	7.1	7.1
중위40%	46.7	13.3	26.7	6.7	6.7
중위43%	46.7	13.3	26.7	6.7	6.7
중위50%	35.0	25.0	20.0	15.0	5.0
전체	20.0	29.1	10.9	36.4	3.6

장애인가구의 형태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50%의 경우 혼자생활이 26.7%, 중위소득 43%이하의 가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가 많았다. 수급자의 형태로는 일반수급가구가 가장 많았고, 전체적인 평균 수준인 44.8%보다 약 30%이상 높은 수준으로 많이 나타났다.

빈곤 장애인의 경우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26.7%는 일반 장애인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 8.0%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빈곤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VI-80〉 장애인가구 형태별 빈곤인구 비율

구분	가구형태				수급자 형태				
	혼자생활	부모와 함께 생활	친구와 함께 생활	기타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가구원중 일부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	일반
중위28%	12.5	12.5		75.0	76.9	.0	.0		23.1
중위40%	10.0	20.0		70.0	73.3	.0	.0		26.7
중위43%	10.0	20.0		70.0	73.3	.0	.0		26.7
중위50%	26.7	13.3		60.0	76.2	.0	4.8		19.0
전체	8.0	12.0		80.0	44.8	.0	5.2	3.4	46.6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적인 수준인 30.9%에 비해 약 30%가량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 장애인의 경우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불편 등의 순이었다.

〈표VI-81〉 장애로 인한 어려움

구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차별	일자리 어려움	가족관계 어려움	친구관계 어려움	의료비 부담	교통불편	여가/사회 참여	기타
중위28%	8.3	.0	66.7		8.3		16.7	.0	
중위40%	7.7	.0	69.2		7.7		15.4	.0	.0
중위43%	7.7	.0	69.2		7.7		15.4	.0	.0
중위50%	10.5	5.3	52.6		5.3		26.3	.0	.0
전체	16.4	7.3	30.9	.0	1.8	9.1	14.5	3.6	16.4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월 평균 추가비용으로는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중위소득 50% 가구에서 6.4만원, 그 이하의 가구에서는 7.0만원 수준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I-82〉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발생 비용

구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비	통신비	보조기구입비
중위28%	3.6	7.0			2.1	
중위40%	3.6	7.0			2.0	
중위43%	3.6	7.0			2.0	
중위50%	3.5	6.4			1.9	
전체	10.4	26.7			4.8	

〈표VI-83〉 일상생활 도움 및 그에 따른 월 평균 지출 비용

구분	일상생활 도움여부		도움 주는 사람				월 평균 지출 (만원)
	있다	없다	가족	친척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중위28%	64.3	35.7	33.3			66.7	13.8
중위40%	60.0	40.0	33.3			66.7	13.3
중위43%	60.0	40.0	33.3			66.7	13.3
중위50%	60.0	40.0	25.0		8.3	66.7	13.3
전체	58.9	41.1	66.7		5.1	28.2	31.1

장애인빈곤가구의 60%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월 평균 약 13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VI-84〉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기본적 일상생활	소득분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중위28%	7.1	21.4	21.4	50.0	
	중위40%	6.7	26.7	20.0	46.7	
	중위43%	6.7	26.7	20.0	46.7	
	중위50%	4.8	19.0	19.0	57.1	.0
	전체	15.8	8.8	28.1	36.8	10.5
2 취업경제활동 어려움	중위28%	7.1	.0	7.1	42.9	42.9
	중위40%	6.7	.0	6.7	46.7	40.0
	중위43%	6.7	.0	6.7	46.7	40.0
	중위50%	4.8	.0	14.3	47.6	33.3
	전체	13.8	1.7	22.4	25.9	36.2
3 경제적 어려움	중위28%	7.1		7.1	42.9	42.9
	중위40%	6.7		6.7	46.7	40.0
	중위43%	6.7		6.7	46.7	40.0
	중위50%	4.8		4.8	57.1	33.3
	전체	17.2	1.7	22.4	34.5	24.1
4 자녀양육 어려움	중위28%	23.1	7.7	30.8	.0	38.5
	중위40%	28.6	7.1	28.6	.0	35.7
	중위43%	28.6	7.1	28.6	.0	35.7
	중위50%	40.0	5.0	20.0	10.0	25.0
	전체	23.2	14.3	23.2	16.1	23.2
5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간 불화	중위28%	14.3	28.6	14.3	7.1	35.7
	중위40%	13.3	26.7	20.0	6.7	33.3
	중위43%	13.3	26.7	20.0	6.7	33.3
	중위50%	9.5	23.8	28.6	14.3	23.8
	전체	13.8	17.2	34.5	15.5	19.0

〈표Ⅵ-85〉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기본적 일상생활	소득분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6 교육받는 어려움	중위28%	7.1	7.1	42.9	7.1	35.7
	중위40%	6.7	6.7	46.7	6.7	33.3
	중위43%	6.7	6.7	46.7	6.7	33.3
	중위50%	5.0	25.0	40.0	5.0	25.0
	전체	19.6	14.3	37.5	7.1	21.4
7 장애 재활치료이용 어려움	중위28%	7.7	7.7	69.2	15.4	.0
	중위40%	6.7	6.7	66.7	20.0	.0
	중위43%	6.7	6.7	66.7	20.0	.0
	중위50%	5.3	10.5	57.9	26.3	.0
	전체	15.8	7.0	42.1	15.8	19.3
8 이성교제 및 결혼 어려움	중위28%	21.4	7.1	.0	28.6	42.9
	중위40%	25.0	6.3	6.3	25.0	37.5
	중위43%	25.0	6.3	6.3	25.0	37.5
	중위50%	33.3	4.8	4.8	19.0	38.1
	전체	29.8	7.0	26.3	8.8	28.1
9 여가취미문화활동 어려움	중위28%	14.3	7.1	7.1	7.1	64.3
	중위40%	20.0	6.7	6.7	6.7	60.0
	중위43%	20.0	6.7	6.7	6.7	60.0
	중위50%	23.8	4.8	14.3	9.5	47.6
	전체	26.3	3.5	19.3	15.8	35.1
10 이동·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중위28%	7.1	7.1	28.6	50.0	7.1
	중위40%	13.3	6.7	26.7	46.7	6.7
	중위43%	13.3	6.7	26.7	46.7	6.7
	중위50%	10.0	5.0	30.0	40.0	15.0
	전체	19.3	8.8	26.3	24.6	21.1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사회적 차별, 취업 및 경제활동, 경제적 어려움 등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가 및 취미·문화활동의 어려움이 중위소득 28%에서 64.3%, 중위소득 40%와 43% 가구에서 60.0%로 다른 어려움에 비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Ⅵ-86〉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인지도 및 이용도

구분	소득분위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여부			
		잘 모름	조금 안다	잘 안다	없다	있다	잘 모르 겠음	이용 안함	이용함	
1	종합사회복지관	중위28%	40.0	20.0	40.0	90.0	10.0	40.0	.0	60.0
		중위40%	40.0	20.0	40.0	90.0	10.0	50.0	.0	50.0
		중위43%	40.0	20.0	40.0	90.0	10.0	50.0	.0	50.0
		중위50%	42.9	23.8	33.3	93.8	6.3	58.3	8.3	33.3
		전체	36.4	30.9	32.7	83.0	17.0	62.8	2.3	34.9
2	장애인복지관	중위28%	42.9	14.3	42.9	100.0	.0	40.0	.0	60.0
		중위40%	43.8	18.8	37.5	100.0	.0	50.0	.0	50.0
		중위43%	43.8	18.8	37.5	100.0	.0	50.0	.0	50.0
		중위50%	42.9	19.0	38.1	87.5	12.5	58.3	8.3	33.3
		전체	23.2	42.9	33.9	89.4	10.6	62.8	2.3	34.9
3	장애인생활시설 요양시설	중위28%	53.3	6.7	40.0	100.0	.0	40.0	20.0	40.0
		중위40%	56.3	6.3	37.5	100.0	.0	50.0	16.7	33.3
		중위43%	56.3	6.3	37.5	100.0	.0	50.0	16.7	33.3
		중위50%	52.4	4.8	42.9	80.0	20.0	46.2	23.1	30.8
		전체	35.1	31.6	33.3	91.1	8.9	59.1	6.8	34.1
4	공동생활가정	중위28%	64.3	14.3	21.4	100.0		40.0	40.0	20.0
		중위40%	66.7	13.3	20.0	100.0	.0	50.0	33.3	16.7
		중위43%	66.7	13.3	20.0	100.0	.0	50.0	33.3	16.7
		중위50%	60.0	10.0	30.0	81.3	18.8	46.2	30.8	23.1
		전체	56.4	25.5	18.2	93.6	6.4	63.6	20.5	15.9
5	주간단기보호시설	중위28%	53.8	23.1	23.1	100.0		33.3	33.3	33.3
		중위40%	60.0	20.0	20.0	100.0	.0	42.9	28.6	28.6
		중위43%	60.0	20.0	20.0	100.0	.0	42.9	28.6	28.6
		중위50%	66.7	14.3	19.0	100.0	.0	69.2	15.4	15.4
		전체	56.4	21.8	21.8	100.0	.0	77.3	4.5	18.2
6	직업재활시설	중위28%	64.3	14.3	21.4	100.0		40.0	20.0	40.0
		중위40%	66.7	13.3	20.0	100.0	.0	50.0	16.7	33.3
		중위43%	66.7	13.3	20.0	100.0	.0	50.0	16.7	33.3
		중위50%	71.4	14.3	14.3	100.0		75.0	8.3	16.7
		전체	47.3	30.9	21.8	95.7	4.3	55.8	2.3	41.9
7	수화통역센터	중위28%	69.2	7.7	23.1	100.0		40.0	40.0	20.0
		중위40%	71.4	7.1	21.4	100.0	.0	50.0	33.3	16.7
		중위43%	71.4	7.1	21.4	100.0	.0	50.0	33.3	16.7
		중위50%	70.6	11.8	17.6	100.0	.0	55.6	33.3	11.1
		전체	58.0	26.0	16.0	100.0	.0	69.2	15.4	15.4
8	정신보건센터	중위28%	60.0	13.3	26.7	100.0		40.0	40.0	20.0
		중위40%	60.0	13.3	26.7	90.0	10.0	50.0	33.3	16.7
		중위43%	60.0	13.3	26.7	90.0	10.0	50.0	33.3	16.7
		중위50%	70.0	10.0	20.0	93.8	6.3	66.7	16.7	16.7
		전체	61.1	22.2	16.7	97.9	2.1	68.2	13.6	18.2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인지도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인지도가 60%대로 다른 시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향후 이용수요 또한 50%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Ⅵ-87〉 장애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구분	본인시간 부족	거동불편	질 낮은 서비스	이용방법 모름	거리멀고 교통불편	비용부담	필요한 서비스 없음	기타
중위28%	23.1	15.4	.0	46.2	15.4	.0	.0	
중위40%	21.4	14.3	.0	42.9	14.3	.0	.0	7.1
중위43%	21.4	14.3	.0	42.9	14.3	.0	.0	7.1
중위50%	15.8	26.3	.0	31.6	21.1	.0	.0	5.3
전체	17.5	36.8	.0	12.3	24.6	3.5	3.5	1.8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는 전체적인 평균 수준에서는 거동이 불편해서가 36.8%로 가장 많았으나, 빈곤가구별로는 이용방법을 몰라서가 적게는 31.6%에서 많게는 4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국 빈곤 장애인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의 가장 큰 부분은 정보의 부족이었고, 다음으로 접근성 불편 등의 순이었다.

〈표Ⅵ-88〉 장애인복지 향상위해 필요한 서비스

구분	자녀 양육 교육	고용 지원	복지 정보 제공 상담	재활 훈련	여가 문화 활동	이성 교제 결혼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장애 아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도	개인 맞춤 상담	일상 생활 지원	장애인 자조 모임	기타
중위28%	25.0	.0	.0	8.3	.0		16.7			50.0		.0
중위40%	23.1	.0	.0	7.7	.0		15.4		7.7	46.2		.0
중위43%	23.1	.0	.0	7.7	.0		15.4		7.7	46.2		.0
중위50%	15.8	5.3	.0	5.3	.0	.0	10.5		5.3	47.4		10.5
전체	10.7	7.1	3.6	8.9	1.8	.0	8.9	8.9	7.1	37.5	1.8	3.6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녀양육 및 교육서비스 등의 순이었다.

〈표VI-89〉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본 일상생활

기본적 일상생활	소득분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혀 못함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어느정도 가능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1	옷 벗고 입기	중위28%	.0	7.1	92.9
		중위40%	.0	6.7	93.3
		중위43%	.0	6.7	93.3
		중위50%	.0	10.0	90.0
		전체	15.5	24.1	60.3
2	세수하기	중위28%	.0	7.1	92.9
		중위40%	.0	6.7	93.3
		중위43%	.0	6.7	93.3
		중위50%	.0	10.0	90.0
		전체	12.1	19.0	69.0
3	양치질하기	중위28%	.0	7.1	92.9
		중위40%	.0	6.7	93.3
		중위43%	.0	6.7	93.3
		중위50%	.0	10.0	90.0
		전체	12.1	19.0	69.0
4	목욕하기	중위28%	7.1	.0	92.9
		중위40%	6.7	.0	93.3
		중위43%	6.7	.0	93.3
		중위50%	4.8	9.5	85.7
		전체	18.6	13.6	67.8
5	식사하기	중위28%	.0	.0	100.0
		중위40%	.0	.0	100.0
		중위43%	.0	.0	100.0
		중위50%	.0	9.5	90.5
		전체	10.3	19.0	70.7
6	방 밖으로 나오기	중위28%	.0	.0	100.0
		중위40%	.0	.0	100.0
		중위43%	.0	.0	100.0
		중위50%	.0	9.5	90.5
		전체	13.8	15.5	70.7
7	화장실 사용하기	중위28%	.0	7.1	92.9
		중위40%	.0	6.7	93.3
		중위43%	.0	6.7	93.3
		중위50%	.0	14.3	85.7
		전체	8.5	23.7	67.8
8	소변대변 조절하기	중위28%	.0	.0	100.0
		중위40%	.0	.0	100.0
		중위43%	.0	.0	100.0
		중위50%	.0	9.5	90.5
		전체	3.4	25.9	70.7



〈표VI-90〉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기타 일상생활

기타 일상생활		소득분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혀 못함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어느정도 가능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1	몸단장하기	중위28%	.0	7.1	92.9
		중위40%	.0	6.7	93.3
		중위43%	.0	6.7	93.3
		중위50%	.0	14.3	85.7
		전체	10.5	28.1	61.4
2	집안일(청소·설거지 등)하기	중위28%	7.1	.0	92.9
		중위40%	6.7	.0	93.3
		중위43%	6.7	.0	93.3
		중위50%	4.8	23.8	71.4
		전체	23.7	16.9	59.3
3	식사 준비하기	중위28%	7.7	.0	92.3
		중위40%	7.1	.0	92.9
		중위43%	7.1	.0	92.9
		중위50%	5.0	15.0	80.0
		전체	24.6	19.3	56.1
4	빨래하기	중위28%	7.1	.0	92.9
		중위40%	6.7	.0	93.3
		중위43%	6.7	.0	93.3
		중위50%	14.3	9.5	76.2
		전체	27.6	10.3	62.1
5	근거리 외출하기	중위28%	7.1	7.1	85.7
		중위40%	6.7	13.3	80.0
		중위43%	6.7	13.3	80.0
		중위50%	4.8	23.8	71.4
		전체	22.0	16.9	61.0
6	교통수단 이용하기	중위28%	7.1	7.1	85.7
		중위40%	6.7	13.3	80.0
		중위43%	6.7	13.3	80.0
		중위50%	10.0	25.0	65.0
		전체	26.3	14.0	59.6
7	상점·가게에서 물건사기	중위28%	7.1	.0	92.9
		중위40%	6.7	.0	93.3
		중위43%	6.7	.0	93.3
		중위50%	4.8	9.5	85.7
		전체	19.0	13.8	67.2
8	금전 관리하기	중위28%	7.1	35.7	57.1
		중위40%	6.7	33.3	60.0
		중위43%	6.7	33.3	60.0
		중위50%	4.8	33.3	61.9
		전체	22.4	19.0	58.6
9	전화 사용하기	중위28%	.0	.0	100.0
		중위40%	.0	.0	100.0
		중위43%	.0	.0	100.0
		중위50%	.0	.0	100.0
		전체	17.5	10.5	71.9
10	약 챙겨먹기	중위28%	.0	.0	100.0
		중위40%	.0	.0	100.0
		중위43%	.0	.0	100.0
		중위50%	.0	.0	100.0
		전체	17.5	10.5	71.9

빈곤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정도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과 몸단장하기, 집안일, 식사준비하기 등 기타 일상생활 수행능력 모두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가 대체적으로 8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금전관리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가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33% 수준으로 나타나 금전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Ⅵ-91〉 일자리 없는 경우 희망일자리

구분	근로여부	일을 할 의향		원하는 일자리 분야					원하는 급여(만원)
	없다	없다	있다	행정직	기술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기타	
중위28%	88.9	64.3	35.7		9.1	36.4	9.1	45.5	100.0
중위40%	90.0	66.7	33.3		9.1	36.4	9.1	45.5	100.0
중위43%	90.0	66.7	33.3		9.1	36.4	9.1	45.5	100.0
중위50%	93.8	50.0	40.0		7.1	50.0	7.1	35.7	72.6
전체	79.2	48.9	38.3		24.0	36.0	8.0	32.0	101.4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 향후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중위소득 50%가구에서 40.0%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38.3%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일자리 분야로는 기타를 제외한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고, 원하는 급여로는 중위소득 50%가구는 72.6만원, 그 이하 소득기준의 가구에서는 100.0만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로는 중위소득 28%가구에서 11.1% 등으로 매우 낮았고, 받고 있는 월 평균 급여로는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적인 월평균 급여수준인 106.9만원에 비해 약 80만원 정도 낮았다.

〈표Ⅵ-92〉 일자리 있는 경우 월평균 급여

구분	일자리 있다	현재 월평균 급여(만원)
중위28%	11.1	20.0
중위40%	10.0	20.0
중위43%	10.0	20.0
중위50%	6.3	25.1
전체	20.8	106.9

〈표VI-93〉 장애인관련 서비스 인지여부 및 필요성

기타 일상생활	소득분위	인지여부		이용여부		필요성			
		모름	알고 있음	없음	있음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조금 필요	많이 필요
1 장애인활동지원	중위28%	21.4	78.6	53.8	46.2	14.3	28.6	.0	57.1
	중위40%	26.7	73.3	60.0	40.0	20.0	26.7	.0	53.3
	중위43%	26.7	73.3	60.0	40.0	20.0	26.7	.0	53.3
	중위50%	25.0	75.0	55.0	45.0	19.0	19.0	9.5	52.4
	전체	38.6	61.4	75.9	24.1	18.2	10.9	16.4	54.5
2 발달재활 서비스	중위28%	71.4	28.6	92.3	7.7	53.8	30.8	.0	15.4
	중위40%	73.3	26.7	92.9	7.1	57.1	28.6	.0	14.3
	중위43%	73.3	26.7	92.9	7.1	57.1	28.6	.0	14.3
	중위50%	76.2	23.8	95.0	5.0	47.6	28.6	9.5	14.3
	전체	62.1	37.9	94.5	5.5	30.4	32.1	5.4	32.1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중위28%	71.4	28.6	100.0		53.8	30.8	7.7	7.7
	중위40%	73.3	26.7	100.0		57.1	28.6	7.1	7.1
	중위43%	73.3	26.7	100.0		57.1	28.6	7.1	7.1
	중위50%	71.4	28.6	100.0		52.4	19.0	14.3	14.3
	전체	53.4	46.6	87.0	13.0	32.1	25.0	7.1	35.7
4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중위28%	78.6	21.4	92.9	7.1	53.8	30.8	7.7	7.7
	중위40%	80.0	20.0	93.3	6.7	57.1	28.6	7.1	7.1
	중위43%	80.0	20.0	93.3	6.7	57.1	28.6	7.1	7.1
	중위50%	81.0	19.0	95.0	5.0	57.1	28.6	4.8	9.5
	전체	66.7	33.3	85.5	14.5	35.7	26.8	5.4	32.1
5 방과후 활동비 지원	중위28%	71.4	28.6	100.0		57.1	28.6	7.1	7.1
	중위40%	73.3	26.7	100.0		60.0	26.7	6.7	6.7
	중위43%	73.3	26.7	100.0		60.0	26.7	6.7	6.7
	중위50%	80.0	20.0	100.0		61.9	28.6	4.8	4.8
	전체	68.4	31.6	96.4	3.6	37.5	28.6	3.6	30.4

장애인관련 서비스의 인지여부에 있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61.4%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의 인지도는 50%미만으로 다소 낮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40%를 상회하며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필요성 또한 5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I-94〉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

구분	소득분위	이용경험		필요성			
		없다	있다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조금 필요함	많이 필요함
1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중위28%	92.3	7.7	.0	.0	11.1	88.9
	중위40%	93.3	6.7	.0	.0	11.1	88.9
	중위43%	93.3	6.7	.0	.0	11.1	88.9
	중위50%	85.0	15.0	.0	.0	26.7	73.3
	전체	84.2	15.8	.0	8.7	43.5	47.8
2 운동처방 서비스	중위28%	92.3	7.7	.0	11.1	11.1	77.8
	중위40%	93.3	6.7	.0	11.1	11.1	77.8
	중위43%	93.3	6.7	.0	11.1	11.1	77.8
	중위50%	90.0	10.0	.0	7.1	28.6	64.3
	전체	87.7	12.3	.0	11.1	42.2	46.7
3 안마등 기초보건서비스	중위28%	100.0	.0	.0	20.0	20.0	60.0
	중위40%	100.0	.0	.0	20.0	20.0	60.0
	중위43%	100.0	.0	.0	20.0	20.0	60.0
	중위50%	85.0	15.0	.0	23.1	23.1	53.8
	전체	87.7	12.3	.0	16.7	42.9	40.5
4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	중위28%	92.3	7.7	.0	77.8	11.1	11.1
	중위40%	93.3	6.7	.0	77.8	11.1	11.1
	중위43%	93.3	6.7	.0	77.8	11.1	11.1
	중위50%	80.0	20.0	.0	50.0	28.6	21.4
	전체	89.5	10.5	.0	23.3	39.5	37.2
5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중위28%	100.0	.0	10.0	70.0	10.0	10.0
	중위40%	100.0	.0	10.0	70.0	10.0	10.0
	중위43%	100.0	.0	10.0	70.0	10.0	10.0
	중위50%	90.0	10.0	20.0	46.7	26.7	6.7
	전체	93.0	7.0	19.6	21.7	34.8	23.9
6 가족상담서비스	중위28%	100.0	.0	.0	30.0	10.0	60.0
	중위40%	100.0	.0	.0	30.0	10.0	60.0
	중위43%	100.0	.0	.0	30.0	10.0	60.0
	중위50%	100.0	.0	21.4	21.4	14.3	42.9
	전체	100.0	.0	20.5	13.6	31.8	34.1

빈곤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으로는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안마 등 기초보건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등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다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기구 렌탈이나 취업 및 직업상담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는 다른 복지서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I-95〉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의향(표계속)

구분	소득분위	이용경험		필요성				
		없다	있다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조금 필요함	많이 필요함	
7	여행 및 여가서비스	중위28%	100.0	.0	.0	30.0	10.0	60.0
		중위40%	100.0	.0	.0	30.0	10.0	60.0
		중위43%	100.0	.0	.0	30.0	10.0	60.0
		중위50%	100.0	.0	21.4	28.6	7.1	42.9
		전체	100.0	.0	25.0	11.4	31.8	31.8
8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중위28%	100.0	.0	.0	20.0	20.0	60.0
		중위40%	100.0	.0	.0	20.0	20.0	60.0
		중위43%	100.0	.0	.0	20.0	20.0	60.0
		중위50%	90.0	10.0	.0	14.3	21.4	64.3
		전체	91.2	8.8	13.6	6.8	18.2	61.4
9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중위28%	57.1	42.9	.0	11.1	11.1	77.8
		중위40%	60.0	40.0	.0	11.1	11.1	77.8
		중위43%	60.0	40.0	.0	11.1	11.1	77.8
		중위50%	65.0	35.0	.0	7.1	21.4	71.4
		전체	68.4	31.6	4.5	4.5	25.0	65.9
10	재활치료서비스	중위28%	92.3	7.7	.0	66.7	22.2	11.1
		중위40%	92.9	7.1	.0	66.7	22.2	11.1
		중위43%	92.9	7.1	.0	66.7	22.2	11.1
		중위50%	95.0	5.0	.0	64.3	14.3	21.4
		전체	89.5	10.5	.0	42.5	12.5	45.0
11	주야간돌봄서비스	중위28%	100.0	.0	.0	66.7	22.2	11.1
		중위40%	100.0	.0	.0	66.7	22.2	11.1
		중위43%	100.0	.0	.0	66.7	22.2	11.1
		중위50%	94.7	5.3	.0	69.2	15.4	15.4
		전체	98.2	1.8	.0	45.2	31.0	23.8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율은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빈곤가구 전반적으로 35%~42.9%까지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으로는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가 중위소득가구 43%이하 가구에서 8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운동처방서비스,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이 77.8%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 제 7 장

# 전라북도 빈곤정책 분석

1. 빈곤기준별 빈곤정책 분석
2. 전라북도 자원별 빈곤정책 분석





## Ⅶ. 전라북도 빈곤정책 분석

### 1. 빈곤기준별 빈곤정책 분석

빈곤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정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정책의 유형은 크게, 건강 및 의료지원분야, 교육분야, 기초안전망 분야, 돌봄분야, 자활 및 고용지원분야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 및 방송지원분야, 주거 및 에너지 교통분야 등으로 빈곤 관련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표Ⅶ-1〉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구분	사업내용
건강 및 의료지원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관리,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교육/문화	문화통합이용권
기초안전망	교육급여, 생계급여, 장애급여,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간접)사회복지시설 이용권, (간접)생계지원, (간접)연료비 및 전기요금, (간접)의료비지원, (간접)장제비지원, (간접)주거지원, (간접)해산비지원, 양곡할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의료그병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돌봄	가시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소득보장/조세감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리누리),
자활 및 고용지원	내일행복지원단, 일일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근로장려금,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 모니터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소상공인지원(용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취약계층전담취업지원사업,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통장
정보통신/방송지원	사랑의 그린PC보급
주거/에너지/교통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주거약자개량자금지원, 준주택지원(용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 등 기존임대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공급,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국민임대아파트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복지(고효율조명기기), 연탄현물(쿠폰)보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주택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보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증, 풍수해보험료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Ⅵ-2〉 복지여성보건국 국고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소득기준	개수	사업명	예산(천원)
합계	38		959,964,896
중위 28% 최저생계비 74%	9	생계급여(중위28%), 주거급여(중위43%),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자활장려금지원, 희망키움통장(수급자), 아동발달지원계좌, 장애수당(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사업	280,737,009
중위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 43% 최저생계비 108%			
중위 50% 최저생계비 120%	6	교육급여(중위50%), 차상위계층양곡할인, 희망키움통장(차상위), 노인일자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인실비입소료	46,321,910
최저생계비 130%	1	장애인자녀 교육비	17,600
최저생계비 150%	1	기초연금	490,736,740
최저생계비 180%	1	긴급복지지원	6,099,000
최저생계비 200%			
최저생계비 300%			
수급자+차상위	10	자활근로, 희망리본,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재가한센인생계비,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금지원	73,520,664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전국가구평균소득 60%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3	아이돌보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언어발달지원	8,096,98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절차비용,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서비스 지원	11,682,732
가구소득하위 70%	2	가정양수당지원, 장애인 응급알림e	42,752,261

전라북도에서는 빈곤정책이 대부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빈곤정책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중위소득 28%는 최저생계비 74%수준이고, 중위소득 40%는 최저생계비 100%수준이다. 그리고 중위소득 43%와 중위소득 50%는 각각 최저생계비 108%와 120%수준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관련 사업을 분류해 보면, 중위소득 43% 미만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총 9개 사업에 2,8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최저생계비 130%구간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는 장애인자녀교육비, 기초연금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자활근로, 희망리본,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재가한센인생계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금지원 등 총 10개 사업이고, 아이돌보미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언어발달지원 등의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업이다.

한편,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사업 중 중위소득 기준의 복지사업을 분석해 보면, 중위소득 43%이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재가암관리 등 총 9개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Ⅶ-3〉 복지여성보건국 기금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소득기준	개수	사업명	예산(천원)
합계	16		17,016,621
중위 28% 최저생계비 74%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진단	148,805
중위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 43% 최저생계비 108%			
중위 50%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30%	1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3,510,000
최저생계비 150%	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96,632
최저생계비 180%	1	청소년특별지원	72,500
최저생계비 200%	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지원, 직접)	6,906,982
최저생계비 300%			
수급자+차상위	5	재가암관리,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구강건강관리(노인의치보철)	2,684,482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전국가구평균소득 60%	1	신생아난청조기진단	22,100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1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관리)	1,381,90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2	난임부부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193,220
가구소득하위 70%			

〈표Ⅶ-4〉 복지여성보건국 지특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소득기준	개수	사업명	예산(천원)
합계	3		19,073,201
중위 28% 최저생계비 74%			
중위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 43% 최저생계비 108%			
중위 50%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30%	1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3,589,575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180%			
최저생계비 200%			
최저생계비 300%			
수급자+차상위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전국가구평균소득 60%			
전국가구평균소득 65%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42,070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13,441,556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소득하위 70%			

〈표Ⅶ-5〉 복지여성보건국 도비사업 중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소득기준	개수	사업명	예산(천원)
합계	25		34,587,758
중위 28% 최저생계비 74%	7	소년소녀가정지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27,950,759
중위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 43% 최저생계비 108%			
중위 50% 최저생계비 120%	1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58,508
최저생계비 130%	6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연중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장애인 신문보급	3,555,871
최저생계비 150%	1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180,000
최저생계비 180%			
최저생계비 200%			
최저생계비 300%			
수급자+차상위	10	전북광역푸드뱅크 운영, 기부식품뱅크마켓 운영, 사회 복지심부름센터 운영,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지원, 무료경로식당,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운영비, 아토피예방관리,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2,442,620

〈표Ⅶ-6〉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사업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

구분	최저생계비							수급 + 차상 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하위 70%	기 타	합 계
	100%	120%	130%	150%	180%	200%	300%		50%	60%	65%	70%	100%	150%			
사회복지과	6	4	0	1	1	0	0	5	0	0	0	0	1	0	1	71	90
여성청소년과	3	0	6	1	1	0	0	2	0	0	0	0	1	0	0	164	178
노인장애인과	6	3	3	1	0	0	0	8	0	0	0	0	2	5	1	107	136
보건의료과	0	0	0	0	0	0	0	2	0	0	0	0	1	0	0	84	87
건강안전과	3	0	0	0	0	2	0	8	0	1	1	0	0	2	0	46	63
합계	18	7	9	3	2	2	0	25	0	1	1	0	5	7	2	472	554

자료 : 복지여성보건국 2015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재정리

전라북도의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복지사업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41개 사업이고 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25개 사업이다. 그리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총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기준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제공기준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표Ⅵ-7〉 복지여성보건국 분과별 사업분석

소득기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사업명	예산(천원)	사업명	예산(천원)
합계		19개 사업	377,875,247	14개 사업	24,380,522
중위 28%	최저생계비 74%	[6개 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수급자),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수급자)	273,561,991	[3개 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 보호대상아동생활안정 아동발달지원계좌	1,168,101
중위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 43%	최저생계비 108%				
중위 50%	최저생계비 120%	[4개 사업]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교육급여, 양곡할인(차상위), 희망키움통장(차상위)	14,439,898		
	최저생계비 130%			[6개 사업] 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 한부모가정자녀교육비 연중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	10,584,846
	최저생계비 150%	[1개 사업]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180,000	[1개 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96,632
	최저생계비 180%	[1개 사업] 긴급복지지원	6,099,000	[1개 사업] 청소년특별지원	72,500
	최저생계비 200%				
	최저생계비 300%				
	수급자+차상위	[5개 사업] 전북광역푸드뱅크 운영 기부식품뱅크마켓 운영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자활근로사업 희망리본사업	27,748,345	[2개 사업] 한부모가정생활자립지원 아동보호통합서비스	5,313,90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1개 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13,441,556	[1개 사업] 아이돌보미지원	7,144,543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소득하위 70%	[1개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42,404,457		

한편,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을 관련 부서별로 분류해 보면, 사회복지과 관련 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3,778억원이고 여성청소년과 관련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234,8억원이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관련 사업으로는 총 29개 사업 6,111억원이고 보건의료과는 총 3개 사업에 28.1억원이다.

〈표Ⅵ-8〉 복지여성보건국 분과별 사업분석

소득기준	노인장애인과		보건의료과	
	사업명	예산(천원)	사업명	예산(천원)
합계	29개 사업	611,098,374	3개 사업	2,812,228
중위 28% 최저생계비 74%	[6개 사업]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노인생활시설지원 장애수당(수급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33,626,950		
중위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 43% 최저생계비 108%				
중위 50% 최저생계비 120%	[3개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인실비입소료	32,340,520		
최저생계비 130%	[3개 사업] 장애인가정영양육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신문보급	88,200		
최저생계비 150%	[1개 사업] 기초연금	490,736,740		
최저생계비 180%				
최저생계비 200%				
최저생계비 300%				
수급자+차상위	[8개 사업] 노인보행보조기지원 무료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41,322,991	[2개 사업] 재가한센인 생계비 한센피해자 생활금지원	1,430,328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2개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952,437	[1개 사업]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	1,381,90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5개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발달장애인공공후견 절차비용 / 서비스지원	11,682,732		
가구소득하위 70%	[1개 사업] 장애인응급알림e	347,804		

〈표Ⅵ-9〉 복지여성보건국 분과별 사업분석

소득기준	건강안전과	
	사업명	예산(천원)
합계	17개 사업	14,476,105
중위 28% 최저생계비 74%	[3개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479,531
중위 40% 최저생계비 100%		
중위 43% 최저생계비 108%		
중위 50%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30%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180%		
최저생계비 200%	[2개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직접)	6,906,982
최저생계비 300%		
수급자+차상위	[8개 사업] 재가암관리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아토피예방관리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구강건강관리(노인의치보철)	2,832,202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전국가구평균소득 60%	[1개 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22,100
전국가구평균소득 65%	[1개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42,070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2개 사업] 난임부부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193,220
가구소득하위 70%		

종합하자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제공대상 선정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 2. 전라북도 재원별 빈곤정책 분석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사업과 자활지원 사업 등은 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자활사레관리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자활생산물 품질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관연계사업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Ⅶ-10〉 전라북도 빈곤정책 세부 내용

	소득지원	자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민관연계, 바우처사업
국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급여</li> <li>주거급여</li> <li>교육급여</li> <li>해산장제급여</li> <li>차상위계층 양곡할인</li> <li>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li> <li>긴급복지 지원</li> <li>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비 (보건)</li> <li>재가한센인 생계비(보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근로사업</li> <li>자활참여자 사레관리</li> <li>지역자활센터 운영</li> <li>광역자활센터 운영</li> <li>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li> <li>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li> <li>사레관리사업 운영비 지원</li> <li>가시간병문 도우미사업</li> <li>재난피해자심리</li> <li>지원센터 운영</li> <li>자활장려금</li> <li>근로수급자 탈수급지원</li> <li>저상버스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li> <li>서민층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li> <li>저소득층옥내 급수관개량지원</li> <li>노숙인시설 운영</li> <li>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도)</li> <li>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시군)</li> <li>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li> <li>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li> <li>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li> <li>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도)</li> <li>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시군)</li> <li>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지원</li> <li>여행바우처 지원사업</li> <li>스포츠타바우처 사업</li> </ul>
광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빈집정비사업</li> <li>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li> </ul>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참여자 사레관리(자체)</li> <li>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li> <li>일자리취약계층 채용정보 제공</li> <li>자활생산물 품질향상지원</li> <li>전북일자리종합지원 센터 운영</li> <li>대학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li> <li>자활생산물 박람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숙인자활시설 운영</li> <li>취약계층 에너지 홀닥터사업</li> <li>마을회관 지원사업</li> <li>저상버스 운영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li> <li>광역푸드뱅크 지원</li> <li>푸드마켓 운영지원</li> <li>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li> <li>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위문</li> <li>의사상자 지원</li> <li>전북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li> <li>자원봉사활동 활성화추진</li> <li>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li> <li>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li> <li>새내기 자원봉사동아리 육성발굴</li> <li>전북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li> <li>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li> <li>옹기종기 마실극장</li> <li>보훈단체사업지원</li> <li>전북보훈회관 유지관리 운영비</li> <li>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li> <li>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li> <li>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li> <li>농업인안전공제 농가부담금지원</li> <li>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사업</li> <li>사회복지의날 기념대회</li> <li>호국보훈 기념행사</li> </ul>

전라북도의 빈곤관련 정책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소득지원사업은 주로 국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약 2,583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자활지원사업은 국고사업과 자체사업으로 506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총 빈곤예산은 약 3,448억원이다.

〈표Ⅶ-11〉 빈곤정책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소득지원		자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민관연계, 바우처사업		합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국고	9	258,355,042	12	49,062,975	5	7,815,308	12	14,279,923	38	329,513,248
광특	0	0	0	0	1	1,603,000	0	0	1	1,603,000
기금	0	0	0	0	1	2,500,000	3	4,216,427	4	6,716,427
분권	0	0	0	0	1	323,602	1	69,202	2	392,804
자체	0	0	9	1,551,020	6	828,748	39	4,193,673	54	6,573,441
합계	9	258,355,042	21	50,613,995	14	13,070,658	55	22,759,225	99	344,798,920

자료 :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서 분석

전라북도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중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총 99개 사업에 약 3,44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복지재정 규모인 2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상별로는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표Ⅶ-12〉 전체복지사업예산 (단위: 천원)

비고	저소득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합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국고	38	329,513,248	42	257,429,069	10	4,816,719	14	251,149,816	27	66,689,968	26	24,636,797	157	934,235,617
광특	1	1,603,000	6	42,603,000	0	0	2	640,000	3	2,560,000	3	23,823	15	47,429,823
기금	4	6,716,427	39	8,526,380	18	6,904,181	3	2,710,281	1	25,000	50	24,387,610	115	49,269,879
분권	2	392,804	7	2,192,089	2	551,218	2	25,184,202	12	21,655,592	1	4,648,391	26	54,624,296
자체	54	6,573,441	67	38,737,493	46	3,445,051	36	11,238,354	44	8,285,062	51	5,370,286	298	73,649,687
합계	99	344,798,920	161	349,488,031	76	15,717,169	57	290,922,653	87	99,215,622	131	59,066,907	611	1,159,209,302

자료 :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서 분석

〈표Ⅶ-13〉 지역별 빈곤예산 분석(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기준)

구분	빈곤사업 단위	예산(백만원)			
		합계	국비	지특	시도비
서울	계	857,185	527,084	0	330,101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759,976	515,663	0	244,31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70,213	923	0	69,290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7,469	0	0	7,469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19,527	10,498	0	9,029
부산	계	544,745	488,062	0	56,680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84,474	434,438	0	50,036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60,271	53,624	0	6,644
대구	계	357,884	329,090	0	28,792
	기초생활급여 지원	322,941	297,725	0	25,216
	저소득 자활지원	34,943	31,365	0	3,576
인천	계	228,078	209,060	0	19,016
	저소득층 생활안정	195,326	180,178	0	15,148
	저소득층 자활지원	32,752	28,882	0	3,868
광주	계	190,420	172,051	0	18,367
	기초생활보장급여	153,301	139,823	0	13,478
	건강보험료지원	280			280
	자활자립지원	35,959	32,228	0	3,729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768			768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	112			112
대전	계	132,677	121,200	0	11,475
	기초생활보장	114,574	106,190	0	8,38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1,140	0	0	1,140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배양	16,963	15,010	0	1,952
울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55,799	49,818	0	5,980
	계	11,720	9,122	0	2,593
	기초생활보장	10,297	8,031	0	2,262
세종	저소득층 자활촉진	1,423	1,091	0	331
	계	488,786	443,783	0	44,998
	생활보장	465,978	425,563	0	40,411
경기	위기가정 지원	22,618	18,220	0	4,397
	나눔문화 활성화	190			190
	계	162,745	145,698	0	17,045
강원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	140,864	125,447	0	15,416
	탈빈곤 자립 및 자활 지원	21,881	20,251	0	1,629
	계	130,769	119,496	0	11,271
충북	저소득층 생활보장	116,711	106,566	0	10,144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14,058	12,930	0	1,127
	계	156,360	139,394	0	16,961
충남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	156,360	139,394	0	16,961
	계	331,312	302,129	0	29,181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294,984	268,604	0	26,379
전북	자활서비스 지원	36,328	33,525	0	2,802
	계	212,722	189,986	0	22,734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178,423	159,886	0	18,536
전남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34,299	30,100	0	4,198
	저소득계층사회안전망 확충	246,124	227,052	0	19,068
	계	321,666	286,309	0	35,354
경북	기초생활보장	292,953	261,562	0	31,390
	저소득층 자활지원	28,713	24,747	0	3,964
	계	1,226	847	0	378
제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1,226	847	0	378



## 제8장

# 전라북도 빈곤정책 개선 방향

1. 생애주기별 빈곤정책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2.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3. 성별·연령별·지역별 빈곤주기에 따른 빈곤정책 차별화
4. 자활전달체계 개편 및 자활기금 활성화
5. 창업위주 탈빈곤정책 지양 및 사회서비스 연계형 일자리 확대
6. 긴급복지지원조례의 제정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 Ⅷ. 전라북도 빈곤정책 개선 방향

### 1. 생애주기별 빈곤정책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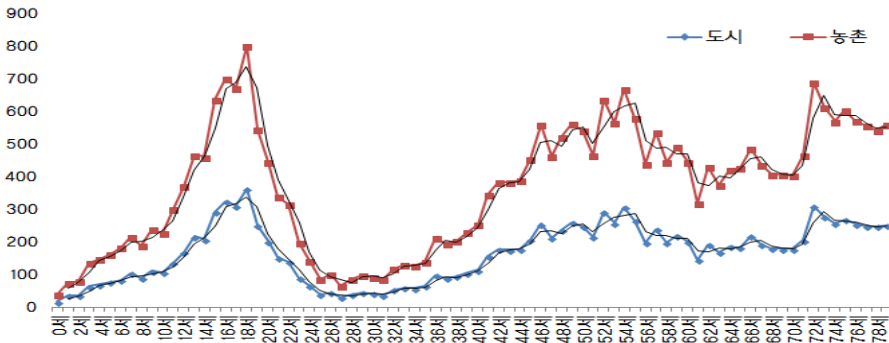
전라북도 빈곤정책은 주로 빈곤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빈곤가구가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낮은 소득을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고, 가구원의 상당수는 낮은 학력과 주기적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정책은 빈곤계층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빈곤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곤 영유아의 경우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은 무상보육으로 일정부분 해소되었고, 분석결과에서도 보육종사자의 불친절이나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부족의 해소에 많은 욕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통해 빈곤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우 무상보육이 제공되는 영유아는 달리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방과후 학교, 무료급식, 예체능 교육실,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빈곤아동보다도 높았다는 점을 고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보다 중요하다. 다만 경제적 지원의 경우 생애주기별 모든 계층의 빈곤인구를 대상으로의 지원은 재정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전환 이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단계적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Ⅷ-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빈곤정책의 유형

	돌봄	요양	건강의료	주거	소득	일자리
영유아	보육/교육		예방접종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건강검진			
청장년				주거안정	자립자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직업훈련
노인		돌봄(기본/종합) 노인요양강화	접종/의료지원 정신건강지원	주택개보수	노후소득 지원	노인일자리확대
장애인		활동지원확대	재활치료강화	주거환경개선 무장애지원	경제적자립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그림Ⅷ-1〉 도시-농촌 연령별 빈곤인구 추이



결국, 생애주기의 빈곤의 위험에 따른 관련 정책의 생애주기별 대응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시기 그리고 노동시장의 진입과 실업이 반복되는 30대와 40대의 청장년층 은퇴가 이루어져 소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청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지원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해야 하고 유형화의 기준은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기준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50대의 부모세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50대 장년층의 탈수급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Ⅷ-2〉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빈곤정책의 유형화

	돌봄	요양	건강의료	주거	소득	일자리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품질향상</li> <li>•보육교사 인권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상접종확대 (선택진료)</li> </ul>			
아동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과후 교육비지원</li> <li>•결식아동 급식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료검진 지원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비지원</li> <li>•학자금대출 이차지원</li> </ul>	
청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기업육성</li> <li>•자활기금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 활성화</li> <li>•취업연계강화</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급외노인요양 지원 확대</li> <li>•경증치매노인 인지재활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강검진비지원</li> <li>•건강검진비지원</li> <li>•방문건강상담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환경개선</li> <li>•독거노인 그룹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일자리확대 (공공부문/일반시장)</li> <li>•노인적합일자리개발</li> </ul>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지원확대</li> <li>•주야간보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치료비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개보수</li> <li>•임대료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지원</li> <li>•공공일자리확대</li> </ul>	



## 2.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전라북도의 빈곤정책은 빈곤선 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될 복지사각지대를 추정하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빈곤선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상당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이행급여제도의 신설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제도 이전 생계급여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제도 변화 이후 수급자로 탈락한 계층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선 변화는 몇 가지 점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생계비지원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 중위소득 28% 구간은 최저생계비의 74%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존 최저생계비 75%에서 100%에 이르는 구간의 소득을 보유한 빈곤계층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제도변화 이후에는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

〈표Ⅷ-3〉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교(2013년 4인 기준)

주요지표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현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43%	최저 생계비 (중위 40%)	현 현금 급여기준 (생계·주거 급여)	중위소득 30%	현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
중위소득 기준	100	50	48	43	40	33	30	27
최저생계비 기준	248	124	120	107	100	82	74	66
금액	384	192	186	165	155	127	115	102

[참고]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전라북도의 생애주기별 빈곤인구 추정치와 해당 인구추정치에 따른 현재 기초수급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급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복지사각지대를 추정해 보면, 영유아 빈곤가구는 빈곤 영유아의 10.2%, 초등빈곤가구는 12.9%, 중고등 빈곤가구는 14.6%, 장애인빈곤가구 14.8%, 노인빈곤가구 39.7%, 일반가구 17.7%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를 전체 해당 가구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전체 영유아 빈곤가구는 10.2%, 전체 초등학생의 1.8%, 전체 중고등학생의 2.5%, 전체 장애인의 5.4%, 전체 노인의 17.7%는 복지사각지대로 분류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은 이들 빈곤가구 중 제도 변화 이후 사각지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Ⅷ-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빈곤인구 및 복지사각지대 추정인구 비율

구분	영유아 빈곤가구	초등 빈곤가구	중고등 빈곤가구	장애인빈곤가구	노인빈곤가구	일반가구
중위 28%	9.2	10.6	4.5	24.1	26.7	12.3
중위 40%	9.5	11.2	14.4	25.9	39.8	17.9
중위 43%	9.5	12.9	15.5	25.9	41.0	18.8
중위 50%	10.2	14.0	17.4	36.2	44.6	21.2
전체 인구대비	10.2	12.9	14.6	14.8	39.7	17.7
복지 사각지대	10.2	1.8	2.5	5.4	17.7	3.8

자료 : 전라북도 복지실태조사 raw data 분석 추정치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앞서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행정 단위의 집중 발굴 같은 현재의 노력과는 다른 체계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빈곤선 변화에 따라 각각의 복지급여의 탈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는 지원에 앞서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군구에 이어 동단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동단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동단위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표Ⅷ-5〉 저소득대상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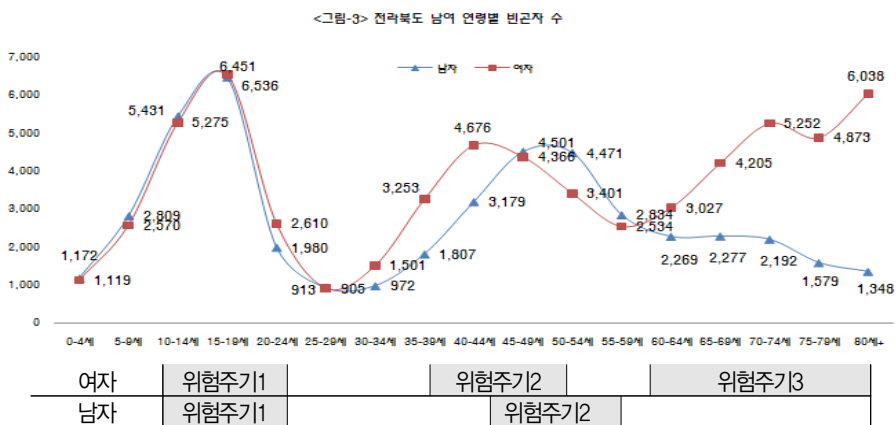
사업명	예산(천원)	사업량		예산(천원)	사업량
[일반]			[노인]		
생계급여	192,300,787	87,008명	기초연금	490,736,740	261,200명
주거급여	70,918,601	120,000명	무료경로식당	375,000	2,132명
교육급여	10,266,990	17,000명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540,000	2,000명
해산장제급여	1,528,824	2,500명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381,900	7,477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274,920	56,000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7,790,230	3,069명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5,141,000	200,000포	[장애인]		
간접복지 지원	6,099,000	6,800건	장애수당(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1,208,264	27,183명
자활장려금 지원	1,069,779	970명	장애인연금 지급	37,577,142	20,325명
자활근로사업	26,866,745	3,760명	장애인 의료비	2,332,000	7,260명
희망리본사업	660,600	720명	장애인자녀 교육비	17,600	42명
희망키움통장 I (기초수급자)	2,603,000	809명	장애인등록진단비	50,051	1,880명
희망키움통장 II (차상위)	2,439,480	1,029명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89,918	502명
한센인 피해자 생활금 지원	1,351,800	816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13,880	1187가구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330,726	8,114명	장애인가정 영양교육비 지원	30,600	170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67,796	1,025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9,914,285	2,050명
국가 감염진사업	994,450	319,642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10,000	120명
재가 한센인 생계비	78,528	48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5,880	70명
한센인 피해자 생활금 지원	1,351,800	816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821,459	315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지원)	6,726,982	2700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765,464	2,174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운영비	40,720	140,000명	언어발달 지원사업	130,978	68명
난임부부지원사업	1,725,220	2,286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112,128	146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42,070	3,767명	장애인 신문 보급	40,000	4,444부
노숙인시설 운영	2,094,733	3개소	[아동/청소년]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135,778	3개소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3,510,000	6,150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05,000	3개소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277,500	3,429명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9,440	1개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96,632	146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7,024	18개소	저소득한부모 가정생활자립지원	1,113,900	14,341명
전북광역푸드뱅크 운영지원	15,000	1개소	소년소녀가정지원	3,024	17명
기부식품뱅크마켓 운영지원	80,000	5개소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199,023	988명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126,000	9개소	아동발달지원계좌	966,054	4,360명
기부식품뱅크 장비구입	10,000	5개소	연중아동급식	125,195	196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무관리	2,200	1개소	방학중 아동급식	1,364,737	17,330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크숍	5,000	1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1,717,839	7,699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지도점검	7,200	1개소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3,589,575	12,595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310,329	1개소	청소년특별지원	72,500	14사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13,441,556	15,000명	영유아건강검진	81,009	2,530명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	87,000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180,000	12,000명
광역자활센터 운영	468,440	1개소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3,510,000	6,150명
자활생신품유통활성화 사업	30,000	1개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00,000	8개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68,000	515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2,100	1,460명
			영유아건강검진사업	81,009	2,530명

### 3. 성별·연령별·지역별 빈곤주기에 따른 빈곤정책 차별화

전라북도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면, 15-19세의 빈곤율이 11.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5세에서 49세까지의 장년기가 8.1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빈곤도 7.0%에 근접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로도 빈곤의 위험주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남자의 경우 아동기와 장년기가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아동기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청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등 총 3단계에 걸쳐 빈곤의 위험시기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정책도 전라북도의 이 같은 빈곤위험 주기에 대응하여 차별화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정책의 생애주기별 대응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시기 그리고 노동시장의 진입과 실업이 반복되는 30대와 40대의 청장년층 은퇴가 이루어져 소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청장년층이 위험한 시기로 분류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남성과는 달리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여성 빈곤가구에 대한 재취업 등의 탈빈곤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여성의 탈빈곤정책으로는 다른 일자리 연계보다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흡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전라북도는 높은 빈곤율로 인해 돌봄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돌봄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Ⅷ-2〉 성별연령별 위험주기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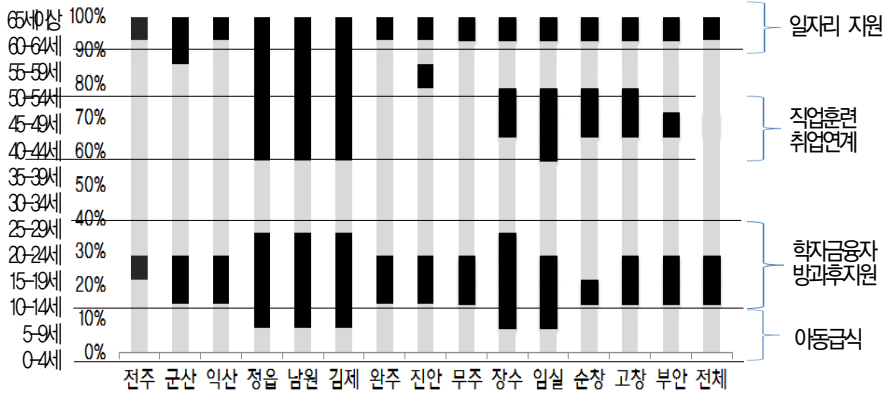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망사업을 선정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취득과정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약 67%가 30대와 40대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들의 직종별 일자리수요의 45%는 상담 및 복지서비스직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높은 복지수요를 여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수렴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자격증반 개설 및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

〈표Ⅷ-6〉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주요 사업별 자격요건

자격증	사업명
생활체육지도사	농촌마을 만들기, 노인맞춤형운동처방, 노후생활지원, 청소년재활승마
레크리에이션지도사	노후생활지원
요양보호사	농촌마을만들기
사회복지사	장애인비전형성/영유아발달지원/노후생활지원/장애인보조기기렌탈/청소년발달지원/노인정서지원/노인마음건강/아동청소년비전형성/쓰담쓰담마음건강/가족역량강화A/가족역량강화B/(광역)정신건강도탈케어
특수학교교사/재활, 언어치료사	장애인비전형성/영유아발달지원/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직업재활사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영유아발달지원/아동청소년비전형성/청소년발달지원/가족역량강화A/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전문상담교사	영유아발달지원/아동청소년비전형성/청소년발달지원/가족역량강화A/아동청소년심리지원
직업상담사	청소년발달지원/아동청소년비전형성
보육교사	영유아발달지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유아발달지원/쓰담쓰담마음건강/가족역량강화A/(광역)정신건강도탈케어/노인마음건강/가족역량강화B,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임상심리사	영유아발달지원/청소년발달지원/(광역)정신건강도탈케어/노인정서지원/쓰담쓰담마음건강/아동청소년심리지원/아동청소년비전형성/가족역량강화A/가족역량강화B/노인마음건강
임상영양사	암환자영양관리
평생교육사	청소년발달지원/아동청소년비전형/노후생활지원
심리상담관련 자격증	영유아발달지원/아동청소년심리지원(시장형)
영상/멀티미디어관련 자격증	실버미디어
국악관련 자격증	실버아트케어
보조공학사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아동리더십관련자격증	청소년발달지원/아동청소년비전형성
음악/미술/(통합)예술치료사	노인정서지원/실버아트케어/아동정서발달지원/청소년재활승마
영양사/보건교육사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승마경기지도사	청소년재활승마
문화예술교육사	아동정서발달지원
외국어지도관련 자격증	글로벌마인드형성
건강가정사	가족역량강화A      가족역량강화B
안마사	아이천사건강두드림

〈그림Ⅷ-3〉 지역별 빈곤위험연령 및 관련 빈곤정책 방향



다음으로 지역별로도 빈곤율의 양상이 매우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빈곤정책도 맞춤형으로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10세 이하 아동의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정읍, 남원, 김제, 그리고 장수와 임실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다른 정책보다도 아동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복지수요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급식비와 학업지원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15세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빈곤은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지만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의 지역이 이들 계층의 빈곤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가구총소득이 도시권역보다는 다소 낮다는 점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담이 매우 큰 도시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방과후 돌봄인프라가 취약해 돌봄수요에 대응한 복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지원이나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충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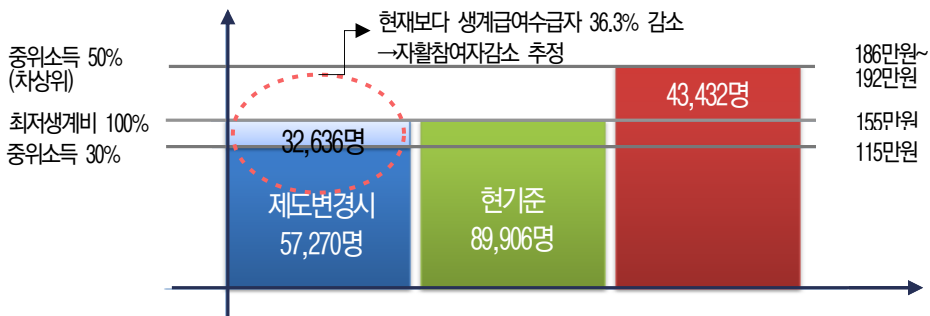
다음으로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장년층의 빈곤율은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무엇보다도 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복지수요는 높지만 복지인프라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한 협동조합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은 14개 시군의 특정지역의 현상이 아닌 모든 지역이 포괄적으로 해당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화보다는 보편적인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적합형 일자리개발이 필요하다.

#### 4. 자활전달체계 개편 및 자활기금 활성화

전라북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율은 2013년 기준 16.2%로 16개 시도 전체 탈수급율인 16.3%에 근접하고 있지만 16개 시도별 탈빈곤율 순위에서는 1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탈수급율이 낮은 이유는 국가의 제도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자활기업으로의 창업 및 자활참여자의 취창업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자활정책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의 자활정책도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빈곤계층의 탈수급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활전달체계의 핵심인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자활센터가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된 지역은 축소 혹은 광역화를 통한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전라북도 자활참여자는 현재 수준의 최소 1/3~1/2.5 감소가 예상되어 자활전달체계 개편은 시급한 과제이다. 전라북도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4,164명으로 이중 고용부의 취업패키지는 543명, 희망리본은 711명을 제외한 2,610명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용복지통합으로 인해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의 상당수가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자활참여자의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자활사업은 생계급여와 연동, 중위소득 30% 기준 생계급여 지원 시 현재 기초수급자 89,906명의 36.3% 감소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자활참여자가 100명도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Ⅷ-4〉 맞춤형 급여변동시 자활정책 변경 추정



〈표Ⅷ-7〉 전라북도 지역자활센터 조정방안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개수	3	2	2	1	1	1	1	1	1	1	1	1	1	1
방식	통합 특성화	통합	통합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전라북도의 지역자활센터는 기본원칙으로 시군 단위에 2개소 이상 설치된 지역의 경우 통합을 통한 규모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도 경과형 일자리 program과 취업연계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육성 프로그램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도 지역여건별로 세 가지 유형내에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는 통합을 통한 특성화를 추진하고 군산과 익산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지역자활센터는 영농사업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광역화하여 동일 사업단이나 자활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자활사업을 고용복지통합센터로 일원화하여 고용과 복지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고용복지통합센터는 익산, 정읍, 김제 등의 도시권역에 설치되어 2015년부터 고용과 복지가 통합된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건복지통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고용복지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진안, 무주, 장수 등의 군지역은 권역형으로 설치하되 거점기관 외 연계기관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자활사업을 권역형으로 통합하여 고용과 복지를 연계할 경우 일자리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복지자원도 한 개 시군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시군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셋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자활기금의 대여 및 상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최근 자활기금의 대여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대여이자도 연 2%에서 1%로 인하하였다. 하지만 자활기금 활용의 가장 큰 어려움인 연체이자는 현재 15%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1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표Ⅷ-8〉 자활기금 조례 전국 17 시도비교

구분	기금 용도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운영 주체
		대여한도	대여기간	대여 이자	연체이자	
세종	1. 자활공동체의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차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 자금대여 3. 자신행성지원	1억원				
	4.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대여 6.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 비용 7. 빈곤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의 비용	빈곤층 자활지원 2천만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기간 내 일시상환	연 1%	연 5%	시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정한 사업 2.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3. 자활사업 실기기관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4. 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 6.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1억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기간 내 일시상환	연 1%	연 12%	도지사
	1. 금융기관 대여자금 금리차액 보전 2. 사업자금 대여 3.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기관 육성 4. 자활기업 및 수급자의 채무 신용보증 소요비용 5. 자신행성지원사업 6. 빈곤층 복지증진 사업 7.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8. 자활사업 개발 연구비	1억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기간 내 일시상환	연 1%	연 15%	도지사
	1. 자활공동체의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 4. 자활기업 및 수급자의 채무 신용보증 소요비용 5. 빈곤층 복지증진 사업 6. 자활사업 개발 연구비	7천만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기간 내 일시상환	연 3%	연 12%	도지사
	1. 자활공동체의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차보전 2. 자신행성 3.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 비용 4. 자활기업 및 수급자의 채무 신용보증 소요비용 5. 빈곤층 본인 부담 보험료 6. 자활공동체 기능보강 및 임대료 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교육장 설치 운영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 사업 9.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1억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기간 내 일시상환	연 1%	통합관리 기금 관리금고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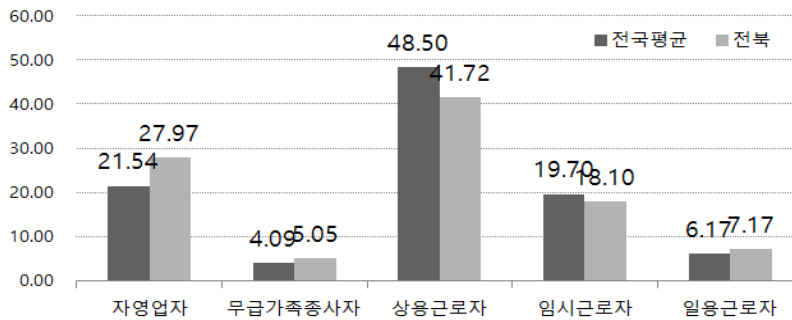
※ 자활기금 조례 없는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마지막으로 탈수급의 중요재원인 자활기금의 미진한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활기금의 일정비율의 의무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자활기금은 당초 탈수급지원이라고 하는 정책목표와는 반대로 상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기금사용이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의무적 사용한도를 설정, 자활기금이 탈빈곤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창업위주 탈빈곤정책 지양 및 사회서비스 연계형 일자리 확대

전라북도의 탈빈곤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창업위주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연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창업위주의 정책은 일반 시장과의 교란으로 인해 시장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일반 계층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Ⅷ-5〉 종사자지위별 현황 비교



〈표Ⅷ-9〉 종사자의 지위별 취업자 현황(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5384	5166	1661	1223	6252	674	771	1098	851	901	1374	1608	322
비임금근로자	6506	1134	412	318	1363	203	220	332	281	379	531	469	115
① 자영업자	5468	980	356	266	1189	165	181	275	238	284	418	382	92
-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559	355	115	76	388	42	40	72	40	32	71	93	22
-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3909	625	242	190	802	123	141	203	197	252	346	290	70
② 무급가족종사자	1038	154	55	52	174	38	39	57	43	95	113	87	23
임금근로자	18878	4032	1250	905	4889	471	551	766	570	522	844	1139	207
① 상용근로자	12310	2495	760	559	3285	310	353	564	355	312	572	821	104
② 임시근로자	5001	1135	385	266	1240	124	152	139	154	165	211	251	69
③ 일용근로자	1567	403	105	79	364	37	46	64	61	45	61	67	3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임금근로자	25.63	21.95	24.80	26.00	21.80	30.12	28.53	30.24	33.02	42.06	38.65	29.17	35.71
① 자영업자	21.54	18.97	21.43	21.75	19.02	24.48	23.48	25.05	27.97	31.52	30.42	23.76	28.57
-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6.14	6.87	6.92	6.21	6.21	6.23	5.19	6.56	4.70	3.55	5.17	5.78	6.83
-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5.40	12.10	14.57	15.54	12.83	18.25	18.29	18.49	23.15	27.97	25.18	18.03	21.74
② 무급가족종사자	4.09	2.98	3.31	4.25	2.78	5.64	5.06	5.19	5.05	10.54	8.22	5.41	7.14
임금근로자	74.37	78.05	75.26	74.00	78.20	69.88	71.47	69.76	66.98	57.94	61.43	70.83	64.29
① 상용근로자	48.50	48.30	45.76	45.71	52.54	45.99	45.78	51.37	41.72	34.63	41.63	51.06	32.30
② 임시근로자	19.70	21.97	23.18	21.75	19.83	18.40	19.71	12.66	18.10	18.31	15.36	15.61	21.43
③ 일용근로자	6.17	7.80	6.32	6.46	5.82	5.49	5.97	5.83	7.17	4.99	4.44	4.17	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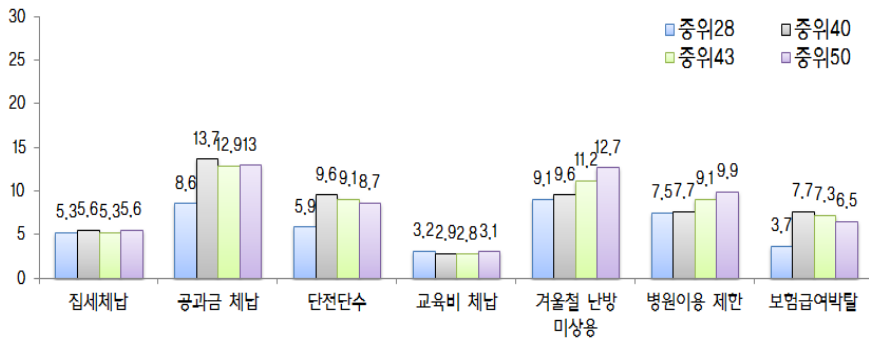
실제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27.97%로 전국 평균인 21.54%보다도 6.4%p 높다. 결국, 전라북도는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로 인해 빈곤계층 대상 창업정책이 일반시장과의 교란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 빈곤계층의 탈수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빈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탈빈곤정책은 창업위주의 정책을 억제하고 높은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취업연계형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탈빈곤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창업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그 실적 평가를 기초로 관련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의 일부를 빈곤계층의 직업훈련 예산으로 전환하여 복지수요에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훈련 예산으로 활용하여 빈곤계층의 취업을 통한 탈빈곤으로 유인해야 한다.

## 6. 긴급복지지원조례의 제정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전라북도의 긴급복지가 필요한 빈곤가구는 최소 3.1%에서 최대 13.7%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는 주로 경제적인 빈곤을 이유로 집세나 공과금을 미납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급여가 박탈된 경험을 가진 빈곤가구로 분류된다. 이 같은 빈곤가구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관련법의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빈곤가구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림Ⅷ-6〉 긴급복지지원가구 추정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위기상황 이외의 경우 반드시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역상황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의 긴급복지지원은 국가가 정한 법률의 범주 내에서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도민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긴급복지지원조례의 제정을 통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위임한 위기상황의 범주를 전라북도의 빈곤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의 긴급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Ⅷ-10〉 긴급복지지원조례 제정시 위기상황 추가(안)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조례 위기상황 추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진한 경우</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지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li> <li>• 수도, 가스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li> <li>•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li> <li>• 그 밖에 제1호부터 5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수,단가스,단전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월임차료 중 3개 항목을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신규 신청자가 동일 사유로 부적합 결정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li> <li>•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만 24개월) 양육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한 경우</li> <li>• 가구구성원이 근로무능력자(1-3급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로만 구성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li> <li>•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가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li> <li>•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재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li> <li>•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li> <li>• 부모 등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li> <li>•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li> </ul>



# 제9장

## 결론 및 요약





## IX. 결론 및 요약

전라북도의 법정빈곤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높은 빈곤율로 인해 복지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법정빈곤율을 4%를 상회하고 있고,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20%에 근접하고 있다. 국가의 복지시책이 대부분 빈곤선을 기준으로 급여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복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빈곤정책의 중요한 기준선인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으로 측정되는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의 중위소득으로 대체되면서 빈곤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최저생계비 중심의 빈곤계층의 욕구를 중위소득의 4단계로 세분화된 빈곤계층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빈곤정책의 대부분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대부분이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빈곤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빈곤선의 변화에 따른 중위소득 구간별로 빈곤계층은 어떤 복지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라북도 빈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빈곤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빈곤정책의 동향에 발맞춰 전라북도 빈곤인구의 현황 및 빈곤계층의 양상을 16개 시도와 비교분석하여 전라북도의 빈곤이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준과는 달리 중위소득의 4가지 구간별로 빈곤계층의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각 층위별로 빈곤계층이 가지고 있는 복지욕구를 비교하였다. 또한 빈곤정책의 중요한 범주인 전라북도의 빈곤율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추정하여 우리지역의 빈곤인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 중 복지급여에서 누락된 복지사각지대는 또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을 추출하여 대상과 예산을 분석하여 빈곤선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전라북도 빈곤계층의 빈곤화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빈곤의 시기가 상이했다. 전라북도의 빈곤위험시기는 주로 아동기(9세~15세)와 청장년기(35세~50세), 노년기(65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간에도 빈곤의 경향은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아동기와 장년기에 높은 빈곤율을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아동기와 청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의 높은 빈곤은 주로 부모세대인 청장년기의 높은 빈곤율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계층의 복지욕구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빈곤 영유아의 경우 여가와 문화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주로 교통과 이동상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청소년의 경우 학습에 대한 복지수요가 높았고, 특히 빈곤 아동의 경우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른 복지서비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빈곤 청장년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빈곤 노인은 건강과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의 빈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빈곤정책을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게 유형화하고 각 생애주기별 빈곤계층의 욕구에 대응한 빈곤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빈곤선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빈곤선 변화에 따라 영유아 빈곤가구는 빈곤 영유아의 10.2%, 초등빈곤가구는 12.9%, 중고등 빈곤가구는 14.6%, 장애인빈곤가구 14.8%, 노인빈곤가구 39.7%, 일반가구 17.7%로 추정되었다. 이들 가구의 경우 시군구를 뛰어넘어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사각지대의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몇 개시군을 대상으로 시군구-동 사회보장협의체의 선진적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별·연령별·지역별 빈곤주기에 따른 빈곤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아동빈곤율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세대의 탈빈곤 확대를 위해 청장년층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직업훈련의 분야로는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자활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자활전달체계가 개편되

어야 한다. 자활참여자의 감소와 고용복지통합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정책 동향에 대응하여 1개 시군에 2개 이상 설치된 지역자활센터는 광역화와 통합화를 추진하고 군단위 지역자활센터는 권역형 고용복지통합센터의 설치를 통해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창업위주의 탈빈곤정책을 지양하고 취업중심의 탈빈곤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은 창업위주의 탈빈곤으로 인해 심각한 시장교란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시장교란은 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의 빈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빈곤가구의 고용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중심의 탈빈곤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한 위기가정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긴급복지지원 관련법 내에서 제한된 위기상황에 노출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범위가 설정되고 있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의 빈곤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상황의 제시를 통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정책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기준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무국내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규사업 개발 시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메뉴얼처럼 전라북도의 경우 다양한 실국 혹은 실과가 연결되어 있는 빈곤정책의 경우도 사업의 논의와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반드시 참여하여 빈곤정책의 목적, 대상, 재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 강성진 외(2010)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하 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변동추이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김종숙(2006)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한국여성개발원
- 류정희(201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 외(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설명회. 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 보건복지부(2004~20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각 연도
- 송다영 외(2007) 서울시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정책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이채정(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이태진 외(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석진(2011)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통계청(2014) 가계조사연보 각 연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빈곤통계연보





*Jthink* 2015-PR-09

전라북도 저소득 빈곤가구  
복지수요분석 및 빈곤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발행인 | 강현직

발행일 | 2015년 12월 1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138-0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